



DAPA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새로운 출발, 방위사업청 1년의 성과와 다짐





새로운 출발, 방위사업청 1년의 성과와 다짐

발간사



국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방위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 및 전문성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우리 방위사업청이 출범한지 1주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한 해 국민들의 관심과 격려에 보답하고자 방위사업청 개청 이후 1년간의 성과를 집대성한 개청 성과모음집을 이렇게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개청 초기 업무인수, 인력충원, 각종 규정·절차 및 제도 정립 등 새로운 국방획득시스템을 조기에 정착시키면서 방대한 방위력 개선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해야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주국방 건설이라는 신성한 사명을 완수하고, 국민의 성원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전 직원이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각종 제도 및 시스템 개선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등 오랜 숙원이었던 국방획득제도 개선의 확고한 기반을 다진 소중한 한 해였습니다.

사람의 인생에 비유하면 방위사업청은 이제 걸음마를 막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모의 보살핌과 스승의 지도가 필요하듯이 방위사업청은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보여주신 많은 관심과 격려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올 한해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보다 나은 방위사업청을 만들어 나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7. 4.

방위사업청장 이 선 희

A handwritten signature in black ink, appearing to read '이선희' (Lee Sun-hee), written in a cursive style.

CONTENTS

목 차

미션·비전·전략목표

▶ 미션 및 비전	18
▶ 방위사업청 미션(Mission), 비전(Vision)의 의미	18
▶ 전략목표	19
• 관점별 전략목표	19
• 전략적 방향별 전략목표	20
• 전략시나리오	20

제1편 총론

제1장 방위사업청 개청 의의 22

1. 추진 배경	22
2. 방위사업청 신설	23
3. 추진실적	24

제2장 개청 후 개선 내용 27

1. 투명성 강화는 방위사업청 출범의 근간	27
가. 방위사업추진위원회	27
나. 청렴서약제	28
다. 옴부즈만 제도	29
라. 자발적 클리닉 감사제도	29
마. 투명성평가위원회	29
바. 정보공개확대	30
사. 국방획득사업 법령체계 정비	30
2. 분산된 조직의 통·폐합을 통한 효율적인 사업관리 제고	30

CONTENTS

가. 조직의 슬림화를 통한 효율적인 사업관리	31
나. 사업추진방법 결정체계 개선	31
다. 국방과학기술 관리조직 통합	32
라. 국방획득절차의 과학화	32
마. 무기체계 국산화 촉진	34
바. 방위사업에 대한 사전 법률검토제 실시	34
3. 전문성 향상을 통해 책임있는 사업관리 지향	35
가. 보직자격제도 구축	35
나. 인사·교육 로드맵 작성 추진	35
다. 전문인력 양성·활용 확대	35
라. 인사관리체계 개선	36
4. 국방 연구개발 및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	36
가. 국방연구개발	37
나. 민군겸용기술	37
다. 방위산업 전문화 및 계열화 제도 폐지	38
라. 방산수출 활성화	39
마. 방산원가 및 계약제도 개선	39

제2편 방위사업추진의 투명성 강화

제1장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운영	44
1. 개요	44
2. 기본방향	45
3. 주요 개선사항 및 추진실적	45
가. 심의의 간소화·투명화·전문화	45
나. 타 부처 및 민간위원 참여	46

다.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 실적	46
4. 향후 정책 추진방향	48
제2장 투명성 강화	48
1. 개 요	48
2. 기본방향	48
3. 주요 개선사항 및 추진실적	49
가. 정책실명제 실시	49
나. 청렴서약제 시행	50
다. 옴부즈만 제도 도입	50
라. 투명성 평가위원회 운영	51
마. 비리 제로화 운동 전개	52
바. 비리 예방활동 강화	53
사. 상시모니터링 제도 시행	54
4. 향후 정책추진 방향	55
제3장 자발적 클리닉 감사제도 도입	55
1. 개 요	55
2. 기본방향	56
3. 주요개선사항 및 추진실적	56
4. 향후 정책추진 방향	58
제4장 정보공개 확대	60
1. 개 요	60
2. 기본방향	60
3. 주요 개선사항 및 추진실적	60
가. 정보 공개·비공개 세부 기준 정립	60

CONTENTS

나.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61
다. 정보공개 접근성 제고	62
라. 정책홍보차원의 다각적인 정보공개 활동	62
4. 향후 정책 추진방향	63

제3편 방위사업추진의 효율성 증대

제1장 사업관리 효율성 증대	66
1. 효율적인 사업관리	66
가. 개요	66
나. 기본방향	66
다. 주요 개선사항 및 추진실적	66
라. 향후 정책 추진방향	73
2. 종합군수지원(ILS) 업무체계 강화	73
가. 개요	73
나. 기본방향	74
다. 주요 개선사항 및 추진실적	75
라. 향후 정책 추진방향	78
제2장 고객중심의 조달행정서비스 체계구축	80
1. 방위사업청/조달청간 업무협정체결	80
가. 개요	80
나. 기본방향	80
다. 주요 개선사항 및 추진실적	80
라. 향후 정책 추진방향	81
2. 목록업무 절차 개선	82

가. 개 요	82
나. 기본방향	83
다. 주요 개선사항 및 추진실적	84
라. 향후 추진방향	87
3. 한도액계약 방법 개선	88
가. 개 요	88
나. 기본방향	88
다. 주요 개선사항 및 추진실적	89
라. 향후 정책 추진방향	90
4. 국방분야 한국산업규격(KS) 제·개정 참여제도 마련	90
가. 개 요	90
나. 기본방향	90
다. 주요 개선사항 및 추진실적	91
라. 향후 정책 추진방향	91
5. 국외도입부품 전자입찰 추진	92
가. 개 요	92
나. 기본방향	92
다. 추진성과	93
라. 향후 정책 추진방향	93
6. 기 타	94
가. 종합민원상담실 환경 개선	94
나. 조달관련 제도개선	94

제3장 정보체계 활용성 제고 **95**

1. 개 요	95
2. 기본방향	96
3. 주요 개선사항 및 추진실적	97

CONTENTS

가. 청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97
나. 정부 개혁과제 추진	99
다. 고객중심의 정보 서비스	99
라. 행정업무 지원 정보서비스	100
마. 정보 기반체계 확충	101
바. 정보화 교육 및 제도 정비	102
4. 향후 정책추진 방향	103
제4장 분석평가 강화	105
1. 개 요	105
2. 기본방향	105
3. 주요 개선사항 및 추진실적	106
가. 분석평가 기관별 임무 명확화	106
나. 획득단계 분석평가 강화	106
다.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 강화	107
라. 분석평가 수행체계 개선	108
마. 교육훈련 강화, 기법 및 Tool 도입, 세미나 개최 추진	108
4. 향후 정책추진 방향	109
제5장 EVMS/CAIV 체계 구축	109
1. 개 요	109
2. EVMS/CAIV개념 소개	110
가. EVMS	110
나. CAIV	112
3. 주요개선사항 및 추진실적	114
가. EVMS 체계구축	115
나. CAIV 체계구축	117

4. 향후 정책 추진방향	118
---------------	-----

제6장 사전 법률 검토제도 시행 **118**

1. 개요	118
2. 기본방향	118
3. 주요개선사항 및 추진실적	119
4. 향후 정책 추진방향	119

제4편 방위사업추진의 전문성 제고

제1장 인력구조 개선 **123**

1. 개요	123
2. 기본방향	123
3. 주요 개선사항 및 추진실적	124
4. 향후 정책 추진방향	125

제2장 획득전문인력 교육체계 정립 **125**

1. 개요	125
2. 기본방향	126
3. 주요 개선사항 및 추진실적	127
4. 향후 정책 추진방향	129

제3장 보직관리제도 **132**

1. 개요	132
2. 기본방향	133
3. 주요 개선사항 및 추진실적	135
4. 향후 정책 추진방향	136

CONTENTS

제4장 인사관리 로드맵 수립	137
1. 개 요	137
2. 기본방향	137
3. 주요 개선사항 및 추진실적	138
4. 향후 정책수립 방향	141

제5편 국방연구개발 및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

제1장 국방연구개발 경쟁력 강화	143
1. 국방과학연구소 역할 재정립	143
가. 개 요	143
나. 기본방향	145
다. 주요 개선사항 및 추진실적	146
라. 향후 정책 추진방향	146
2. 국방과학기술정보 통합관리체계 구축	147
가. 개 요	147
나. 기본방향	149
다. 주요 개선사항 및 추진실적	150
라. 향후 정책 추진방향	151
3. 무기체계 내장형S/W 획득 및 관리	152
가. 개 요	152
나. 기본방향	153
다. 주요 개선사항 및 추진실적	154
라. 향후 정책 추진방향	156
4. 모의기반 획득제도(SBA) 추진	158
가. 개 요	158

나. 기본방향	161
다. 주요 개선사항 및 추진실적	161
라. 향후 정책 추진방향	162
5. 무기체계간 상호운용성 증진	165
가. 개 요	165
나. 기본방향	167
다. 주요 개선사항 및 추진실적	167
라. 향후 정책 추진방향	168
6. 품질보증 및 부품국산화제도 개선	170
가. 개 요	170
나. 기본방향	171
다. 주요 개선사항 및 추진실적	172
라. 향후 정책 추진방향	175
7. 국방연구개발 기획문서체계 개선	177
가. 개 요	177
나. 기본방향	178
다. 주요 개선사항 및 추진실적	178
라. 향후 정책 추진방향	180

제2장 방산원가 및 계약제도 개선 **180**

1. 개 요	180
2. 기본방향	181
3. 주요 개선사항 및 추진실적	181
가. 광고선전비 원가 인정	181
나. 수출물량에 대한 고정비 보전	182
다. 중소방산업체 일반관리비 상한 2% 상향 조정	182
라. 퇴직급여 한도 개선	182

CONTENTS

마. 방산원가 전산자료 활용 및 증빙 절차 간소화	183
바. 방산전용시설 확인절차 개선	183
사. 이윤제도 개선	183
아. 중도확정계약 정산시점 명시	185
자. 원가절감보상계약 인정범위 확대	186
차. 방위산업 착수금 사용시점 명시	186
4. 향후 정책 추진방향	186
가. 방산원가제도	186
나. 방산이윤제도	187
다. 방산계약제도	188

제3장 방산협력 기반 및 수출지원체계 구축 189

1. 방위산업기반 고도화 추진	189
가. 개 요	189
나. 기본방향	190
다. 주요 개선사항 및 추진실적	191
라. 향후 정책 추진방향	192
2. 방산업체와의 파트너십 제고	193
가. 개 요	193
나. 기본방향	194
다. 주요개선사항 및 추진실적	194
라. 향후 추진방향	197
3. 방산수출시장 개척 활동 및 국내 방산전시회 통합	197
가. 개 요	197
나. 기본방향	198
다. 주요 개선사항 및 추진실적	198
라. 향후 정책 추진방향	200

4. 정부간 방산협력 활동 강화	200
가. 개 요	201
나. 기본방향	202
다. 주요 개선사항 및 추진실적	203
라. 향후 정책 추진방향	203
5. 방산수출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센터 설치	203
가. 개 요	203
나. 기본방향	205
다. 주요 개선사항 및 추진실적	205
라. 향후 정책 추진방향	207



CONTENTS **그림 목차**

〈 그림 1-1-1 〉 방위사업청 조직구성도	25
〈 그림 2-1-1 〉 종전 심의단계	44
〈 그림 2-1-2 〉 개선후 심의단계	46
〈 그림 2-2-1 〉 방위사업청 청렴서약식 / 2006. 5. 11	49
〈 그림 2-2-2 〉 음부즈만 사무소 개소 / 2006. 7. 12	51
〈 그림 2-2-3 〉 투명성평가위원회 회의 장면 / 2006.8.30	52
〈 그림 2-2-4 〉 비리 근절 대토론회 개최 / 2006.12.27	53
〈 그림 2-4-1 〉 제1회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 2006.6.29	61
〈 그림 2-4-2 〉 행정정보공개방 인터넷 홈페이지	62
〈 그림 3-1-1 〉 기존의 획득사업 업무수행 절차	68
〈 그림 3-1-2 〉 통합사업팀(IPT) 도입후 업무수행절차	69
〈 그림 3-1-3 〉 선행연구절차	70
〈 그림 3-1-4 〉 RAM-LSA-CSP 컨베이어 벨트체계	75
〈 그림 3-1-5 〉 2006년 중합군수지원개발 세미나	77
〈 그림 3-1-6 〉 ILS개발/분석자료 통합관리 체계도	79
〈 그림 3-1-7 〉 DB제원 환류	79
〈 그림 3-2-1 〉 조달청-방위사업청 업무협정체결	80
〈 그림 3-2-2 〉 개선전 목록업무 처리절차	83
〈 그림 3-2-3 〉 개선후 목록업무 처리절차	84
〈 그림 3-2-4 〉 실시간 진도 확인 프로그램	85
〈 그림 3-2-5 〉 ON-LINE 자동접수 절차	86
〈 그림 3-2-6 〉 국외조달 전자입찰	93
〈 그림 3-2-7 〉 방위사업청 종합민원상담실 환경개선	94
〈 그림 3-2-8 〉 행정서비스현장	95
〈 그림 3-3-1 〉 청 정보화의 기본방향	96
〈 그림 3-3-2 〉 정보화 기본계획	98
〈 그림 3-3-3 〉 청 정보화 발전단계	103

〈그림 3-3-4〉	청 정보화 목표체계도	104
〈그림 3-4-1〉	획득단계 분석평가 강화	107
〈그림 3-5-1〉	EVMS의 정의	111
〈그림 3-5-2〉	전통적인 기법	112
〈그림 3-5-3〉	EVMS 기법	112
〈그림 3-5-4〉	PRICE 모델의 비용추정 과정	113
〈그림 3-5-5〉	KHP의 EVMS 적용 절차	116
〈그림 3-5-6〉	CAV 적용 절차	117
〈그림 4-1-1〉	교육·훈련 체계 전략 Map	128
〈그림 4-1-2〉	방위사업청 교육훈련 체계도	129
〈그림 4-1-3〉	중·장기 교육체계 발전 로드맵	130
〈그림 4-4-1〉	인사관리 로드맵 수립의 필요성	138
〈그림 5-1-1〉	ADD주관 체계개발사업의 역할분담 체계	145
〈그림 5-1-2〉	국방과학기술정보통합관리체계 구축 방향	149
〈그림 5-1-3〉	NTIS와 DTIMS의 연계	150
〈그림 5-1-4〉	기술발전, 전장운용개념, 예산압박 등에 대한 적응성 요구	159
〈그림 5-1-5〉	상호운용성 프로파일 (예)	166
〈그림 5-1-6〉	국방표준 등록 절차	169
〈그림 5-1-7〉	국방연구개발기획서 작성 체계	179
〈그림 5-1-8〉	국방연구개발 기획체계 정립	179
〈그림 5-3-1〉	방산기반조사 및 활용체계	192
〈그림 5-3-2〉	방산정책 토론회 / 2006.12.20	196
〈그림 5-3-3〉	방산협력활동	199
〈그림 5-3-4〉	방산군수협력 현황	202
〈그림 5-3-5〉	방산 수출네트워크 개념도	206

CONTENTS 표 목차

〈 표 1-1-1 〉 통합대상조직	26
〈 표 1-1-2 〉 방위력개선분야 중기계획 작성 예	26
〈 표 2-1-1 〉 심의의 간소화 · 투명화 · 전문화	45
〈 표 2-1-2 〉 2006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안건	47
〈 표 2-1-3 〉 2006년 분과위원회 안건	47
〈 표 2-2-1 〉 2006년 정책 실명제 추진 실적	50
〈 표 2-2-2 〉 2006년 자체 감사 처분 결과	54
〈 표 2-2-3 〉 2006년 상시모니터링 실적 / 2006. 1. 9 ~ 12. 31	54
〈 표 3-1-1 〉 사업예산 집행실적	69
〈 표 3-1-2 〉 2006년 선행연구 주요추진실적	70
〈 표 3-1-3 〉 무기체계 전력화 실적	71
〈 표 3-1-4 〉 ROC 보완 및 형상변경 관리	71
〈 표 3-1-5 〉 ROC 보완 및 형상변경 내용	72
〈 표 3-1-6 〉 2006년도 사업예산 절감실적	72
〈 표 3-1-7 〉 2006년 ILS 추진실적	76
〈 표 3-2-1 〉 개청이전 3년간 목록화 처리현황	82
〈 표 3-3-1 〉 2006년 정보시스템 개발/지원 실적	101
〈 표 3-3-2 〉 기반체계 운영현황	101
〈 표 3-3-3 〉 2006년도 기반체계 주요 추진업무	102
〈 표 3-4-1 〉 분석평가 실적	107
〈 표 3-4-2 〉 2006년 연구용역실시 건수	107
〈 표 4-1-1 〉 2006년 국내 · 외 직무교육과정 이수현황	128
〈 표 4-1-2 〉 연도별 과정개발 계획	130
〈 표 4-1-3 〉 교육기관별 전문교육과정 운영계획	131
〈 표 4-4-1 〉 주요국 방산 인력 현황	138
〈 표 4-4-2 〉 정원 중 · 장기 로드맵	139
〈 표 5-1-1 〉 2006년도 국방과학연구소 수행 업무 현황	144

〈 표 5-1-2 〉	업체주도 확대 및 ADD 역할조정정책 시행 실태 (1994-2001)	145
〈 표 5-1-3 〉	일반무기분야 업체주관 비율	145
〈 표 5-1-4 〉	국과연과 업체간 사업영역 재정립	146
〈 표 5-1-5 〉	무기체계 내장형 소프트웨어 비중	153
〈 표 5-1-6 〉	국방연구개발분야 기획문서 체계 작성 경과	177
〈 표 5-2-1 〉	이윤제도 주요개선사항	185
〈 표 5-3-1 〉	전문화·계열화 업체 지정 현황	191
〈 표 5-3-2 〉	방산전시회 현황	199
〈 표 5-3-3 〉	국제 방산전시회 일정	200
〈 표 5-3-4 〉	방산수출시장개척 활동계획	200
〈 표 5-3-5 〉	2006년 방산군수협력	202
〈 표 5-3-6 〉	방산수출 지원조직 구성 및 소요인력(案)	207



방위사업청 미션·비전 및 전략목표

● 미션 및 비전

방위사업청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MISSION
고객중심의 방위사업 추진으로 국가이익에 기여하자

VISION
2010년까지 투명성, 전문성, 효율성, 경쟁력을 2배로 높이자

투명성
효율성
전문성
경쟁력

DAPA

● 방위사업청 미션(Mission), 비전(vision)의 의미

고객중심의 방위사업 추진으로 국가이익에 기여하자

고객만족

방위력개선 군수품조달 방위산업육성

방위사업청의 임무는 방위사업청의 존재이유, 사명 및 나아갈 방향을 제시 하는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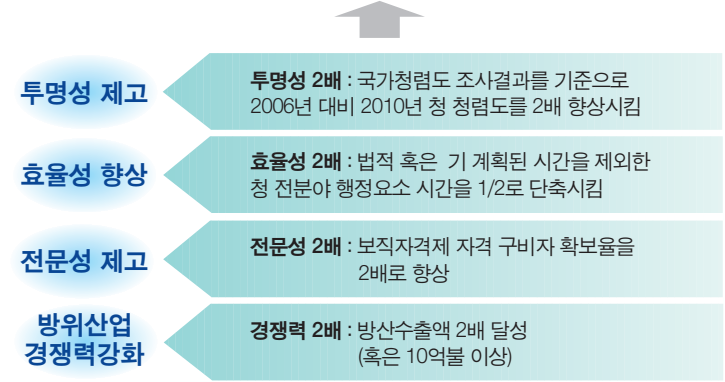
고객중심 - 고객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객의 눈높이로 업무를 수행한다는 의미

- 청 고객 : 일반 국민, 소요군, 방산업체 등

국가이익 - 국가가 어떠한 안보환경하에서도 지향해야 할 가치로서

- 내용상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추구하는 국가목표와 동일한 개념임
- (1) 국가안전보장 (2)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신장 (3) 경제발전과 복리증진
- (4)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 (5)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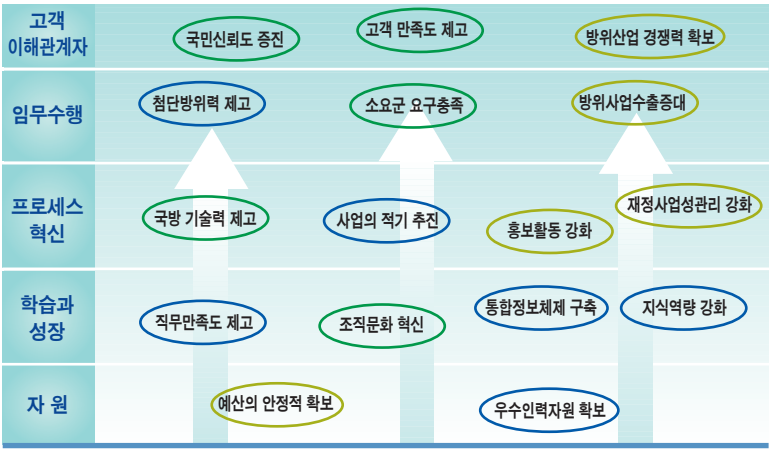
**2010년까지
투명성, 효율성, 전문성, 경쟁력을 2배로 높이자**



● 전략목표

5개 관점 및 4개 전략적 방향별로 16개 전략목표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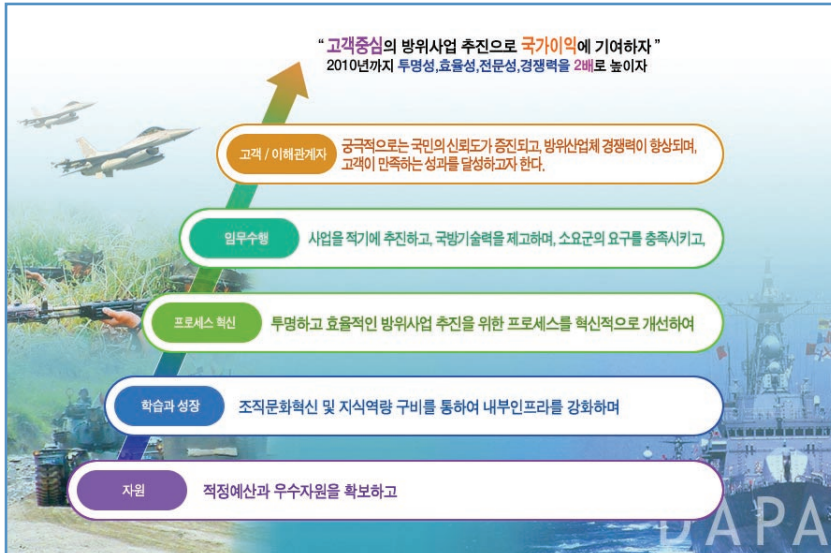
• 관점별 전략목표



• 전략적 방향별 전략목표

전략적 방향	전략목표	
투명성제고	고객만족도 제고	국민 신뢰도 증진
효율성향상	사업의 적기 추진 조직문화 혁신 통합정보체계 구축 예산의 안정적 확보	홍보활동 강화 재정사업 성과관리 강화 직무만족도 제고
전문성제고	소요군 요구 충족 우수 인적자원 확보	지식역량 강화
방위산업 경쟁력강화	첨단 방위력 제고 방위산업 수출 증대	방위산업 경쟁력 확보 국방기술력 제고

• 전략시나리오





제1편 총론

제1장 방위사업청 개청 의의	22
제2장 개청 후 개선 내용	27



제1편

제 1 편 총 론

제1장 방위사업청 개청 의의

1. 추진 배경

지금까지 국방 획득업무는 군의 무기체계 소요에 부응하는 국방부(군) 내부의 일로 간주되어 왔으나,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의 포괄적·역동적 변화로 협력적 자주국방체제 확립이 절실한 현실이다.

또한 현대의 국가안보는 “경제, 사회, 문화, 과학기술 등”을 포괄한 국가 전 역량이 결집된 개념으로 확대되었으며, 국방획득업무는 협력적 자주국방 확립의 주요수단으로서 국가와 국민의 생존권 확보를 위한 국가의 핵심적 정책요소라는 인식전환이 필요하였으며, 이를 위해 국방부(군)·정부·민간 부문의 총체적 협력체제 구축이 요구되었다.

그러나, 국방획득 분야는 과거 수차례의 국방부 자체 개혁이 있었음에도 조직·의사 결정시스템 전반에 많은 문제가 지속되어 참여정부 출범 후에도 획득관련 비리로 처벌받은 공직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대통령께서는 군납비리 관련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지 대안을 검토하고 제도적인 개선책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2003.12.23(화) 국무회의시)과 획득업무 시스템의 보편성 확대를 위해 관련부처 합동 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2004.1.27(화) NSC회의시)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총체적 점검을 위해 민·관 합동위원회를 구

성, Zero- Base에서 근본적· 전면적인 개혁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2. 방위사업청 신설

2004. 3. 5. 국무총리 산하에 국방획득제도개선위원회¹⁾ 구성 및 이를 지원하기 위해 2004. 3. 22. 실무추진팀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2005년 1월까지 7차례의 위원회를 개최하면서 획득관련 조직 전면 재편 및 인력 운영개선 등 획득업무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2004. 8. 31. 당·정·청 협의회시 참석인원²⁾ 전원이 획득제도의 획기적 개혁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이를 위해 “신설청” 설립 취지에 적극 찬성하였으며, 2004. 9. 9. 국무총리 주재 관계부처 장관회의시 “신설청” 설립에 합의하였다.

그 후 2차례(2004. 9. 17 / 12. 7) 공청회를 개최하여 “신설청” 설치 및 주요 국방획득 개혁(안)에 대한 의견 수렴결과 “청” 신설 등 제도개선(안)에 대체로 공감하였으나, 전문화·계열화제도 폐지에 대해서는 이해 당사자간 의견이 상충(전문화·계열화 지정업체:제도 유지, 전문화·계열화 미지정업체:제도 폐지)되는 경향이 있었다.

2005. 1. 10. 위원회 산하 현안조정소위원회를 개최하여 6개의 쟁점사항³⁾을 조정하였으며, 2005. 1. 10.부터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산하 행

-
- 1) 위원장(국무조정실장), 위원 15명(차관급 정부위원 9, 민간위원 6)
 - 2) 정책위 의장 등 총 7명
 - 3) ①전력투자 중기계획·예산편성 주체, ②전문화·계열화제도 폐지여부, ③“신설청” 조직설계 방안, ④ 군 획득인력 인사관리 방안, ⑤ 군무원·연구원 신분전환 문제, ⑥ 획득관련 법령체계

정개혁전문위원회에서 국방획득제도개혁방안에 대한 진단을 실시한 결과도 분산된 조직을 통·폐합하여 “신설청” 설립 당위성과 제도개선방향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의 논의 결과를 종합하여 2005. 1. 19. 대통령님께 방위사업청 개청을 주요 사항으로 포함하는 국방획득제도 개선방안에 대하여 보고를 하고, 본격적으로 방위사업청 개청작업에 착수하였다.

1년여의 개청 준비작업을 통하여 2006년 1월 1일 무기체계 획득업무 중 소요제기·결정 이후의 모든 업무(계획, 예산, 집행, 평가 관련기능) 수행부서, 무기체계와 연계된 시설사업 수행부서, 정보화사업 중 전장관리 체계사업 수행부서를 통합하고, 소요기획 부문을 제외한 획득관련 전체 인력을 통합하여 획득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국방부 소속 외청인 방위사업청이 신설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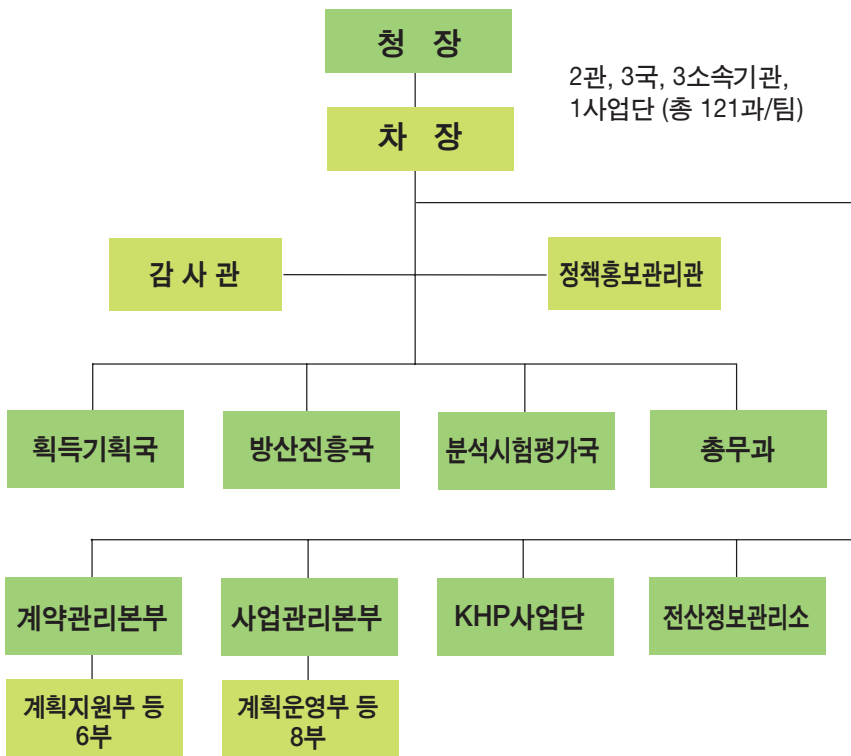
현 획득관련 조직을 통·폐합하여 정부조직에 편입(국방부 외청 신설)하고, 현 획득관련 정원 및 직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하며, 주요 정책결정은 민(전문성, 객관성 확보), 사업관리는 군(전문성, 무기체계 운용경험 활용) 위주로 수행하되, 직급별 민·군 균형보직 원칙으로 조직을 재편하였으며, 정책·기획, 행정지원, 사업지원 등 유사기능 통합을 통해 조직을 슬림화하였고, 방산육성·수출지원, 기술관리, 상시감시 등 필수기능을 보강하였다.

3. 추진실적

과거 8개기관에 분산된 기능조직이 1개기관으로 통합·단순화되어 2관, 3국, 3소속기관, 1사업단으로 편성되고 12.5%(2537명→ 2220명)의

인력이 감축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건비 절감, 사업기간 단축, 전력화 소요조정, ROC/형상변경 등으로 전력투자비의 약 5%(3,000여억 원) 수준의 예산절감이 이루어졌다.

또한, 방위력개선분야 중기계획 작성, 예산편성·집행, 연구개발 및 국외도입 등의 절차도 간소화되었다.



※ 출연기관 :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 그림 1-1-1 방위사업청 조직구성도 〉

구 분	과거 조직(통합대상조직)	통 · 폐합	
획득정책	국방부(획득정책관실, 연구개발관실, 정보화기획관실)	심의안건	방 위 사 업 청
계획·예산	국방부(획득정책관실), 각군 기획관리참모부(전력계획처) 등		
사업관리	국방부(획득정책관실, 연구개발관실, 정보화기획관실), 각군(전개단, 조함단, 향사단, C4I사업부서), KMH사업	사업관리	
계약관리	조달본부(4개 사업부), 각군(경리단)	계 약	
규격·목록	조달본부(규격실, 목록실), 각군(군수사), 국방품질관리소(기술정보실)		
분석평가	국방부(분석평가관실), 각군(비용분석 부서)	평 가	
시험평가	합동참모본부(시험평가과)		
품질보증	국방품질관리소(검사부서)	품질관리	
기술관리	국방과학연구소(기술부), 국방품질관리소(기술부서)	국방기술정보센터	

〈 표 1-1-1 통합대상조직 〉

구 분	과 거	현행(개선)
보고안건	7회 개최 필요 [각군 2회, 국방부 4회, NSC 1회]	3회로 감소 [“방위사업청” 2회, NSC 1회]
심의안건	14단계 [각군 사업단(3회) → 각군 기참부(5회) → 국방부(4회) → 국무총리 → 대통령]	9단계 [“방위사업청” 사업부서(3회) → “신설청” 계획부서(3회) → 국방 장관 → 국무총리 → 대통령]
보고안건	국방부 · 각군 · 기관간 협조	“방위사업청” 내부 협조

〈 표 1-1-2 방위력개선분야 중기계획 작성 예 〉

제2장 개청 후 개선 내용

방위사업청은 방위력 개선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전문성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2006.1.1. 문을 열었다. 개청 초기 국민들의 기대도 컸지만 방위력개선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과연 차질없이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방위사업청 개청이후 전직원들의 직무에 대한 열정과 의지로 방위력 개선 사업을 착실히 수행해 나가고 있으며, 고객중심, 생산성 중심, 원칙중심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면서 방위사업의 산실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개청 후 1여년이 지난 현 지점에서 방위사업청은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주요내용 위주로 알아보고자 한다.

1. 투명성 강화는 방위사업청 출범의 근간

가. 방위사업추진위원회

기존 방위력개선심의회는 범정부 사업의 경우에만 기획예산처 등 관련 부처의 위원의 참여가 예외적으로 가능하였을 뿐, 타부처 및 민간위원, 전문가의 참여가 제한되어 사업추진 간 투명성과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청 후 출범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군관계자 이외에도 상시적으로 타 부처(3명), 민간위원(4명) 및 전문위원(3명)을 방위력개선사업의 주요의사결정 심의 시 참여시켜 투명성 확보와 함께 다양한 의견수렴을 할 수 있게 되었다.

〈 참고 : 방위사업추진위원회 〉

- 구성 : 위원장(국방부 장관), 부위원장(방위사업청장) 포함 19인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 육·해·공군 참모차장,
국회 국방위원회 추천 2인, 청장 추천(전문가) 2인,
관련부처 3인 등 외부위원 7인 상시 참여
- 기능 : 방위사업추진 주요정책과 재원운용 등 심의, 조정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중기계획 수립, 예산편성
방위력개선사업 추진방법 결정, 기종결정 등
- 심의절차 : 실무위원회 ⇒ 분과위원회 ⇒ 위원회
- 분야별 분과위 : 정책·기획 분과위, 사업관리 분과위, 군수조달
분과위

나. 청렴서약제

청 소속 공무원, 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기술품질원 임·직원, 그리고 당해 방위사업에 참가하는 업체 대표 및 임원 등 5,073명이 청렴한 공직자상 확립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방위사업 행정 구현을 위하여 부정 부패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청렴 서약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입찰·계약에 참여하는 업체는 관계 공무원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2006년 실적 : 3,875건)을 의무화하고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이행조건을 계약특수조건으로 약정하고 있다. 과거 선언적 의미에 그쳤던 청렴서약서 제출은 이를 위반할시 방위사업청 직원은 방위사업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며, 업체는 방위산업체 지정 취소,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법적 조치가 취해진다.

다. 음부즈만 제도

과거 방위사업 민원 분쟁에 대한 중재 기관이 없어 민원인의 불만이 있었으며, 외부 시정권고를 통한 적극적인 행정제도를 구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미비하여 대 국민 신뢰도 확보가 어려웠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은 음부즈만을 정부기관 최초로 법제화하여 외부의 감사기능을 강화하였다.

방위사업청 음부즈만은 2006. 7. 12. 강성구 음부즈맨 대표 등 3명이 위촉되어 방위사업 수행과정에서 인터넷, 우편, 방문 등을 통해 제기된 민원을 조사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시정권고를 하는 등의 활동을 개시함으로써 방위사업청의 자정 노력과 투명성 강화가 한층 기대되고 있다.

라. 자발적 클리닉 감사제도

방위사업청은 환자가 스스로 의사를 찾아가서 진단을 받듯이 사업을 추진하는 각 부서에서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에 대하여 감사관실에 사전 문제점을 상담함으로써 문제 확대를 방지하는 신개념의 클리닉 감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6년에는 공군전술C4I사업 등 10개 사업을 3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직원의 86%가 “자발적 클리닉 감사가 방위사업의 부패·비리 예방 및 투명성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해 투명성 강화에 전 직원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마. 투명성평가위원회

방위사업청은 과거 방위사업을 추진하면서 법적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훈령 등에 의해 운영되면서 야기된 투명성 부족을 보완하고,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각종 제도 즉, 청렴서약서, 음부즈만 등의 활동을 평가하며 그 결과 미흡한 부분은 시정 요구를 하기 위해 투명성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바. 정보공개확대

방위사업청은 과거 극히 일부사업의 최종결정 사항에 대해 제한적으로 해오던 정보 공개를 모든 사업의 결정과정에 대해 공개의 원칙을 정립하고, 방위사업의 결정과정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를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였다.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행정정보공개」를 개설하여 정보공개목록을 「주」단위로 최신화하여 게시 중에 있으며, 목록 확인 · 정보공개 청구 · 결과 확인을 한 화면에서 할 수 있도록 「one stop service 시스템」으로 개발하는 등 정보공개를 대폭 확대하였다.

사. 국방획득사업 법령체계 정비

기존에는 훈령(국방획득관리규정, 국방기획관리규정)에 근거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빈번한 훈령개정으로 업무에 혼선을 초래하고, 특정 사업을 위해 별도 규정을 제정하는 등 행정편의적 제정권을 남발함으로써 대외적인 신뢰확보가 제한되고 부정 및 비리 발생의 원인을 제공하였으나, 방위사업법을 제정하고 이에 따른 법령체계를 완비하여 업무추진 절차를 법제화함으로써 방위사업 시스템의 투명성을 강화하였다.

2. 분산된 조직의 통·폐합을 통한 효율적인 사업관리 제고

가. 조직의 슬림화를 통한 효율적인 사업관리

국방부, 합참, 육군, 해군, 공군, 조달본부, 국방품질관리소, 국방과학연구소 등 8개 기관에 분산되어 있던 방위사업 조직과 인력을 통·폐합함으로써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는 효과를 얻었다. 조직이 하나로 통합됨에 따라 의사결정 속도가 빨라졌다.

과거 중기계획 작성 시 7회 개최하던 심의회는 3회 개최하는 것으로 줄었으며, 결재단계도 14단계에서 9단계로 감소했다. 이전에 8개 기관으로 분산됐던 조직을 통·폐합함으로써 각 기관에 있던 조직 가운데 중복된 부분을 과감하게 슬림화할 수 있었으며 방산진흥, 방산 수출 등 새롭게 부각되는 분야에 대해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나. 사업추진방법 결정체계 개선

합참/국방부의 소요결정 후 사업추진방법 결정시 “선행연구” 단계를 신설하여 최적의 획득방법을 도출함으로써 의사결정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였다.

또한,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한 국방중기계획 수립을 제도화하여 국방부장관의 지침을 받아 무기체계 우선순위에 의거 작성하고 이와 연계하여 방위력개선분야의 예산을 방위사업청이 편성함으로써 과거 군별 할당식 자원배분에 따른 비효율성을 제거하였다.

한편, 예산편성 이후 사업착수 여부를 승인함으로써 국가재정법에 어긋난 제도인 “집행승인제도”를 폐지하고, 중기계획 수립시 회계 연도+2년도 사업 중에서 주요사업에 대해 장관 및 상부에 사전보고하는 “주요사업 사전 상부보고제도”를 신설함으로써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집행제도를 개

선하였다.

그리고, 통합사업관리팀(Integrated Project Team)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사업 시작부터 종료까지 모든 절차를 통합사업관리팀에서 운영함으로써 일관성있고 전문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해지고, 각 군이 통합사업관리팀에서 함께 근무하게 됨에 따라 각 군의 개별적인 시야에서 벗어나 상대적으로 넓은 시각에서 통합적인 사업관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다. 국방과학기술 관리조직 통합

방위사업청 개청으로 국방과학 기술 개발과 획득절차 등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과거에는 국방과학기술 관리조직이 각 군, 국방과학연구소(ADD), 국방품질관리소, 조달본부 등으로 분산되어 있었다. 전문인력도 부족해 연구개발 종료 후 성능개량(또는 후속사업) 추진 시 기술정보 활용이 매우 제한되었다. 그러나 방위사업청 개청으로 국방과학기술 기획 및 관리 업무가 일원화되었다. 그 결과 국방과학 기술기획관리의 전문성이 제고되고, 연구개발 종료 후 성능개량 등 후속사업 추진시 기술정보 활용이 매우 용이해졌다.

라. 국방획득절차의 과학화

국방획득절차의 과학화분야에서도 많은 진전이 있었다. 과거에는 소요 제기/결정 단계부터 획득단계의 설계, 시제개발, 시험평가, 양산, 전력화, 폐기에 이르는 국방획득절차를 운영하였는데, 이로 인해 뒤늦은 오류발견 및 환류의 비용증가와 개발기간 지체 등의 문제가 반복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획득추진 단계에서 모델링/시뮬레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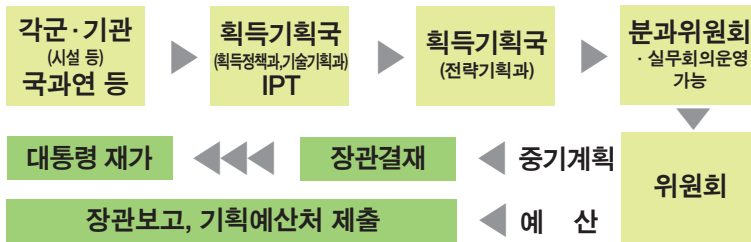
〈 참고 : 방위력개선분야 중기계획 작성 및 예산편성 소개 〉

○ 개 요

방위력개선사업의 중기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은 투명성·효율성·합리성 확보를 위해 방위사업법, 국방전력발전업무규정 등을 준수하여 국방부, 합참, 각군과의 긴밀한 업무협력체계를 통하여 수립·편성하고 있다.

또한, 미래전 수행에 적합하도록 감시·정찰 및 지휘통제통신(C4ISR) 체계와 정밀타격(PGM)체계의 네트워크화와 합동성·통합성 전력발휘를 위한 3군 균형발전 추진이라는 원칙하에 국방부, 합참, 각 군의 요구/검토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 작성절차



○ 추진현황

※ 2007 ~ 2011 국방중장기계획 (단위 : 억 원)

구 분	2006년	대 상 기 간					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방위력 개선비	5조 8,077	7조 52	8조 3,916	9조 8,630	11조 64	12조 9,555	49조 2,217
증가율	7.7%	16.0%	19.8%	17.5%	11.6%	17.7%	16.9%
국방비 대비	25.8%	29.3%	30.8%	33.0%	33.5%	35.9%	32.7%

※ 2007년 예산편성 (단위 : 억 원)

구 분	2006년 예산	2007년 예산	증감	%
방위력개선비	5조 8,077	6조 6,807	8,730	15.0

선(M&S) 기법을 활용하여 가상설계, 가상시험, 가상생산 및 운용 등의 통합생산 공정관리를 추진함으로써 획득관리의 가시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6년 6월부터 ‘국방획득절차 과학화를 위한 M&S기반획득(SBA)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행 중에 있으며, 전문가 자문그룹 구성 및 세미나 개최, SBA 추진과 M&S 종합발전계획 및 로드맵 작성을 위한 정책연구과제를 수행 중이다.

마. 무기체계 국산화 촉진

과거에는 무기체계 개발 이후 운영유지 단계에서 국산화 개발을 추진하다보니 무기체계 획득 쉰순기에(개발 - 양산 - 운영유지) 걸친 체계적인 국산화 추진이 미흡했었다. 이에 방위사업청 개청 이후에는 무기체계 개발 단계에서부터 구체적인 국산화 목표, 범위, 대상 등 국산화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이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또한 부품의 단종이 예상되어 조기개발이 필요한 부품 및 기술적 파급·수입대체 효과가 높은 부품을 우선 국산화 대상품목으로 선정하여 개발토록 함으로써 핵심부품의 안정적인 공급원 확보와 이로 인한 수입대체 효과로 인한 국방예산 절감과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바. 방위사업에 대한 사전 법률검토제 실시

기존에는 무기체계 구매를 위해 협상 및 계약체결 시 기술분야 전문가는 직접 참여하였으나, 법률 전문가는 사후 계약서에 대한 형식적 검토만 수행하여 협상의 법적 문제점이 차후 발견되어도 수정에 많은 애로가 있었으며 재협상의 원인을 제공하여 사업지연 요인이 되었었다.

그러나 방위사업청 개청이후 방위사업법(제8조)에 주요 정책결정, 협상

등에 법률 전문가 참여를 명시해, 법률전문가의 참여를 의무화 하여 법적 분쟁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

3. 전문성 향상을 통해 책임있는 사업관리 지향

가. 보직자격제도 구축

국방 획득전문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보직자격제도와 교육을 연계한 체계적 양성 및 보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직위별로 해당 전문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이 근무하도록 해당직위에 일정한 보직 자격요건을 설정 하여 관리하고 있다. 보직자격 요소로는 분야별 근무경력, 교육훈련, 전문자격, 전공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인사·교육 로드맵 작성 추진

개인별 역량진단과 직무분석을 통하여 직무에 적합한 체계화된 교육체계를 수립하여 개인별 경력관리와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구체적인 직무별·직급별 특성에 맞는 중장기 교육로드맵을 작성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교육·보직·승진을 연계한 통합적 인사관리가 구현될 수 있다.

다. 전문인력 양성·활용 확대

1회성 단기 보수교육만 운영(국방대학교 사업관리과정, 7주)하는 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체계가 미흡한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설립 및 국내·외 위탁교육을 확대하고 공직 내·외의 우수인력을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인센

티브 시행 등을 통해 우수공무원 영입을 확대하고 통상직, 기술직 등 전문직 공무원 채용 및 개방형 직위를 확대하였다.

라. 인사관리체계 개선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특별한 자격기준 없이 타부서와 순환 보직을 하는 등 체계적인 인사관리가 미흡한 기존의 인사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보직 순환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현역군인의 경우 정책부서와 야전 부대간 단기 순환 보직하던 것을 필요한 부서에 장기 보직 가능토록 “획득전문” 직위를 신설하고 “방위사업청장”에게 획득분야 군 인사관련 일정 범위의 인사권한을 부여(교육, 보직, 진급추천, 진급공석 등)하였다.

4. 국방 연구개발 및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

그동안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전문화·계열화 제도 등 특혜적 산업 보호정책을 지속한 결과 신규업체 진입을 차단하여 건전한 경쟁을 저해하는 한편 국방과학기술 발전을 가로막고, 또한 방산업체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수의계약, 실발생 원가에 대한 고정 이윤 적용 등의 경직된 제도는 자발적 기술 개발 투자 및 원가절감 노력을 저해하는 등의 폐해를 개선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은 개청이후 직원들의 직무에 대한 열정과 의지로 새로운 체제에서 각종 제도와 절차를 정비하고 개선하는 혁신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방위사업청은 고객·생산성·원칙 중심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면서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청이후 국방연구개발, 민군 겸용기술, 방위산업 전문화·계열화 폐지, 방산수출 활성화, 방산원가 및 계약제도 개선 등의 분야에서 노력하고 있다.

가. 국방연구개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등 안보환경 변화와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 및 국가 R&D 역량 증대 등 국방연구개발 환경 변화, 미래 전장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선진국의 핵심기술 이전통제 추세에 대응하고 군의 첨단화·정예화 및 자주적 방위역량 구축을 위해 국방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에 따라 연구개발 및 핵심기술개발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다.

무기체계 획득시 연구개발 및 국산화를 우선 추진(2010년 국방비 대비 6.5% 이상 편성)하고 연구개발투자비에서 핵심기술개발비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2006년 : 7.5% → 2007년 : 8.3% → 2008년 : 9.3% → 2010년 : 12.9%)하며, 전략·첨단분야 핵심기술 개발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유도무기, 항공기 탑재무장, 첨단 정보/전자전장비 등 전략·첨단 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미래 무기체계 개발을 위한 핵심기술발전 로드맵을 수립(핵심기술기획서)하고 있다.

국방 R&D 주체간의 역할 재정립 및 과학기술체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국방과학연구소는 전략무기 및 미래 혁신적 기술개발 분야에 집중하고 전술/일반체계, 저위험/대량소요체계 관련 일반 핵심기술의 경우 업체(산·연) 중심으로 개발하며 핵심기술 분야에 대한 산·연 주도과제 비중을 확대(2010년까지 50% 까지 점진적 확대)하고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와 연계한 국방과학기술표준분류표를 제정하고 국방기술품질원의 기술정보 수집/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나. 민군겸용기술

무한 경쟁시대에서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민·군겸용첨단 과학기술 개발을 위한 사업개념 및 범위를 확대 추진중이다.

민·군 협력 R&D 사업을 포괄할 수 있도록 현행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을 「민·군기술협력촉진법」으로 개편하여 「민·군겸용기술사업」을 「민·군기술협력사업」으로 확대, 범정부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국방 R&D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체계 개발중심으로 과제목표를 설정하여, 민군협력 활성화 차원에서 체계를 구성하는 공통 핵심기반기술 위주로 추진하는 방안으로 과제도출 및 선정 방식을 보완하였다.

다. 방위산업 전문화 및 계열화 제도 폐지

방위산업 전문화 및 계열화 제도는 방위산업 및 방산물자 지정제도와 더불어 방위산업을 보호 육성하는 중요한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1983년도에 도입되어 취약한 국내 방산기반 구축에 많은 기여를 하여 왔으나, 최근 국내외 방산환경의 변화속에서 오히려 방산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08년 12월말 폐지될 예정이다.

이 제도를 2006년도부터 곧바로 전면 폐지하게 될 경우에는 해당업체의 경영계획상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기존업체에게 경영전략의 변경, 기 투자설비의 활용방안 등을 마련할 시간을 줌으로써 제도 변경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08년 12월말까지는 현 제도를 잠정 유지하기로 하였다.

또한, 전면 경쟁체제가 되더라도 기존 업체의 노하우 및 투자설비 등이 사장되지 않도록 방위력개선사업관리규정 등 관련규정 제정 시 연구개발사업 업체선정기준 및 평가항목 등에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기업부문에 대한 보호와 과당경쟁에 따른 중복투자 등의 문제에 대하여는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투자 규모나 시기를 조정하거나 생산품목, 수량 또는 생산시설 등에 대하여 조

정 권고할 수 있는 사업조정제도를 신설하였다.

그 외 주요 전략무기체계 등 안정된 획득이 필요한 품목에 대하여는 군 전력화에 차질이 없도록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 지정제도와 유기적으로 연계 관리할 계획이다.

라. 방산수출 활성화

방위사업청 개칭 목적에 부합하는 방산육성 및 진흥의 기반이 될 방산 수출을 위한 범정부적 국제협력 및 시장확대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수출 활성화 전략으로 방산업체별 수출마케팅 부서를 강화하거나 수출전문회사와 제휴를 권장(KOTRA 등 활용)하고 있고 국회, 정부, 군, 업체의 총체적 노력을 집중하여 국가별 소요파악, 권역 / 국가별 차별화 된 접근방법을 모색할 것이다.

국제 방산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 방산협력·수출의 전략적 다변화와 정부 지원활동 강화를 위한 방산·군수협력협정 체결 확대, 방산·군수협력 공동회의 운영을 개선하고 방산수출 협력체제 및 방산수출 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정부차원의 지원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원가계산 시 수출물량에 대한 고정비 배분을 제외하고 마케팅 활동비 원가인정, 국제 방산전시회 국가관 설치 운영 및 국내전시회 통합추진, 방산 수출시장 개척 활동 강화, 해외 파견무관에 대한 국·내외 방산수출 설명회 개최 등을 추진하고 있다.

마. 방산원가 및 계약제도 개선

1974년 방산 원가 및 계약관련 규칙이 제정된 이후 수차례 개정을 통하여 문제점을 보완해 왔으나 방산물자의 원가절감과 연구개발 촉진을 위

한 원가계산 및 계약관련 제도 개선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방산원가 계산 및 계약제도에 대해 3년여에 걸친 연구기관의 연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방산원가 및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업체의 원가 절감 및 경영개선 노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하였다.

방산물자 수출촉진을 위하여 발생하는 광고선전비를 원가로 인정하고, 방산수출 물자의 국제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출 물량에 대한 고정비 원가 보전, 경영 여건이 열악한 중소 방산업체의 일반관리비 상한을 2% 상향조정, 퇴직보험료의 원가인정, 전산 정보자료의 증빙 인정 및 원가절감 유인을 위한 원가절감 보상 계약의 확대 적용이 주요 개정 내용이다. 규칙을 개정함으로써 방산업체의 경영개선과 원가절감 유인 제공, 방산물자 수출 증대를 통한 자주국방 기반 구축 및 외화 획득과 고용창출 등을 통해 국가경제 발전에도 많은 공헌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방위사업청은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각종 제도와 절차를 정비하고 개선하는 혁신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투명성, 효율성, 전문성, 경쟁력 향상을 위해 매진할 것이다.

Q & A

Q 방위사업청의 탄생으로 국방부 장관의 중요한 정책결정사항인 방위력 개선을 위한 획득정책 추진이 한계가 있는 것 아닌가요?

A 정부조직법상 행정기관의 장은 청의 중요정책 수립시 청장을 지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정부조직법 제7조 4항)

또한 방위사업법에도 국방부장관의 방위력 개선사업을 위한 정책의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먼저 방위사업 주요정책결정을 위한 최상위 기구인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방부 장관이 수행하고 있으며(방위사업법 제9조)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중기계획 작성시에도 방위사업청장은 국방부장관의 지침을 받아 작성토록 규정함은 물론 국방부장관이 위원장인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방위사업청은 국방부장관의 예산 편성지침을 근거로 예산을 편성하고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방위사업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방위사업법 제 14조)

즉, 국방부장관의 방위력개선사업을 위한 정책의지가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이미 마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Q & A

Q 방위사업청과 국방부는 어떤 관계인가요?
방위사업청은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나요?

A 방위사업청은 병무청과 같은 국방부의 '외청' 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정경제부와 국세청, 산업자원부와 중소기업청과 같은 관계입니다.

청은 각부의 관장사무중 1개 국의 사무로 하기에는 그 양이 너무 방대하고, 업무처리에 있어서는 독자성이 필요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서 설치됩니다.

청은 인사와 예산에 있어서 독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속 장관은 청의 중요정책 수립에 대해서만 직접 지휘할 수 있으므로 방위사업청의 독립성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단, 국방획득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국방부장관의 정책의지와의 합일성을 위해 방위사업청은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다른 정부부처와 청과의 관계와는 달리 보다 밀접하게 국방부와 업무적으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제2편 방위사업추진의 투명성 강화

제1장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운영	44
제2장 투명성 강화	48
제3장 자발적 클리닉 감사제도 도입	55
제4장 정보공개 확대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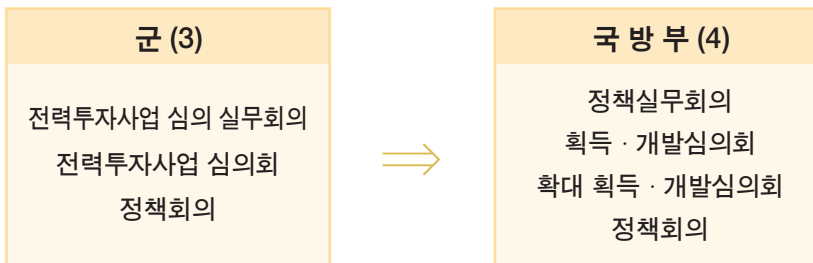
제2편

제 2 편 방위사업 추진의 투명성 강화

제1장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위사업추진 위원회 운영

1. 개 요

방위력개선사업의 주요 의사결정에 있어서 각 군에서 전력투자사업 심의 실무회의와 전력투자사업 심의회, 정책회의 등을 거치고, 다시 국방부의 정책실무회의, 획득·개발심의회, 확대획득·개발심의회, 정책회의 등을 거치는 등 다단계 의사결정과정을 거치게 됨에 따라 복잡성과 중복성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장기간 소요되는 등 비효율성을 초래하였으며, 이러한 기존 심의회에는 범정부적인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만 기획예산처 등 관련부처의 예외적 참여가 있었을 뿐 그 외의 사업에는 타부처 및 민간 전문가의 참여가 제한되어 방위사업 의사결정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었다.



〈 그림 2-1-1 종전 심의단계 〉

2. 기본방향

기존 중복·분산된 획득 위원회를 과감하게 통합하여 간소화하고 외부 민간위원의 참석범위를 확대하여 방위사업의 주요 정책결정 및 재원의 운용 등에 대한 심의·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방위사업의사결정체계를 개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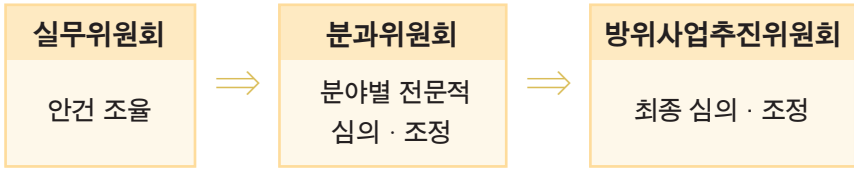
3. 주요 개선사항 및 추진실적

가. 심의의 간소화·투명화·전문화

의사결정단계를 기존 7단계에서 2단계(분과위원회, 위원회)로 축소하여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하였으며, 사업추진 선행단계에서부터 보다 심층적으로 관리하게 함으로서 사업의 효율성을 증대시켰다.

구분	기능	개선		종전
		분과위원회	위원회	
정책 기획	· 방위사업 정책, 계획, 예산에 관한 사항 - 중기/예산편성 - 방산정책 등	정책기획 분과 위원회	방 위 사 업 추 진 위 원 회	· 국방투자사업추진위원회(1) · 정책회의(2) · 획득·개발심의회(1) · 분석평가관계관회의(1)
사업 관리	· 방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기종/업체 결정 -사업계획 등 · C4ISR 상호운용성에 관한사항	사업관리 분과 위원회		· 전력투자사업관련위원회(3) · 확대획득개발심의회(1) · 형상관리 등(3) · C4ISR 협의회(1) · 조달본부(2)
군수 조달	· 군수품 및 방산물자에 관한 사항 - 조달/계약/원가 - 표준화/품질관리 등	군수조달 분과 위원회		· 군수품표준화관련위원회(1) · 조달 본부(9) · 품관소(2)

〈 표 2-1-1 심의의 간소화·투명화·전문화 〉



〈 그림 2-1-2 개선후 심의단계 〉

나. 타 부처 및 민간위원 참여

종전의 심의회에서는 제한적으로 타 부처 및 민간위원이 참여하였으나, 상시적으로 관련부처(3), 민간위원(4) 및 전문위원(3)이 참여하도록 방위사업 추진위원회 제도를 개선하여 주요 방위력개선사업의 의사결정시 보다 다양하고 전문적인 외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게 되어 투명성과 전문성 향상에 크게 기여 하였다.

〈 참고 : 상시 참여하는 국회 추천, 관련부처, 민간전문가 〉

- 방위사업추진위원회 : 7명(국회, 전문가, 관련부처 등)
- 분과위원회 : 9명(국회, 관련부처 등)
- 전문위원 : 5명 이내(KIDA 연구위원, 국방대 교수, 중소기업 대표 등)

다.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 실적

- 2006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운영 실적 : 총 11회 26건 안건처리

구 분	안 건
심의안건	한국형헬기(KHP) 체계개발계획, 공중조기경보통제기(E-X) 기종결정, 장보고-II(계속사업) 사업추진방안, 군위성 통신 장비 양산계획, 30미리 자주 대공포 2차 양산계획 및 2007~2011 방위력개선사업 국방중기계획 등 22건
보고안건	공중조기경보통제기(E-X) 시험평가 결과보고 등 4건

※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위원 19명 중 7명을 외부위원으로 위촉 · 운영

〈 표 2-1-2 2006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안건 〉

- 2006년 분과위원회 운영 실적 : 총 29회 98건 안건처리

구 분	안 건
심의안건	2006년 신규 특화연구센터 설립승인, 이집트 K-9자주포 기술수출 예비승인, 2006년 방위력개선사업 추진계획서, GPS 과학화경계시스템 사업추진기본전략, 155mm 장사 정탄 기술수출 예비승인, 국방과학기술 민수이전 승인, 2009-2023 국방연구개발기획서, 2006년 방위력개선사업 가용자원 운용계획 등 83건
보고안건	BTCS 운용시험평가 결과보고, 군위성통신체계 개발시험 평가 결과보고 등 15건

※ 분과위원회 위원 56명 중 9명을 외부위원으로 위촉 · 운영

〈 표 2-1-3 2006년 분과위원회 안건 〉

4. 향후 정책 추진방향

앞으로도 방위사업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과 재원의 운용 등을 심의·조정하는 기구로서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고 내실화함으로써 방위사업 추진과정에서의 투명성·전문성·효율성을 더욱 제고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제2장 투명성 강화

1. 개 요

방위사업청 개청 이전까지 국방획득사업은 의사결정 및 사업추진 과정의 폐쇄성으로 인하여 비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환경에 놓여 있었다. 예를 들어, 의사결정시 국외도입 사업의 경우에는 32단계의 절차를, 연구개발의 경우에는 10회 이상 국방부의 승인절차가 필요할 정도로 복잡한 체계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주관적 평가요소의 중시나 과도한 보안 기준 적용 등 투명성 미흡으로 인한 논란이 지속되었다.

또한 기존 국방획득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이 국방부분부, 각 군, 조달본부 등 8개 기관으로 분산되어 있어 문제 발생 시 책임소재 규명이 어렵고, 각 기관에서 내재하였던 잘못된 관행에 대한 일괄적 개선이 미흡하였다.

2. 기본방향

방위사업청은 개청과 함께 투명한 방위사업을 기대하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개칭 취지에 부합하는 청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 첫째, 투명성 제도의 정착 및 활성화
- 둘째, 전사적 차원의 비리ZERO화 운동 전개
- 셋째, 비리 예방활동 강화
- 넷째, 자발적 클리닉 감사제도 도입 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3. 주요 개선사항 및 추진실적

투명성 제도의 정착 및 활성화는 청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결 과제로서 정책실명제 실시, 청렴서약제 시행, 음부즈만 제도 도입 및 투명성평가위원회 운영 등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이들 투명성 제도의 공통점은 그 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의사결정 및 사업추진 과정의 폐쇄성을 어항 속의 금붕어를 보듯 투명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 정책실명제 실시

정책실명제는 방위사업 추진 시 선행연구 단계에서부터 종료 시까지 주요 정책 결정 또는 집행에 참여한 참여자의 소속, 직급, 성명 및 의견,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 공청회 등의 토의내용 및 결정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보존토록 하는 제도이다.



방위사업청 청렴서약식 / 2006. 5. 11

〈 그림 2-2-1 〉

2006년도 정책실명제 추진 실적으로는 44개의 주요한 방위사업에 대한 253개 자료의 실명을 보존함으로써 방위사업 정책결정, 사업추진 과정의 투명성 확립 및 사업 추진 관계관의 책임성 확보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실적에 대한 세부 내역은 <표 2-2-1>과 같다.

구분	계	방위사업 추진위원회	분과 위원회	계획서	보고서	회의	공청회 (설명회)
건수	253	26	67	41	62	49	8

< 표 2-2-1 2006년 정책 실명제 추진 실적 >

나. 청렴서약제 시행

청렴서약제는 투명한 방위사업 구현 및 청렴한 공직자상 확립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방위사업을 구현하기 위하여 청 소속 공무원, 출연기관 임직원 등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상자들이 임용, 승진 등 규정된 시기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다짐하는 서약을 제출하게 하는 제도이다.

2006년도에는 방위사업청 직원을 포함하여 출연기관(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직원,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위원 등 총 5,073명이 청렴서약을 제출하였고, 2006. 5. 11. 방위사업청장이 주관한 청렴서약식 행사는 SBS를 비롯한 언론의 큰 관심을 끌기도 하였으며, 2006년 청렴서약제 실시 결과 방위사업 관련자들에 대한 부패방지 인식 형성 및 청의 청렴도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다. 음부즈만 제도 도입

음부즈만 운영은 추진 중인 방위사업에 대하여 국민에 의한 감시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방위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미흡한 부분은 시정요구 및 감사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원래 옴부즈만(Ombudsman)이란 용어는 ‘다른 사람의 대리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스웨덴어로 의회의 위임을 받아 행정부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비리나 민원 등을 독립적으로 조사·보고하는 시민 감사관을 의미하는데, 우리나라는 방위사업청이 법에 의해 설치된 최초의 옴부즈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에서는 옴부즈만을 운영하기 위하여 2006년 3월~6월 한국투명성기구 등 비영리 민간단체로부터 후보를 추천 받아 자체 심사를 거쳐 동년 7월에 3명의 민간인으로 구성된 옴부즈만을 위촉하고 사무소를 개소하였다. 또한 방위사업청에서는 옴부즈만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운영규정을 별도로



옴부즈만 사무소 개소 / 2006. 7. 12

〈 그림 2-2-2 〉

마련하고 홍보 소책자를 배포하였으며, 국가 청렴 제도에 관한 국제워크숍(International Workshop on National Integrity System) 등 국제회의에서 방위사업청과 옴부즈만을 2회에 걸쳐 홍보 하였다. 옴부즈만은 2006년도에 총 7건의 민원을 접수하여 조치함으로써 민원인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라. 투명성 평가위원회 운영

투명성평가위원회는 방위사업청에서 추진 중인 제반 투명성 관련 제도의 시행 결과를 평가하고 미흡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기 위한 제도이다. 투명성평가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현재는 위원장 외에 외부 위원 2명과 내부위원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방위사업청은 2006. 8. 30. 투명성 평가위원을 위촉 및 임명하고, 제1차 투명성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책실명제를 비롯한 상정 안건을 심의하였다. 하지만 많은 상정 안건을 단시간 내에 심의하는데 따른 시간 부족 등으로 충분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제2차 투명성평가위원회는 사전 안건을



투명성평가위원회 회의 장면 / 2006.8.30
(그림 2-2-3)

을 배포하여 평가의 내실을 기할 예정이다. 또한 투명성평가위원회 간담회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위원 간의 정보공유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심의결과 우수한 실적이 있는 투명성 제도 이행 부서 또는 개인에 대하여는 청렴대상을 수여하는 등 제도적 개선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마. 비리 제로화 운동 전개

비리ZERO화 운동은 투명하고 공정한 방위사업을 구현하기 위하여 청소속 전 부서 및 산하 단체가 참여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비리 척결운동이다. 과거 방위사업은 보안을 이유로 사업이 폐쇄적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비리로 변질될 수 있는 잘못된 관행이 고착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았으며 외부로 잘 드러나지도 않아 개선의 기회가 적었다.

방위사업청에서는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고 투명성의 높이를 국민의 기대수준에 맞추기 위하여 2006년 10월부터 12월까지 청 소속 및 출연기관을 포함한 각 부서에서 자발적으로 잘못된 관행 및 개선안 181건을 발굴하고 개선의 약속을 국민 앞에 약속하고자 2006. 12. 27. 비리 근절 대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비리 근절 대토론회에는 감사원을 비롯한 사정기관, 한국투명성기구 등 시민단체, 학회 및 방산업체 대표 등 약 180여 명의 외부 인사가 참석하였으며, 발굴한 잘못된 관행 181건 중 대표적인 사례를 발표하고, 개선방안에 대하여 공개 토의를 진행하였다.



비리 근절 대토론회 개최 / 2006.12.27

〈 그림 2-2-4 〉

한편, 방위사업청은 행사 당일 자체 제작한 <국방획득사업 비리·부패 방지 가이드>를 참가자 전원과 감사원 등 관련 사정기관에게 배포하였는데 이 책은 방위사업을 추진 시 각 단계별로 발생할 수 있는 비리 개연성과 개선안을 수록하고 있어 비리를 예방하고자 하는 방산업체 관계자와 업무 관련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바. 비리 예방활동 강화

비리 예방활동 강화는 개청 이후 방위사업청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을 고려한 감사운영으로 예방적 감사기능 강화 및 청 업무의 조기 정착화 기여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었다. 2006. 1. 1. 방위사업 시행의 투명성, 전문성, 효율성 확보를 목적으로 개청된 방위사업청은 ‘어느 집단보다 깨끗해야 한다.’는 국민의 인식과 기대에 부응해야 하는 반면 개청에 따른 외부 비판의 눈길은 계속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방위사업청은 적극적 감사 활동 및 상시모니터링을 통한 예방 활동을 강화하여 문제 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문제를 은폐하거나 비리를 자행하는 직원은 엄중 문책함으로써 참여정부의 국정과제인 부패 없는 사회를 실현하고 방위사업 분야의 부조리를 근원적으로 척

결하고자 하였다.

2006년도에 방위사업청은 총 31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중 계획된 감사 사항은 100% 완료하고, 상부 지시나 민원에 의한 비계획 수시감사는 14건을 실시하였다. 감사 실시에 대한 결과 처리는 총 73건을 처분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계		징 계		경 고		주 의		시 정	기타 (통보등)	모 범 사 례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건수	건수
73	24	6	7	7	12	5	5	11	42	2

〈 표 2-2-2 2006년 자체 감사 처분 결과 〉

사. 상시모니터링 제도 시행

상시모니터링은 청 업무 전반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을 비공식적이고 수시로 수렴함으로써 청의 투명성, 전문성, 효율성 및 조직의 단결 등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이다. 상시모니터링의 대상은 직무 부조리에 관련되는 사항으로부터 후생·복지 관련 사항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중요사항은 청장 보고 후 정식 처리 절차를 밟는다. 2006년도 상시모니터링 실적은 총 70건으로 중요사항은 16건이었으며 세부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	계	조직	예산	복지	민원	사업	기타
건수	70	20	3	8	5	13	21

〈 표 2-2-3 2006년 상시모니터링 실적 / 2006. 1. 9 ~ 12. 31 〉

4. 향후 정책추진 방향

방위사업청은 향후 잘못된 관행을 청 내부에서 발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외부 고객인 소요군, 방산업계 직원 및 일반 국민들이 체감하는 잘못된 관행을 접수받아 이를 적극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비리 근절 대토론회도 일회성 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하여 개최함으로써 비리 근절에 대한 청의 의지를 국민 앞에 거듭 천명할 예정이다.

한편, 옴부즈만 활동 지원을 확대하고 옴부즈만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방산 관련 기관·업체 방문 및 현장 민원 접수를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청렴서약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실제 이행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함으로써 그 실효성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상시모니터링 수행방안을 보다 전문화, 세분화하여 모니터링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우수 모니터링 직원에 대해선 포상을 수여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으로 방위사업청의 투명성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제3장 자발적 클리닉 감사제도 도입

1. 개 요

2006.1.1. 개청된 방위사업청은 연간 약 8조여 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직원 수가 약 5천여 명에 달하는 거대한 조직으로 40여 명의 감사인력으로 개청취지인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감사요구부서는 감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감사를 회피하려고 하고 잘못을 은폐하여 오히려 문제를 더 키워서 적발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

하여 감사부서의 일방적인 감사를 통해서는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따랐다.

따라서, 방위사업청 감사관실은 제한된 인원으로 방대한 조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 직원들이 투명성 확보에 동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절실히 필요했다. 이에 내부 직원들이 투명성 증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감사가 지니고 있는 본질적인 한계를 극복하고자 사업·업무를 집행하는 부서에서 감사를 요구하여 피감부서와 함께 최적의 해결방안을 도출하고자 정부부처·기관 최초로 자발적 Clinic 감사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2. 기본방향

자발적 클리닉 감사의 기본방향은 첫째, 감사인력의 제한과 수감부서의 현행 업무 추진일정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둘째, 감사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자발적 Clinic 감사결과 신분상 조치는 스스로 감사 요구한 정상을 참작하여 감경 처분한다.

반면에, 내재된 문제를 간과·은폐하여 사후 감사에서 지적되는 경우에는 엄중처벌토록 자발적 감사의뢰에 대한 유인(Incentive)을 제공한다. 셋째, 대대적인 조직개편과 인원이동에 의한 감사의 제한과 감사기간의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도개선을 도출하는 정책감사로 추진한다.

3. 주요개선사항 및 추진실적

자발적 클리닉 감사의 주요 개선 사항 및 추진실적은 다음과 같다. 우선 2006.2.2. 자발적 Clinic 감사계획을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감사요구 사항을 접수하였다. 사업·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서 공군전술 C4I사업 등 총 14개 사항에 대하여 자발적 Clinic 감사를 요구하였다. 이 감사요구 사항에 대하여 감사관실의 자체 심의결과 사업부서에서 추진방안을 검토·판단할 4개 사항을 제외하고 공군전술 C4I사업 등 10개 사항을 2006년 자발적 Clinic 감사대상으로 선정·시행하였다.

자발적 Clinic 감사는 제한된 감사인력 등으로 인하여 총 3단계로 구분하여 감사를 하였으며, 자발적 Clinic 감사결과 도출된 성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혁신적인 제도개선사항 도출이다. ○○ 2차 사업 감사기간 중에 계약 사후 관리분야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관련법규에 따라 작성토록 되어 있는 계약문서 중 산출내역서를 과거 수년 동안 부실하게 작성·관리하여 온 것이 확인되었다. 이 산출내역서의 부실한 관리는 계약금액 조정을 둘러싸고 계약상대자와 분쟁으로 이어지거나, 착·중도금 지급업무에 대한 이견 등으로 민원을 야기하는 등 그 문제점이 심각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에 의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에 대한 적절한 산출내역서 작성방안을 강구하여 사후관리업무를 수행토록 관련부서에서 조치하였다.

해군 함정 ○○피복재 감사과정에서는 해군 함정의 ○○피복재 시공을 약 20여 년간 특정업체가 독점 수주하는 것이 식별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해군에서 1985년 폴리우레탄 ○○피복재 국방규격을 제정하면서 특정업체의 제품성적서 및 시공법 위주로 제정하고, 동社の 부품번호를 그대로 명기하여 제정함으로써 비롯되었다. 이에 따라 국방규격서에서 경

쟁을 제한하는 요소를 배제하도록 관련부서에 요구하였다.

둘째, 내부 프로세스 개선사항 도출이다. ○○전지 계약관리실태 감사는 계약과정의 적정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감사과정에서 군수품 품질보증활동에 더 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감사중점을 품질보증활동절차로 전환하였다. 감사결과 품질보증원이 계약이행을 위한 군수품 품질보증활동을 하면서 검사·확인하여야 할 사항을 검사·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합격처리하여 물품을 납품토록하거나 중요 검사항목인데도 검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품질보증활동계획을 수립·실시한 사실이 식별되었다.

이에 따라 국방규격서를 기준으로 품질보증활동계획을 수립토록 관련부서에 요구하였다. 또한, 계약과정에서 제품생산 소요일수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업체에게 부당한 부담을 지우고 품질보증활동을 소홀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여 절대납품기한을 보장토록 관련부서에 요구하는 등 당초 요구한 감사목적 이외에도 해당사업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내부 프로세스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하는 효과를 달성하였다.

4. 향후 정책추진 방향

2006년 자발적 Clinic감사는 개청 원년의 안정적 업무수행에 기여하고 많은 성과를 도출한 반면에 제도시행 원년의 시행착오도 적지 않았다.

첫째, 시정·개선사항에 대한 피드백의 적시성 결여이다. 자발적 Clinic 감사를 계획감사로 분류·시행하여 해당부서에서 연초에 감사를 요구한 사항을 연말이 되어서야 그 결과를 통보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다.

둘째, 감사결과에 대하여 감사요구부서와의 신뢰구축이 미흡하였다. 자발적 Clinic 감사도 감사결과에 대하여 비록 감경처분이 된다하더라도 처분을 요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 결과, 자발적 Clinic 감사에 대하여 일부 직원들은 자발적 Clinic 감사가 과거의 감사처럼 처벌위주로 진행된다면 스스로 감사를 요구할 유인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이처럼 감사관실이 내부직원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면 자발적 Clinic 감사는 더 발전하기 어려울 것이다.

2006년 자발적 Clinic 감사제도 시행결과 문제점으로 식별된 사항들을 보완하여 이 제도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계획감사에서 수시감사로 감사형태를 전환하는 것이다. 계획감사로 분류하여 시정·개선사항에 대한 피드백의 적시성이 결여되었던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다. 또한,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방위력개선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사업부서에서 감사요구한 사항을 우선 검토하고 필요시 관련사업 전반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둘째, 감사요구 시기·채널을 확대하는 것이다. 연초에 공문을 통하여 감사요구사항을 일괄 접수하여 청 내의 다양한 문제점 등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Cyber 감사실 등을 활용하여 연중 수시로 감사요구사항을 접수하는 등 감사요구 시기와 채널을 다양화해야 한다.

셋째, 감사요원의 지속적인 전문성 제고이다. 2006년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의 97%인 약 5.5조 원이 방위력개선분야의 예산이다. 이 분야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국방정책분야 사업으로 청의 감사중점을 사업 및 정책분야에 둘 수밖에 없다. 사업 및 정책분야의 감사가 제 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감사요원의 전문성이 필수적이다. 우수한 인적자원을 선발하여

관련법규·규정 및 감사관련 교육 등을 통하여 사업·정책방향을 명쾌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감사요원의 지속적인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겠다.

제4장 정보공개 확대

1. 개 요

국정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와 참여를 보장하고, 방위사업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국가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 일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청 내 모든 정보를 공개함을 원칙으로 추진하였다.

2. 기본방향

정보공개는 정보공개법 및 방위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알릴 것은 적극 알리고 지킬 것은 철저히 지킨다.” 는 기초하에 막대한 국가 재원이 소요되는 방위사업에 대한 정보공개를 단계적, 지속적,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적 이해와 공감대하에 방위사업을 보다 투명하고 신뢰성 있게 추진하고자 노력하였다.

3. 주요 개선사항 및 추진실적

가. 정보 공개·비공개 세부 기준 정립

기존에 방위사업 관련 정보 공개 및 비공개 기준이 일부 모호하고 구체

적이지 못함에 따라 제기된 정보공개 실무적용의 한계점과 일부 과도한 비밀 분류로 인한 사업관련 정보의 폐쇄성을 해소하여 방위사업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에서는 20여 차례의 실무회의, 정보공개관계관 회의, 관련기관(국방부, 합참, 각 군 등)과의 심도있는 협의를 거친 후「주요 문건별 정보 공개·비공개」기준(안)을 마련하여, 정책심의기구인『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보 공개·비공개 세부기준을 정립함으로써 국민적 이해와 공감대하에 방위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다.



제1회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 2006.6.29
 < 그림 2-4-1 >

나.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방위사업법(2006.1.2) 및 행정정보공개지침(2006.4.10) 마련으로 법적, 제도적 수행체계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정보공개관련 심의기구인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의 위원으로 외부 전문가 2인(교수, 변호사)을 위촉하여 정보 공개·비공개 추진계획 및 기준, 방위력 개선분야 정보 공개·비공개 세부기준을 심의·의결하여 정보공개 담당공무원이 보다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정보공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방위사업에 대한 의사결정체계를 적극 개선하고 외부 전문가 참여를 대폭 확대하여 방위사업추진위원 18인 중 7인(관련부처 : 3명, 국회 추천 : 2명, 방위사업청 추천 : 2명)의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토록 하였으며, 이는 방위사업추진과 관련한 의사결정과정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다. 정보공개 접근성 제고

국민들로부터 방위사업청의 정보공개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6개의 Banner로 구성된 『행정정보공개방』을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다.



〈 그림 2-4-2 행정정보공개방 인터넷 홈페이지 〉

또한, 「주요정책 및 사업 결정과정」의 묶음형 정보를 제공하여 백화점식(나열식)의 단편적 정보공개 단점을 보완 사전적, 적극적인 공개를 통해 다각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라. 정책홍보차원의 다각적인 정보공개 활동

정책홍보차원의 정보공개를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67,808건의 정보공개목록 자료를 게시하였으며, 총 156회의 브리핑 실시 및 보도자

료 제공, 23회에 걸쳐 정책 설명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여 사전적·적극적·맞춤식의 정보공개 활동을 실시하였다.

4. 향후 정책 추진방향

국민들의 방위사업에 대한 투명성 및 공정성에 대한 기대 증대에 부응하고자 정보공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그동안 비밀로 관리하던 정보 중 분리공개가 가능한 사항을 추가로 발굴하여 관련부분을 국민일반에 적극 공개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방위사업 관련 연구기관 및 업체가 예측 가능한 개발 및 생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별도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열람이 가능토록 관련 문건별 범위를 추가로 발굴, 제공하여 계획성 있는 경영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적절한 접촉 및 로비활동이 차단 되도록 하겠으며, 정보고객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청 홈페이지를 통해 각종 정책 및 사업관련 정보공개를 확대하여 열람·검색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국민적 이해와 공감대하에 방위사업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 되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

Q & A

Q 방위사업청이 기존에 분산되어 있던 중기계획, 예산, 집행, 평가 기능을 모두 통합한 공릉조직이 되어, 오히려 이전보다 견제와 균형 상실, 외부 통제기능 완화로 오히려 비리발생 여지가 많아진 것 아닌가요?

A 획득사업에 있어서의 비리의 문제는 조직의 분산과 통합문제가 아닌 의사결정과정에서의 투명성 문제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과거 획득관련 조직이 8개기관으로 분산된 구조하에서 오히려 율곡비리를 비롯한 많은 비리 사건이 발생한 것은 획득관련 의사결정 구조가 개방적이지 못하였고 의사결정 과정과 업무 프로세스상의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방위사업청이 생기기 이전에는 약 7조원이 넘는 획득사업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하지 않고 단순히 국방부 내부 훈령으로 수행하여 법적 정당성이 취약했을 뿐만 아니라 방위사업 의사결정과정의 폐쇄성으로 투명성 논란이 지속되었습니다.

※ 방위사업관련 19개 심의회 · 협의회 중 민간인 참여 회의체 전무

방위사업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먼저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할 뿐 아니라 방위사업에 대한 의사결정을 외부전문가는 물론 타 정부부처(기예처, 산자부, 과기부), 각군이 참석한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렴서약제, 정책실명제, 움부즈만 제도, 투명성평가위원회 등을 통해 실질적인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제3편 방위사업추진의 효율성 증대

제1장 사업관리 효율성 증대	66
제2장 고객중심의 조달행정서비스 체계구축	80
제3장 정보체계 활용성 제고	95
제4장 분석평가 강화	105
제5장 EVMS/CAIV 체계 구축	109
제6장 사전 법률 검토제도 시행	118



제3편

제 3 편 방위사업추진의 효율성 증대

제1장 사업관리 효율성 증대

1. 효율적인 사업관리

가. 개 요

통합사업관리제도 도입, 적기 사업착수를 위한 선행연구의 활성화 및 관련부서와의 협조체제 강화 등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위한 체계조성을 2006년도에 실시하고자 하였다.

나. 기본방향

사업관리의 기본방향은 첫째, 통합사업관리제도 도입을 통한 사업관리의 효율성 증대, 둘째, 적기 사업착수를 위한 선행연구 활성화, 셋째,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관리 및 관련부서 협조체제 강화, 넷째, 능동적인 ROC 보완 및 형상변경 관리이다.

다. 주요 개선사항 및 추진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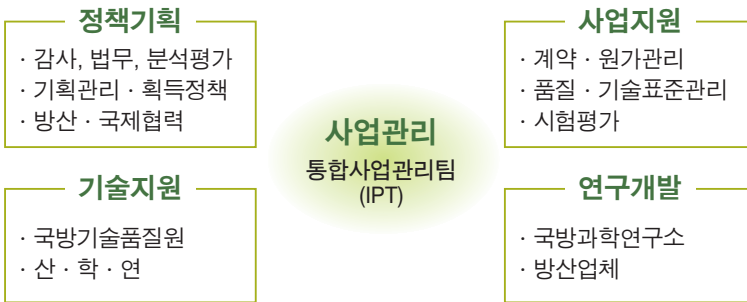
1) 통합사업관리제도 도입을 통한 사업관리 효율성 증대

가) 통합사업관리제(IPT) 의의

미국, 프랑스, 영국 등의 선진국에서는 무기체계의 전 수명주기를 통합

〈 참고 : 통합사업관리제도(Integrated Project Team) 소개 〉

- 개념 : 사업 시작단계부터 종료 시까지 계획수립, 예산편성, 품질보증, 기술관리 등 각 기능별로 전문 인력을 통합·구성(Integrated Project Team)하여 당해 사업의 모든 과정을 사업관리자(Project Manager) 중심으로 관리하는 체계
- 운용 : 사업의 규모, 추진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IPT별 1개 또는 복수의 사업을 소요결정 이후부터 사업 종결 시까지 지속·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운용
- 구성 : 사업관리본부 예하 무기체계별 7개 사업부(지휘통제통신, 감시정찰·정보전자, 기동, 함정, 항공기, 신특수유도, 화력·탄약)에 중심기능을 수행하는 상주인력과 기능조직으로부터 지원받는 비상주 인력을 Matrix 형태로 구성



○ 기대효과

구 분	기대효과
사업관리자(PM)중심으로 업무 추진	의사결정 및 승인기간 단축
기존의 순차적 검토과정을 대체	관망이 아닌 지속적인 사업관리 가능 제품 개발(생산 기간) 단축
타분야의 전문가 참여	문제점 조기 식별, 정보공유 증대 부서별/개인별 배타적 업무 자세 제거 향상된 위험 식별 및 위험 완화
제한된 자원의 효율성 극대화	개발기간 단축, 개발비용 감소, 운용주기비용 감소
전 운용주기에 걸친 소비자(소요군)참여	소비자(소요군)만족도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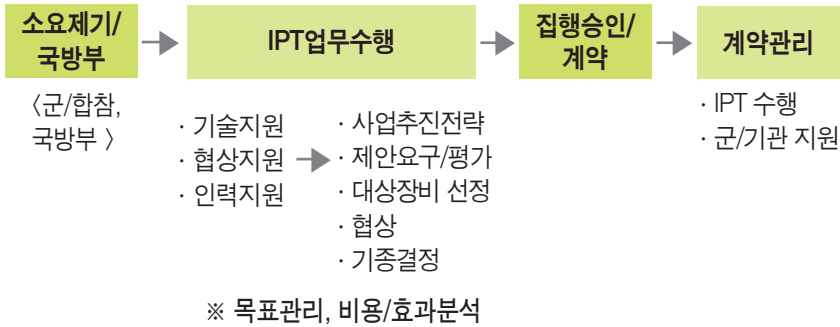
적으로 관리하여 유사 기능을 통·폐합시키고 절차를 개선시켜 업무의 효율성(시간+비용)향상을 도모하는 통합사업관리 개념을 도입, 운영해 오고 있다.

그동안 한국의 국방획득사업은 국방획득 사업 관리영역이 분산·중복되고, 관련기관 간에 업무 수행이 단절되어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사업의 효율성·책임성도 확보하지 못해 왔다는 문제제기가 지속되었다. 따라서 사업관리자(PM)에게 사업의 전 과정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여 “업무절차를 간소화시키고 책임성 있는 사업관리”를 달성하는 통합사업관리제를 도입하였다.

나) 통합사업팀(IPT) 도입 이후 업무수행절차 변화



〈 그림 3-1-1 기존의 획득사업 업무수행 절차 〉



〈 그림 3-1-2 통합사업팀(IPT) 도입후 업무수행절차 〉

개청이후 소요결정이후부터 사업종결시까지 사업책임자의 관장하에 책임운영하는 “통합사업관리(Integrated Project Team)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였으며, 개청 등으로 사업 착수가 3개월 늦었음에도 집행실적이 향상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구 분	예 산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2005년 결산	7조 3,886억원	6조 9,335억원(93.8%)	4,062억원(5.5%)	489억원(0.7%)
2006년 결산	5조 9,953억원	5조 6,471억원(94.2%)	3,167억원(5.3%)	315억원(0.5%)

※ 2005년 결산대비 지출액 0.4%증가, 이월액/불용액 각각 0.2%감소

〈 표 3-1-1 사업예산 집행실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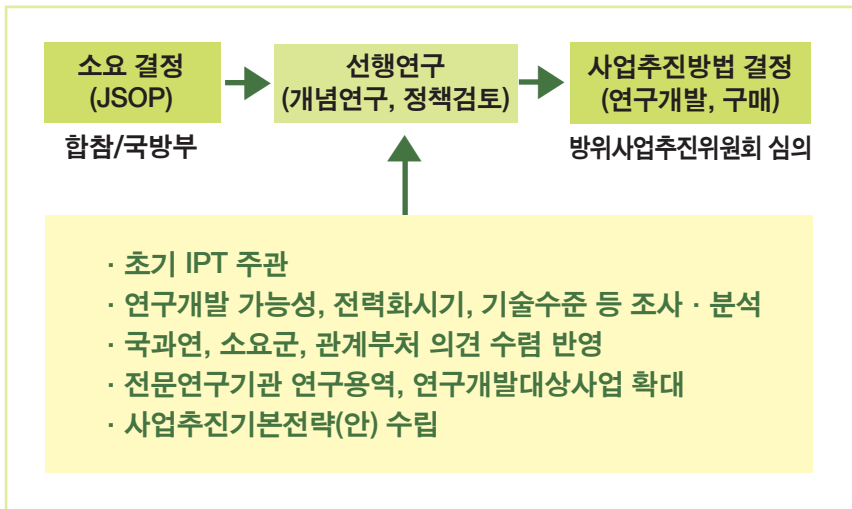
방위사업청은 통합사업팀(IPT)을 중심으로 정책기획본부의 정책수립 지원, 기술센터의 기술지원,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개발관리를 지원받는 조직구조를 구축하여 무기체계운영경험을 가진 군의 전문성 활용도를 극대화해 나가고자 한다.

2) 적기 사업착수를 위한 선행연구 활성화

방위사업청 개청이후 방위사업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사업추진방법 결정체계에 “선행연구” 단계를 신설하였고, 이에 따라 사전 심층적인 연구·분석을 통해 최적의 사업추진 방법을 결정하였으며, 국방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 등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사업의 타당성 및 추진전략을 분석하였다.

사업명	예산	용역기관
K1A1전차 성능개량사업 사전분석 등 19건	3.1억원	KIDA, ADD, 국방대학교 국방기술품직원 등 6개 기관

〈 표 3-1-2 2006년 선행연구 주요추진실적 〉



〈 그림 3-1-3 선행연구절차 〉

3)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관리 및 관련부서 협조체제 강화

2006년에는 구체적인 사업추진계획 수립, 적기 선행조치, 문제발생시

신속한 의사결정 및 계획조정 등의 조치 강화 노력으로 SAM-X 등 29건의 사업추진간 문제점을 해결 및 개선하였고, SPIDER 등 8개사업의 전력화계획을 조정하였다.

구 분	계	전력화완료	전력화계획 조정
내 용	69개 사업	61개 사업	8개 사업

〈 표 3-1-3 무기체계 전력화 실적 〉

또한, 사업관리본부, 계약관리본부, 국방기술품질원, 합동참모본부, 소요군 등 관련부서와의 정례적 협조를 강화하여 계약관리본부와는 구매계획서, 원가관리/계약자료의 사전 교류를 검토하였고, 국방기술품질원과는 형상관리 업무수행절차 개선 등을 협조하였으며, 합동참모본부와는 상호운용성, 신규 소요결정, 비무기체계 분류 등을 협조하였다.

4) 능동적인 ROC 보완 및 형상변경 관리

무기체계의 기술발전추세 및 전력화여건 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능동적인 ROC 보완 및 형상변경을 추진하였다.

구 분	내 용
ROC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전운용개념에 부합되지 않게 선정된 과도한 ROC · 타무기체계와의 호환성이 있는 경우 별도개발 불필요시 · 신기술 개발에 의한 소요삭제 필요시 등
형상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자 요구/부품중단에 의한 도면변경, 기술변경/규격개정시 등 · 기술/운용시험평가 경로가 반영, 대상품목의 국산화 완료시 등

〈 표 3-1-4 ROC 보완 및 형상변경 관리 〉

구분	계	ROC 보완	형상변경	기타(기술변경)
내용	45건	차기구난장갑차 등 10건	10톤 구난차 등 30건	지로살포기 등 5건

〈 표 3-1-5 ROC 보완 및 형상변경 내용 〉

5) 사업예산의 효율적 집행

2006년에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으로 8개 사업부별로 41개사업에 대해 약 1390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업부	사업명	절감액 (억원)	절감내용
내용	41개 사업	1,391.5	
계획 운영	ILS 개발체계 보완 발전 등 2개사업	236.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LS개발체계를 '컨베이어 벨트화' 하여 업무시간 단축(1,000품목 기준 30일→6일) · ILS 요소별 획득소요 조정
지휘 통제	제1MCRC노후교체 등 9개사업	127.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CRC사업 기술협상시 25개항목 무상제공 합의 · 지휘축선보강사업 계약방법 변경 (단체수의계약→일반경쟁, HW 통합 발주)
기동	K1A1전차 등 8개사업	95.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차 부수지원품목 중 불필요 품목 삭제 ·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사업의 UPS(무정전전원 공급장치) 가동시간을 2시간→30분으로 조정
화력 탄약	BTCS성능개량 등 5개사업	25.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투예비탄약 계약방법 변경(단년차→2년 장기계약) · BTCS 성능개량의 과도한 규격 완화
함정	울산-1급전투체계 등 7개사업	68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울산-1급 전투체계사업 ROC 변경으로 개발비 절감(추적레이더) · 장보고-II사업 계약방법 변경(제작사와 직구매) · 상륙함정 암호장비를 재활용 장비로 탑재
항공기	T-50초도양산 등 3개사업	10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50 외부장착물(연료탱크 등) 운영형상 변경 · F-15K 임무지원장비 등 3건 무상제공 합의 · 지휘헬기의 불요불급한 기내설비 조정
신특수 유도	비호 등 5개사업	106.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호 2차양산 정비장비 소요 조정(17점→9점) · 발칸 창정비 시험장비 소요 조정(39종→10종)
감시 정찰	전투기외장형 전자 방해장비 등 3개사업	7.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투기외장형 전자방해장비 시설공사소요 현지실사를 통하여 조정

〈 표 3-1-6 2006년도 사업예산 절감실적 〉

라. 향후 정책 추진방향

IPT 신설/해체, 인원조정 등 사업과 연계하여 융통성있게 통합사업관리 팀을 운용할 계획이며, 2007년 선행연구과제 선정 지침 마련 및 심의회 등을 실시하여 투명성 있게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2007년 세부 사업추진계획 작성을 통한 적기 전력화 차원의 지속적인 사업관리 노력을 기울이고 적극적인 선행조치/의사결정 등 전력화 일정관리의 강화,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한 IPT 지원체제 유지를 통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며, 기술발전속도/전력화여건을 고려, 적기 ROC변경 및 형상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다.

2. 종합군수지원(ILS) 업무체계 강화

가. 개 요

우리 군은 1970년 이후 방산 자주화를 추진해왔으나 대부분 주장비 위주의 개발이었고, 무기체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종합군수지원(ILS)⁴⁾ 요소에 대한 개발은 개발업체의 의견과 경험적 요소에 의지하는 등 상대적으로 소홀한 면이 있었다.

그러나 무기체계 수명주기(획득-전력화-운용-폐기)의 관점에서 보면, 개발이나 획득비용보다 야전에 배치되어 수명주기(30여년 이상) 동안 발

4) 종합군수지원(ILS: Integrated Logistics Support) : 무기체계의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군수지원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요제기시부터 설계, 개발, 획득, 운영 및 폐기시까지 제반 군수지원요소를 종합관리하는 활동

생되는 운용유지비용(재고관리/긴급조달비용 등)이 2~3배 이상 발생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른 국방비의 추가소요 발생은 적지 않으며, 국방개혁을 위해서는 후속 군수 지원분야의 운영유지예산 절감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다.

또한, 성능보장이 안될 경우 전투준비태세 유지도 곤란한 실정이었다. 과거의 ‘직관과 경험에 기초한 정성적 방법’과 ‘분석도구별로 분산된 ILS업무체계’로는 무기체계에 대한 종합군수지원(ILS) 요소를 정확히 예측하고 개발할 수 없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단계부터 ILS 획득소요를 최적화할 수 있는 「ILS개발시스템」구축 및 업무 프로세스 개선,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효율적인 종합군수지원 업무수행체계 발전이 요망되었다.

나. 기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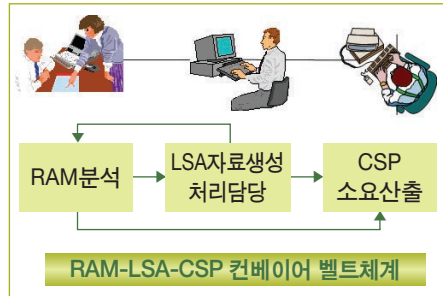
개청 이후 고객(소요군, 개발기관, 업체 등)의 요구에 부응하기위해 무기체계의 성능이 보장되면서 무기체계 수명주기간 국방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과학화된 분석도구를 체계적으로 활용해 종합군수지원(ILS) 소요산출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이 절실한 과제로 인식되어 해결방법을 모색하게 되었다. 먼저 프로세스 혁신을 위해서는 ILS 요소 개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RAM⁵⁾으로 부터 LSA⁶⁾, CSP⁷⁾ 산출업무를 컴퓨터 기반에서 단계적으로 정량화하여 분석할 수 있는 「RAM-LSA-CSP 업무 컨베이어 벨트체계」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종합군수지원 업무발전을 위해 ‘청’-방산업체간 업무교류회를 시행하고, ILS개발세미나를 추진하여 업무 벤치마킹 및 상호 공감대 형성,

개청이후 추진한 ILS개발업무를 분석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체계를 구축하여 분야별 성과와 발전방향을 도출하도록 추진하였다.

다. 주요 개선사항 및 추진실적

그 동안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방위사업청 개청시 육·해·공군 ILS개발팀을 동일부서에 편성하고 RAM, 군수지원분석(LSA), 동시조달수리부속(CSP) 등 분석도구별로 분산됐던 ILS입력제원들을 통합·검증할 수 있도록 개청 이후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2006.6월 ILS분석장비실을 마련하고 운영체계를 정립, 시연하고 최초로 운영하게 되었다. 또한 지상장비 ILS 개발팀이 보유한 공학적 분석도구를 활용하여 RAM, 군수지원 분석 검증업무를 해상·항공전력에 대해 공통 적용하여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RAM-LSA-CSP 컨베이어 벨트체계

〈 그림 3-1-4 〉

ILS분석장비실에서는 구축된 체계를 바탕으로 지원하는 주요 사업을 대상으로 그동안 아래 도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43개 사업에 대하여 53회 ILS

- 5) 신뢰도(Reliability), 가용도(Availability), 정비도(Maintainability)의 총칭으로 체계~부품의 수명/정비시간 예측을 통해 가용도를 도출하는 영역으로 '설계지원/평가,설계개선/대안도출, 군수지원분석 등을 지원하는 업무
- 6) 군수지원분석(Logistics Support Analysis) 업무로서 무기체계의 수명주기에 걸쳐 군수지원요소를 확인, 정의, 분석 구체화하는 활동
- 7) 동시조달수리부속(Concurrent Spare Parts)으로서 효율적인 장비유지 및 정비관리를 위해 초도 및 후속 보급되는 장비의 필수 소요 수리부속품을 장비와 동시에 조달하는 부품

분석도구를 활용하여 공학적 RAM분석, 군수지원분석(LSA), 동시조달수리부속(CSP)산출 검증을 통해 정량화된 종합군수지원 요소를 제공함으로써 과학화된 분석·검증 지원체제를 조기 정착하는 전기가 마련되었다.

구분	계	계
지상전력	41회 35개사업	차기전차 7,040품목, 차기FV 7,929품목, 포병관측장비 1,210품목, BTCS성능개량 1,322품목 등
해상전력	8회 6개사업	피아식별기(IFF) 56품목, 발전기 958품목, 기관통제장치 69품목, 해군전술C4I체계 222품목 등
항공전력	4회 2개사업	다가능 전술항법장비 신뢰도 분석, 공군전술C4I 사업 LSA (13건반영), CSP 13품목 250점 산출, Server 신뢰도 등

〈 표 3-1-7 2006년 ILS 추진실적 〉

1) ILS 체계 구축의 성과

첫째, 무기체계 개발간 ILS 분석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지금까지 약 107억원의 비용절감효과와 4,500시간의 정비시간을 절감하였다. 또한 ILS 요소를 객관적으로 정량화하여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켰고, 운용 유지 비용의 획기적인 절감(무기체계 수명주기 고려시 1,073억원, 226,000 정비시간 절감) 효과를 가져 오기도 하였다.

둘째, 전문가 양성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현재 청에서는 우수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외 연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전문 인원의 적재적소 배치와 독자적인 RAM 업무 및 군수지원분석(LSA), 동시조달수리부속(CSP) 산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셋째, 무기체계 개발관련기관의 ILS 업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 파급효과를 창출하였다. 청의 ILS 개발업무가 표준화되고 정량적인 분석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무기체계 사업 주관기관(방위사업청)과 개발기관(국방과

학연구소, 개발업체 등), 사용자인 소요군의 ILS 업무를 획기적으로 활성화하고, 사전에 관련기관별 충분한 의사소통과 군수지원요소개발을 위한 노력의 통합이 가능하게 되어 합리적인 개발자료의 확보와 소요의 적중률 향상이 가능하게 되었다.

2) 종합군수지원 개발 세미나 개최

한편, 방산업체와 업무 벤치마킹 및 민군 공감대 형성을 위한 ‘청’-방산업체간 ‘종합군수지원(ILS) 업무교류회’를 2006.10.30일 1차로 청 브리핑룸 및 ILS분석장비실에서 업체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ILS 업무 혁신사례 및 업체 ILS 업무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이어 최신 ILS 분석기법에 대해 시연 및 토의가 시행되었다.

진행된 교류회에서 청에서 발표한 ILS요소 정량화를 위한 「RAM(신뢰도·정비도·가용도)-LSA-CSP산정 업무 혁신사례」와 보조를 맞출수 있는 방산업체의 발전적 ILS 프로세스 구축에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이를 위해 향후 ‘청-방산업체간 노력통합’을 계속 이어 가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후 12월19일 ‘ILS업무 교류회’를 겸한 ILS개발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세미나에는 육·해·공군 및 교육사, 군수사의 ILS업무 담당자를 포함하여 국방과학연구소 및 방산업체 관계자 등 90여명이 참석하였다.



2006년 종합군수지원개발 세미나

〈 그림 3-1-5 〉

이날 청(종합군수지원개발팀)에서는 개청이후 중점 추진해온 ‘과학적인 ILS 분석시스템 구축’을 발표함

으로써 참석자들의 관심을 모았으며,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2007년도 개발완료되는 ‘통합 군수지원분석 시스템 개발’을 소개하여 새로운 ILS 개발업무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방산업체에서도 ‘시스템공학과 연계한 ILS업무발전방향’과 ‘창정비 개발 야전운영지원 분석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이어 종합토의에서는 향후 생산되는 각종 ILS관련 자료DB 구축 문제와 이 자료의 관련기관간 공유하는 문제 등이 논의되었다.

세미나에서는 과거 군별로 추진해오던 ILS 개발업무를 개청 이후 통합 추진하면서 이룬 성과와 분야별 발전방향을 제시함으로써, ILS 요소개발 업무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라. 향후 정책 추진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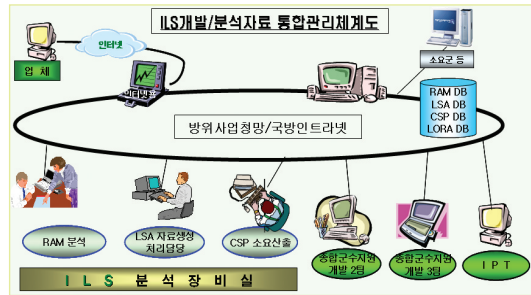
현재 ILS 분석장비실에는 분석도구 운용을 통하여 RAM-군수지원분석(LSA)-동시조달수리부속(CSP)를 벨트체계에 의해 개발기관(업체) 분석제원을 검증하는 체계를 운용중이다.

그러나 통합된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완전구축된 체계가 아니며, ILS 분석장비실을 핵심 기반으로 2007년도 7월까지 군수지원분석 통합시스템을 구축 추진하고 있고, 향후 ILS 관련 RAM 분석, 군수지원분석(LSA), 동시조달수리부속(CSP)분석을 하나의 통합시스템에 의한 체계적인 수행과 기술자료의 DB관리체계 구축 활용이 필요한 단계이다.

향후에는 2007년도 전반기까지 서버 확보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사용자(방위사업청, 소요군, 국방부 등)의 Web 업무환경을 구현하고, 또한 금년도 7월까지 청내의 사업담당, ILS담당관 등 ILS 관련인원 및 소요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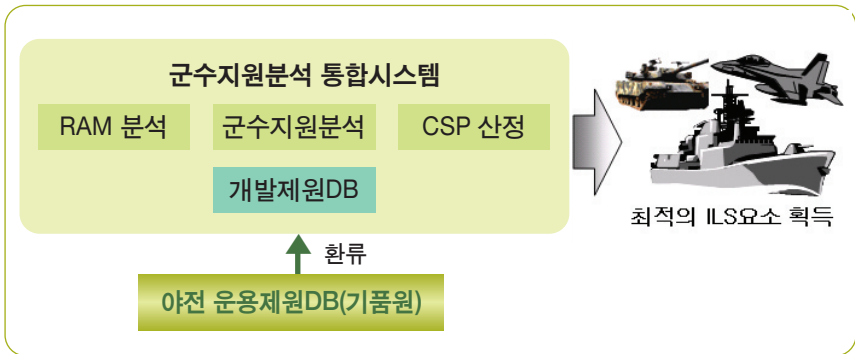
의 ILS관계자가 공통으로 운용가능한 「군수지원분석 통합시스템」을 구축 완료한 후, 체계 운용자의 교육을 완료하면 방위사업청, 소요군, 국방부 등 관련기관 실시간 정보공유가 가능해진다. 이렇게 하면 통합 DB 기반의 군수지원분석 수행되고 또한 주장비 설계와 더불어 동시 공학적 군수지원분석(LSA) 프로세스가 가능토록 구현된다.

또한 2008년부터 개발 자료 DB관리체계를 구축 (설계도면관리, RAM 분석, 군수지원분석, CSP 산정 등)하고, 소요군과 국방망을 이용한 야전운용 자료 연계 활용하여 유사 무기체계 개발시 DB제원을 환류(Feedback)가 가능한 체계로서 운용할 계획이다.



〈 그림 3-1-6 ILS개발/분석자료 통합관리 체계도 〉

을 환류(Feedback)가 가능한 체계로서 운용할 계획이다.



〈 그림 3-1-7 DB제원 환류 〉

장기적으로는 방위사업청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를 개발하고 이와 연계하여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체계로 활용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제2장 고객중심의 조달행정서비스 체계구축

1. 방위사업청/조달청간 업무협정체결

가. 개 요

방위사업청 신설에 따라 그동안 적용해오던 국방부와 조달청간 군수물자 조달협정을 수정·보완하여 협정주체의 변경 및 협력범위 확대 등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유기적인 업무협력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과 조달청간에 업무협정을 체결하였다.

나. 기본방향

업무협정체결을 통하여 방위사업과 민수사업을 상호 연계함으로써 국가경제적 시너지 효과를 증대하고, 군수품 조달업무의 효율성과 조달행정의 전문성/투명성 극대화를 협정체결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다. 주요 개선사항 및 추진실적

조달청과 유관부서의 실무협의를 2006년 6월부터 시작하여 협정서 초안을 작성하여 양 기관의 수정과 보완 작업을 9월까지 실시하였으며, 10월과 11월에 협정서에 대한 조달청의 최종 의견을 수렴하여 법무검토를 받아 협정서 최종안을 확정하였다.



조달청-방위사업청 업무협정체결

〈 그림 3-2-1 〉

금번 업무협정체결에 따라 군수품 중 민·군 공통 상용품에 대한 조달청 위탁구매, 민수품과 군수품의 목록 연계활용, 국내·외 교육정보 교환 및 상호 교환교육, 인력교류 등 관련 업무 전분야로 협력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양 기관 차장을 공동위원장으로 국(부)장급 및 전무가가 참여하는 12인 이내의 협력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분야별로 효율적인 업무협력이 되도록 하였다.

특히, 방위사업청은 군수품 중 민·군 공통 상용품으로서 구매금액 5천만원 이상인 물품의 경제적 조달을 위하여 조달청에 구매요청을 의뢰하도록 하였으며, 연간 단가계약 물품과 소모성 행정용품에 대해서는 가능한 조달청을 통하여 구매하도록 하였다.

또한, 대금지불 및 수수료를 적용과 관련하여 조달청은 방위사업청(각 수요군 포함)이 공급한 물품의 대금을 조달특별회계 회전자금으로 계약대상자에게 지불하되, 2008년부터는 정부시책에 따라 물품대금을 방위사업청에서 직접 계약대상자에게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방위사업청에 조달·공급하는 조달물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50% 할인한 금액으로 책정하도록 하였다.

그 밖에도 양 기관이 공통으로 구매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물품 목록번호 상호연계, 신규 목록화 절차 정립 등 민수품과 군수품의 목록연계를 추진하고, 양 기관간의 교환교육 및 인력교류 등에 관하여는 협력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였다.

라. 향후 정책 추진방향

정부조달의 양대 기관인 방위사업청과 조달청은 금번 업무협정 체결을 통하여 방위사업과 민수사업의 상호 연계를 통한 국가 경제의 시너지 효

과를 증대시켜 나가기 위해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업무 유관사항에 대하여 협력위원회와 협력분야별 실무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도록 청 직원들에게 권장하여 군수품 조달업무의 효율성 극대화는 물론 조달행정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극대화시켜 나갈 것이다.

2. 목록업무 절차 개선

가. 개 요

방위사업청 개청이전 3개년 평균 국방 군수품 목록화⁸⁾ 처리를 확인한 결과 약 8,300품목(39%)이 미처리된 상태로 이월되었으며, 목록화 처리 소요기간은 짧게는 4개월에서 길게는 1년이상 장기간 소요(평균 142 근무일)되어 고객 불만의 원인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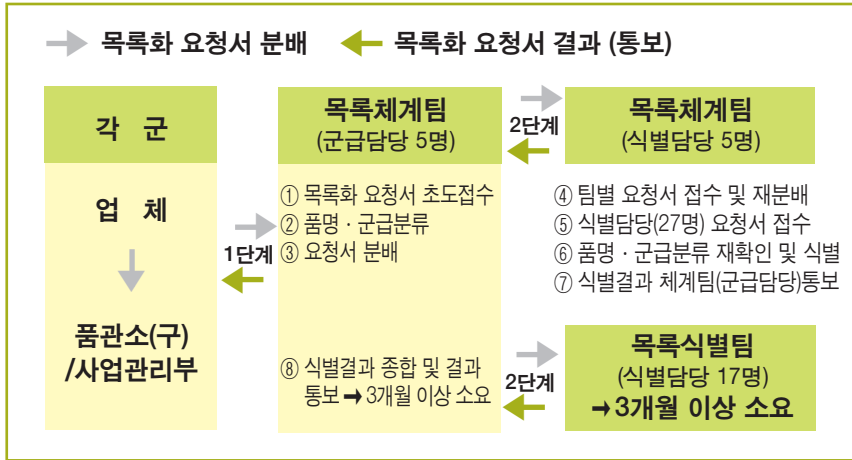
구분	요청건	완료건	이월건	평균 소요기간(근무일)
2003년	17,000	7,363	12,989	154
2004년	16,198	10,261	8,835	171
2005년	13,452	10,261	3,191	100
평균	15,550	9,295	8,338	142

〈 표 3-2-1 개청이전 3년간 목록화 처리현황 〉

목록화 장기화 원인은 목록화 요청서를 목록체계팀에서 최초 접수, 5명의 소수인원이 품명·군급분류 후 각 팀으로 분배 및 종합함으로써 다량의 요청서가 집중 접수될 때 품명·군급분류 단계에서 적체현상이 지속

8) 국방 군수품 목록화(Cataloging) : 군수품에 대한 특성제원 등을 표준화된 형식과 체계에 따라 일목요연하게 나열한 일람표

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따라서 목록화 요청서의 최초 접수부터 결과를 통보할 때까지의 업무집중 방지와 행정처리 소요기간 단축을 위한 절차의 간소화가 필요하였다.



〈 그림 3-2-2 개선전 목록업무 처리절차 〉

방산업체는 종이문서로 작성된 목록화 요청서를 사업관리본부 IPT(통합사업관리팀) 담당자에게 직접 접수를 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며, 사업관리본부 IPT 담당자는 업체로부터 접수한 목록 관련 자료를 한건 한건 수작업으로 국방조달관리정보체계(DPMS)에 입력함으로써 자료 부정확의 원인 및 수작업 입력에 따른 업무처리시간 과다소요로 업무 애로 현상이 발생하였고, 목록팀 담당자들은 목록화 요청서, 도면, 기술자료 등 관련 자료에 대한 전산 D/B구축을 위한 스캐닝 작업수행으로 업무 수행시간의 상당 부분을 할애해야 되는 상황으로 비효율적 행정 소요가 발생하였다.

나. 기본방향

우리청의 미션이『고객중심의 방위사업 추진으로 국가이익에 기여하

자』이다. 우리의 주요 고객(각 군, 방산업체 등)에게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를 고민 하였으며, 현 시점에서 고객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적기에 목록화 지원하는 것이었으며 이를 위해서 “목록화 소요기간 단축”을 추진하였다. 목록화 소요기간 단축을 위해서는 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비효율적 행정절차를 과감히 개선 할 필요가 있었다.

다. 주요 개선사항 및 추진실적

1) 목록업무 절차 개선

목록화 요청서를 접수 후 최초 분배 기준이 되는 군급업무⁹⁾를 한 팀에서만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목록팀간 업무 분장 명확화 및 각 군별·IPT별 전담지원 업무체계를 구축하고 단선형 다단계 업무 수행체계를 병렬형 업무수행 체계로 목록화업무 프로세스를 단순화 하였다. 그 결과, 목록화업무 담당 직책별 전문화 유지가 가능하고 업체로부터 해당 품목에 대한 관련 내용 문의시에도 관련 업무 담당자가 해당사항에 대해 즉시 답변이 가능하였다.



〈 그림 3-2-3 개선후 목록업무 처리절차 〉

2) 군급 업무담당 전담제 폐지

목록화 업무담당자 모두에게 군급업무 기능을 부여하여 약 680종의 군급(Federal Supply Classification)을 개인별로 약 30여종씩 전담 관리함으로써 동일/유사 군급을 전문적으로 관리하여 목록업무의 전문성 및 개인 책임실명제가 가능토록 하였다.

3) 통합사업관리팀(IPT) 전담 지원체계 구축

목록식별팀은 사업관리본부 기동전력, 화력탄약, 함정, 항공기사업부 등 4개부 28개 IPT를 목록체계팀은 지휘통제 통신전자, 신평수유도무기, 감시정찰정보 전자사업부 등 3개부 21개 IPT를 전담 지원하는 업무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각 IPT 사업 단계별로 참여 사전·사후 지원을 통한 효율적 적시 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

4) 목록화 실시간 진행진도 프로그램 개발

목록화 업무처리 소요기간 관리를 위해 팀에서 자체 개발한 실시간 목록화 진도 확인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목록업무 담당자별로 분배된 목록화 요청건에 대하여 언제, 어느 업체로부터 얼마만큼의 요청서를 접수하여 현재 어디까지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지 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인에게 업무량이 집중되거나 교육, 출장 등 장기 부재시에도 업무 재분배를 통하여 목록화가 지연되는 상황을 근원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처리 소요기간 관리가 가능하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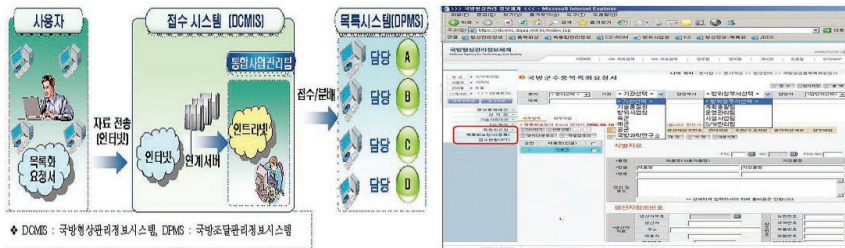
-
- 9) 군급업무 : 군급(FSC)은 국가재고번호(NSN) 13자리 숫자중 앞의 네 자리 숫자이며 군수품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식별할 목적으로 사용된다. 군급업무는 요청 품목에 대하여 군급번호를 부여하고 지정품명(INC)을 검토하며 요청부서와 목록화 관련 사항을 협조하는 업무이다.

구분	담당 1	담당 2	담당 18	접수	작업	회승	완료	소요일
1776호	16	16		17	216		19	216	29
1838호	10	9		9	45		0	45	21
1947호	17	15		19	103		4	103	27
2015호	20	18		15	79		0	79	13
2479호	2	4		9	156	132	9	24	
2503호	17	21		25	131	92	27	39	
2959호		1		11	13	6	0	7	
계	338	319	286	3,368	230	72	2,928	45

〈 그림 3-2-4 실시간 진도 확인 프로그램 〉

5) 온라인 접수시스템 구축

방산업체에서 목록화 요청서를 종이문서로 작성하여 방위사업청 통합 사업관리팀을 방문하여 직접 접수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을 위해 2006년 2월에 기본 구상 및 세부계획을 추진하였다. 국방 기술품질원의 국방형상정보관리시스템(DCMIS)을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사업 착수 3개월만에 ON-LINE 전산 접수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다.



〈 그림 3-2-5 ON-LINE 자동접수 절차 〉

각 군 및 방산 업체에서 목록화 요청시 기술자료 미비로 인해 회송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전산 접수시스템 구축시 목록화 작업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 입력항목을 상호 조율을 통해 지정함으로써 자료보완을 위해 회송하는 사례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불필요한 행정 소요시간을 단축 하였고 회송율은 현저하게 감소되었다.

라. 향후 추진방향

2006. 2월부터 목록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추진하여 동년 9월 1일부로 개선된 업무 프로세스를 적용한 결과로써 목록담당자들은 목록화 처리 소요기간에 대한 뚜렷한 목표의식을 갖게 되었으며, 기존 142 근무일이 소요되던 목록화 처리 소요기간이 현재에는 “45 근무일 이내”로 처리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이 크게 향상 되어 고객만족에 기여 하였다.

그러나, 목록업무 프로세스 개선이 완전히 정착화 될 때까지는 어느정도의 정착화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일부 온라인시스템(DCMIS)과 DPMS 상호 연계활용 등의 보완사항과 고객(각군/IPT/업체)의 불편사항 및 상호이해가 부족한부분은 목록화 요청기관/업체와 우리청 목록기관과의 지속적 상호교류를 통한 의견수렴, 문제해결, 토의, 교육 등의 노력으로 개선 발전해야 할 것이다.

향후 추진 방향으로는 목록화 요청, 재고번호 부여, 목록자료 정비 및 활용 등 목록화 관련 각 단계별 표준화된 작업과 목록자료 신뢰도 향상을 위한 과학적 기법 연구를 통하여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목록업무 개선 및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3. 한도액계약 방법 개선

가. 개 요

우리 군은 방위력 건설 및 운영유지를 위해 대정부간구매(FMS) 또는 상업구매 형태로 국외업체 또는 국가와 거래를 하고 있다. 상업구매는 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하며 구매 방법은 확정계약과 한도액(BOA)계약으로 구분하고 있다.

한도액구매계약(Basic Ordering Agreement)은 무기체계를 운영하는데 필수적인 주요장비의 수리부속 및 정비를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한도액(Ceiling Value)을 설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소요가 발생할 때마다 사업관리부서(기관)에서 계약총액의 범위내에서 이를 청구하여 구매하는 계약방법을 말한다.

그 동안 수요군에서 필요한 주요장비의 수리부속 및 정비를 위해 계속적으로 소요 되는 품목을 매년 반복하여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연평균 116건, 1,085억원 상당의 사업에 대해 동일한 구매행정으로 인한 비효율성과 시간 낭비를 초래하였다.

대부분의 생산업체가 익년도에 적용할 가격표(Price Catalogue)를 매년 후반기에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협상과 계약체결의 연도 말 집중으로 인한 적기조달 지연으로 수요군에 대한 군수지원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나. 기본방향

장비 유지보수에 필요한 수리부품 및 정비소요는 매 2~3년분을 사전에

판단하여 2~3년분 소요를 통합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일괄 집행함으로써 매년 2~3년 주기로 한도액계약을 체결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다. 주요 개선사항 및 추진실적

2006. 1월 매년 반복 계약으로 발생하는 비효율적인 행정소요기간을 단축시키고, 적기조달로 수요군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방위사업청에서는 한도액계약제도 개선을 2006년 주요 혁신과제로 선정하여 한도액계약팀 및 국제계약부에서 수차례 토의를 하였다.

이를 통하여 매년 반복적으로 한도액계약(BOA)을 체결하는 사업은 2~3년분 소요를 통합 계약하여 한도액계약 주기를 현행 1년에서 최대 3년 단위로 집행할 수 있도록 현행 단년도 계약방식을 장기계속계약방식으로 개선하여 한도액 사업은 2~3년분의 소요예산을 국고채에 통합편성 후 방위사업청에서 일괄 집행하고 2~3년 주기로 계약하도록 하는 한도액계약(BOA) 방법 개선방안을 시행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한도액계약방법 개선으로 수요군에서는 소요판단 및 조달계획 작성을 매년 실시하였으나 2~3년 단위로 실시함으로써 행정소요가 대폭 감소되고(2~3회 → 1회), 방위사업청에서는 매년 반복 계약으로 발생하는 계약 행정소요기간을 대폭 단축시킬 수 있으며(2~3회 → 1회), 계약건수 최소화에 따른 계약 사후관리업무 감소로 업무 효율성이 향상될 수 있었다.

또한, 통합 계약에 의한 경제성 제고가 가능하여 외화절감과 사고이월 최소화로 예산의 효율적 운용이 가능하며, 수요군의 요구 시기에 적기 조달지원이 가능하여 주요 고객인 수요군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었다.

라. 향후 정책 추진방향

방위사업청은 수요군이 요구하는 군수품에 대해 양질의 품목을 경제적으로 구매하여 적기에 조달하는 것이 주요한 임무라고 할 수 있다. 2007년도에는 수리부속 및 정비 한도액사업 중 3개 사업을 대상으로 3년 소요를 통합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3년 주기로 장기계약을 체결하여 시험 적용 후 시행간 문제점을 보완하여 점차적으로 모든 국외조달 한도액사업에 적용함으로써 조달행정소요를 대폭 감소시켜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조달기간 단축 및 적기 조달지원으로 수요군 만족도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4. 국방분야 한국산업규격(KS) 제·개정 참여제도 마련

가. 개 요

민군 겸용성 품목 조달시는 비용절감과 획득이 용이한 상용품 우선 조달정책에 따라 KS규격을 우선 적용하도록 방위사업법령 등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군의 특수한 요구조건을 수용하는 KS규격이 없는 경우가 많으며, 군수조달에 사용중인 KS규격 또한 수시로 제·개정될 때 군의 특수한 요구조건이 배제되어 별도로 국방규격을 제정해야 하는 등 실질적인 상용품 조달을 위한 규격지원에 어려움이 많았다.

또한, 기존의 민군규격통일화 사업을 통해 KS규격으로 전환된 국방규격이 있으나, KS규격은 자체 시스템에 의해 수시로 제·개정되어 실질적 군수조달 사용을 위한 군의 요구조건 반영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나. 기본방향

개청이후 투명성과 효율성에 기반을 둔 업무분석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민·군이 공통으로 사용가능한 KS규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착수하게 되었다. 군수조달에 사용비중이 높은 KS규격들은 제·개정될 때 군의 요구조건이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추진하고, KS규격 제·개정 심의회에 방위사업청의 팀장급 위원을 편성 추진하여 민군 겸용 가능한 KS규격 제정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였다.

다. 주요 개선사항 및 추진실적

이를 위해, 관계법령 분석과 군수조달에 비중이 높은 KS규격 649종을 선별하는 작업을 우선 완료하였으며, 산업자원부(기술표준원)와 수차례 협의를 통해 해당 KS규격 제·개정시 방위사업청이 사전 검토하는 제도를 마련하게 되었다. 2006년 12월부터 군수분야 비중이 높은 KS규격은 산자부(기술표준원)의 제·개정(안)에 대해 방위사업청에서 군수조달 관점에서 사전 검토하는 제도를 시행하였고 그에 따른 주요 개선사항은 민군 공통 사용가능한 KS규격 확대를 위한 기본제도 마련으로 상용품 조달이 확대되어 약 30억원의 획득비용 절감이 가능하였다.

또한, 민군 겸용성 물자의 규격일원화로 업계의 생산라인을 단일화하고 군수품 조달시장의 진입장벽 해소와 이에 따른 전시 국가동원 기반확충에 기여하였다.

라. 향후 정책 추진방향

기존의 민수규격(KS 등 상용규격) 우선적용 정책은 이미 완성된 민수규격으로 군수조달 가능여부를 검토하던 수동적인 방식이었으나, 금번 제도를 통해 최초부터 군수조달이 가능한 민수규격 제정을 유도하는 적극적인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상용품 조달확대의 걸림돌이 되어왔던, 민수규격 지원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기본 제도가 확립되었으며 앞으로도 효율성과 투명성 관점에서 개방적인 규격지원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다.

5. 국외도입부품 전자입찰 추진

가. 개 요

지금까지는 국외조달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입찰참여업체가 전산 디스켓과 필요 서류를 구비한 후 방위사업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서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어서 국외 또는 지방 소재업체에 많은 불편과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되어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민원 불편요인은 전산입찰 과정에서 항상 내재되어 있었다. 또한 전산입찰은 내부적으로 입찰행정 소요 시간 지연으로 입찰행정의 효율성, 투명성, 경쟁력 제고에 미흡한 체계로 인해 적기에 우리 군에서 필요로 하는 군수품을 조달할 수 있는 군수품 조달관리규정에도 미흡하였고, 이로 인해 군 전투력 증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는 행정적·제도적 비합리적인 요인이 잠재된 입찰수단이었던 것과 동시에 정보화, 세계화를 지향하는 국가와 국민 편의 행정과도 위배된 제도적 장치였던 것도 사실이었다.

나. 기본방향

종전의 전산입찰에서 경험했던 민원인의 불편요인을 제거하고, 내부적으로는 입찰 및 계약담당자들의 행정 소요시간 단축을 위한 입찰제도 개선을 도모하고 우리나라의 강점인 온라인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 국외조달 전자입찰에 있어서 ONE-STOP 행정처리를 가능하게 하며 이와 함께

효율성, 투명성, 경쟁력 있는 전자입찰 프로그램 개발을 기본적인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다. 추진성과

이번 국외조달에서 전자입찰로의 입찰방식 변경은 종전 전산입찰 대비 전자입찰시행에 따른 계약행정 업무의 대폭적인 감소 효과를 주었다. 특히 기존 계약행정 소요기간이 약 217일 정도 소요되었는데 이번 전자입찰을 계기로 120일까지 단축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기존 민원인들이 입찰참여를 위해 직접 방위사업청에 와서 입찰에 참여해야 하는 불편을 제거함으로써 민원 소지 발생을 감소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국외조달 전자입찰 시행의 특이 사항은 해외업체의 직접 입찰참여기회가 확대되어 업무의 투명성 확보 및 향후 기대되는 WTO 정부조달 협정상의 조달시장 개방정책에 부응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를 계기로 국제적 관심인 전자상거래 개방 및 전자보증의 이해를 촉구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 그림 3-2-6 국외조달 전자입찰 〉

라. 향후 정책 추진방향

현재 진행되는 국외조달 전자입찰은 2007년도에는 수리부속을 위주로 진행되지만, 향후 2008년도부터는 장비 및 물자류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외화절감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입찰방식을 개발

하고, 물품의 구매대행력을 강화하여 적기에 좀더 싸게 군수품을 조달할 수 있는 체제로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선진 전자입찰 시스템을 개발하여 동종 우방국가간의 무기체계에 적용할 수 있는 방위사업청 고유의 전자입찰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6. 기 타

가. 종합민원상담실 환경 개선

종합민원상담실의 시설 노후와 공간 협소로 인한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종합 민원상담실의 시설 환경을 개선하고, 면담공간을 확장 하였다. 이에 따라 민원인의 불편을 크게 해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 기능별로 산재되어 있던 민원 업무를 통합하여 조달원 등록, 입찰상담 및 민원제기사항 등에 대한 통합서비스체계를 구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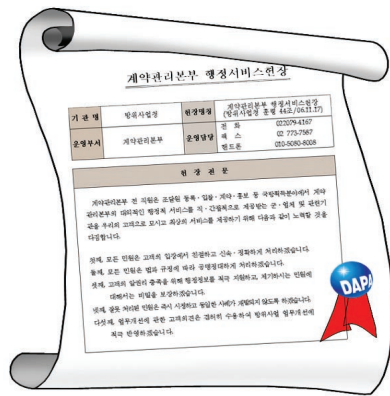


< 그림 3-2-7 방위사업청 종합민원상담실 환경개선 >

나. 조달관련 제도개선

국가계약법 등 조달관련법규 및 제도개선 53건의 제·개정을 통해 업

무의 적법성확보와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켰다. 또한 과거에 업체가 조달원 등록을 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제출하던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법인등기부등본을 생략하고, 담당공무원이 대한민국 전자정부 행정공유센터에서 직접 확인토록 하였으며, 계약관리본부 행정서비스현장을 2006년 6월에 제정 실천함으로써 군 및 관련업체를 우리의 최우선고객으로 모시고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다짐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그림 3-2-8 행정서비스현장 〉

제3장 정보체계 활용성 제고

1. 개 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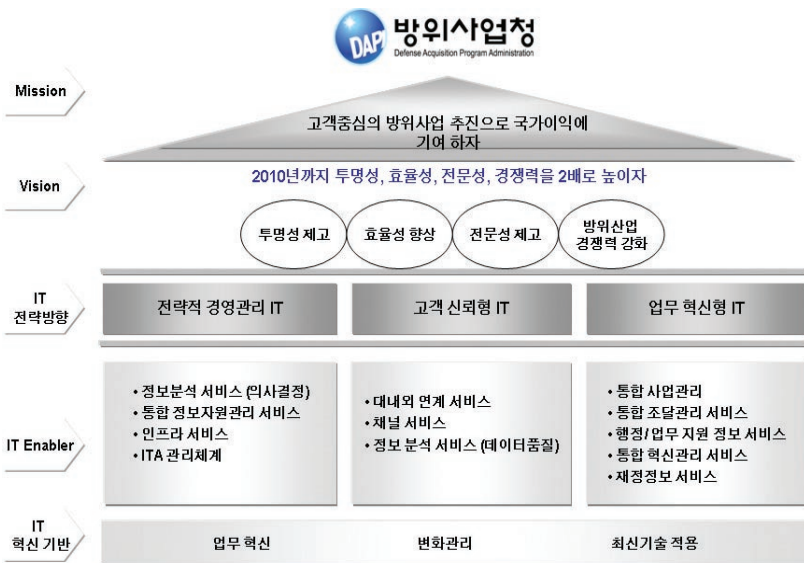
2006년 1월 청이 개청됨에 따라 새로이 제정된 방위사업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과거 8개 기관에서 수행하던 업무를 통합하여 수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통합된 정보시스템에 대한 긴급한 요구와 신규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화 전략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시간과 예산의 제한으로 효과적인 정보 서비스에 애로가 있었다.

개청이전 조직에서 운영하던 정보시스템을 인수하여 새로운 조직과 업무절차에 맞게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1700여명의 청 직원에 대한 정보시스템 사용방법 교육, PC 보급 및 통신망 설치를 단기간에 추진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 또한 1000여명의 직원이 증가함에 따라 서버 용량의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전자입찰 속도 지연 등의 문제점이 대두되었다.

2. 기본 방향

청의 정보화 기본방향은 방위사업청 미션 및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정보화의 체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전자정부 로드맵 추진과 연계한 청 정보화 계획을 추진하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보시스템의 구축을 통하여 정보화사업의 효율성 도모 및 중복투자를 방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청 정보화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정보기술아키텍처를 활용하여 전략적 경영관리, 고객 신뢰 및 업무 혁신형 방위사업청 통합 정보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 그림 3-3-1 청 정보화의 기본방향 〉

이를 통해 업무 속도와 경쟁력 향상, 방위사업청 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들을 위하여 정확한 정보를 실시간 제공과 국민·군·방산업체 등 고객서비스를 단일 창구화(포털, 홈페이지)하고 관리정보를 분석하여 정보 서비스를 질적으로 개선하며,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신속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공통표준, 체계간 상호연계 강화 및 실적연계한 관리지료에 의한 의사결정지원체계를 제공하는 등 정보자원관리를 혁신하여, 청의 전략목표인 투명성 제고, 효율성 향상, 전문성 제고 및 방위사업의 경쟁력 확보를 구현하는 것이다.

3. 주요 개선사항 및 추진실적

개청이후 청 정보화 현황분석, 개선과제 도출 및 향후 청 정보화 목표설정 등 정보화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정보화 관련제도 정비 및 정보기술아키텍처를 수립하여 정보자산 중복투자 방지, 정보화사업의 효율적 추진, 상호운용성 확보 등 사업의 체계적 추진과 효율적 관리가 가능한 기반체계를 마련하였으며, 전자결재 등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PC, 네트워크 및 서버 등 정보기반체계를 확충하고, 인사관리 시스템 등 10여개의 정보시스템을 새로이 개발하여 청 업무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지원하였으며, 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의 최적화와 정보보호 강화로 시스템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하여 업무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였다.

가. 청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청의 미션과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정보화의 체계적 기반 마련, 전자정부 로드맵 추진과 연계한 청 정보화계획 추진과 체계적인 정보화구축을 통해 정보화사업의 효율성 도모, 중복투자 방지 및 체계간 연동과 상호운용성 확보 등을 목표로 2006년 8월부터 11월까지 『정보화 전략계획』을

수립하여 청 정보화 현황분석과 정보화 추진의 전략방향을 제시하고, 이행과제 도출 및 우선순위 선정 등 정보화 로드맵과 목표체계를 수립하여 청 정보화의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청 정보기술아키텍처(DAPA-Enterprise Architecture)를 수립하여 청 정보자산의 중복투자 방지, 자원의 재사용, 개발기간 단축, 비용절감 효과 및 상호운용성 확보 등 정보화사업의 체계적 추진과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한 정보기술아키텍처 활용체계 구축을 위한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정보화 대상과 수요를 식별하고 최적의 투자로 체계적 정보화 업무추진과 정보화 추진의 일관성, 효율성 제고를 위한 아키텍처를 구축하였다.

	1단계(2006~2007)	2단계(2008~2009)	3단계(2010~)
업무 혁신형 IT	통합사업관리 서비스 - 표준화 작업, ECMS/SOA도입 - 사업관리구현 국방조달관리 서비스 - 서비스 재배열 - 단위시스템 개선 및 웹 전환 구축 통합행정혁신 서비스 - 업무관리, 지식관리, 기록관리 - 고객관리, 변화관리, 평가관리	통합사업관리 서비스 - 의사결정시스템 구현 - 프로세스 개선기반 구축 국방조달관리 서비스 - 서비스 재배열 - 단위시스템 개선 및 웹 전환 구축 행정/업무 지원 정보서비스 - 통합인사관리, 사이버감사실 구축 - 전자실무위원회 구축 방산진흥 지원 서비스 - 방산 수출입 지원 구축 - 비축물자관리 시스템 구축	방산진흥 지원 서비스 - 방산 사이버 전시관 구축 - 방산 거래장터 구축
고객 신뢰형 IT	채널서비스 - EKP/SSO 구축 - 대민/대군 서비스 구축	채널서비스 - 콜 센터 구축 대내외 연계 서비스	대내외 연계 서비스
전략적 경영 관리형 IT	인프라 서비스 - 서버 통합 통합정보 자원관리 서비스 - 통합관제 및 운영관리 시스템 구축 ITA 관리체계 서비스 - ITA 관리조직/관리지침 - ITA변환 관리지침/활용방안	정보분석 서비스 - 데이터 표준 관리 및 EDW 구축 인프라 서비스 - 고 가용성 확보 통합정보자원관리 서비스 - IT 서비스 관리 컨설팅 및 구축 - 운영관리 시스템 구축	정보분석 서비스 - 지능형 정보검색 체계 구축 인프라 서비스 - 고 가용성 확보 통합정보자원관리 서비스 - IT 서비스 관리 및 운영 관리 시스템 구축
단계별 소요비용	157.6억원	157억원	67억원

〈 그림 3-3-2 정보화 기본계획 〉

나. 정부 개혁과제 추진

국가재정제도의 개편 일정에 따라 2007년 1월부터 예산구조가 사업중심의 프로그램 단위로 전면적으로 개편됨에 따라 2006년 9월부터 청에서 운영하는 조달시스템을 새로운 제도에 맞게 모두 개선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국방통합재정정보체계와 실시간 연계체계를 통하여 자금집행 및 결산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 중점 추진하는 정부업무관리시스템(온나라 시스템)도 2007년 1월부터 정상 가동하여 개인별 업무를 계획 관리하며 실적과 보고서 등을 평가하는 업무관리서비스와 업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생산된 모든 문서가 체계적으로 관리 및 축적되어 기록문화의 정착에 기여하고 업무추진과정에서 생성된 각종 보고서, 활동실적 등을 성과관리와 연계하므로써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있으며,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구현을 위하여 직원들의 참여도 증진 및 동기를 유발하고 업무활동 강화를 위해 개인 및 조직의 성과를 연계 관리하고 직원들의 실제 업무수행 및 결과가 성과로 연계되고 객관적 평가 및 공정한 보상을 통한 업무의욕 고취 및 제도정착과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정착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가 보상으로 환류되어 조직 및 개인의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성과관리체계의 기반을 마련하여 시행중에 있다.

다. 고객중심의 정보 서비스

국민, 방산업체, 조달업체 및 수요군이 편리하게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내용을 보강하고, 정보를 공개하여 국민과 방산업체가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군에서 사용하는 물자와 장비를 조달하는 인터넷 국방 전자조달에 소액 수의계약을 경쟁방식으로 추가 개발하여 방위사업청과 200여개 수요부대의 계약업무에 대한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전자입찰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 입찰참여업체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입찰일시 자동연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입찰참여업체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선하고, 수작업으로 처리하던 국외조달의 운송비와 보험료도 인터넷을 통해 청구토록 개발하여 운송업체가 청을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청구토록 하였다.

특히 2007년 1월부터는 국내조달에만 적용하던 전자입찰을 국외조달품목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국외조달 참여업체가 청에 직접 방문해서 입찰에 참여했으나 앞으로는 인터넷으로 참가함에 따라 국외 및 지방소재 업체의 불편을 해소하게 되었으며, 우선 1단계로 2007년도에는 수리부속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2008년부터는 장비와 물자 등 전반에 걸쳐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그리고 군수품 검사와 계약업체의 대금청구체계도 개선하여 업체가 편리하게 수요 군에 검사를 의뢰하고 대금을 청구할 수 있게 하였으며, 나토(NATO)의 장비목록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개발하여 우리나라 장비와 물자의 고유 재고번호가 국제적으로 사용되어 우리나라 무기체계의 수출 기반을 조성하였다.

라. 행정업무 지원 정보서비스

〈표 3-3-1〉은 2006년에 개발된 정보시스템 및 지원 실적으로 개청과 동시에 전자결재시스템을 가동하여 행정업무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하고 인사관리, 국회정보, 사이버 감사, 혁신, 성과관리 및 다면평가 시스템들을 개발하여 소관부서에서 관련 업무를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인터넷과 인트라넷 웹 메일체계를 구축하여 수요군 및 정부기관과 업무관련 자료를 원활히 교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정보시스템

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사용자가 단일 창구를 통해 편리하게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통합인증체계를 구축 중에 있으며 2007년 4월에 완료 예정이다. 이 외에도 옴부즈만 민원접수 등 177건의 신규 기능을 추가로 개발하고, 전자입찰과 납품대금 청구 등 12,642건의 고객 문의를 안내하는 등 정보시스템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다.

구분	신규 체계 개발	신규 기능 개발	기능 개선	고객 상담/안내
건수	10	177	591	12,642

〈 표 3-3-1 2006년 정보시스템 개발/지원 실적 〉

마. 정보 기반체계 확충

정보 기반체계 운영현황은 〈표 3-3-2〉와 같으며, 예방 정비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장애를 최소화하고 시스템 가동률을 99.52%로 극대화 하였으며, 〈표 3-3-3〉과 같이 기반체계를 확충하고 정비 지원을 통해 사용자의 업무 편리성 향상에 기여하였다.

전자 자료의 대외 무단 반출을 차단하고 개인 책임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문서유출방지 보안체계를 2006년 11월에 구축하였으며, 정보 보안관리에 대한 자체 수준평가를 실시하고 정보 보안점검을 보안기관에서 8회 점검

구분	서버	PC/프린터	상용SW	스캐너	부수장비	내부망
내부망	20대	1,752/317	주장비:15종 사무용:13종	고정 3	144대	UPS 등
외부망	12대	849/103		이동 6		9종12대
계	32대	2,601/420	28종	9대	144대	12대

〈 표 3-3-2 기반체계 운영현황 〉

추진 업무	추진 기간
청 정보화 환경 구축 (개청에 따른 기반체계 확장)	2006.1~4
상용SW도입 (MS오피스, 한글2005)	2006.3
전자정부통합망 설치 (방위사업청 ↔ 행자부)	2006.3~4
화상회의시스템 설치 (사업관리본부장실등 38개소)	2006.5~6
신관 대회의실 data-wall 설치	2006.6~7
PC 도입 설치 (PC 350대, 프린터 149대)	2006.10~11
구관 대회의실 브리핑시스템 교체	2006.10~11
주전산기 도입 설치 (정부업무관리용 등 3대)	2006.11~12
2007 전산장비 정비계약	2006.11~12

〈 표 3-3-3 2006년도 기반체계 주요 추진업무 〉

하여 미비점을 개선하는 등 인터넷과 내부망의 정보보호 강화로 정보체계의 안정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장비운영실에 통합관제실을 설치하여 인터넷 및 내부망의 모니터링을 통해 외부 해커의 침입을 방지하고 있다.

바. 정보화 교육 및 제도 정비

정보화 교육장을 2006년 8월에 설치하여 직원들의 정보화 교육을 전담하였으며,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아키텍처 기반 획득방법론 등 12회의 세미나를 개최하여 정보화 전문지식을 향상시키고, 2006년 8월에는 청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개최하여 우수자는 중앙부처 경진대회에 참가하도록 하여 직원들의 정보화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켰다.

또한 정보화의 체계적인 추진과 운영을 위해 정보화운영규정과 정보화 책임관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청 정보화 추진절차를 정립하였으며, 청 정

보화전략계획 및 정보기술아키텍처를 수립과 관련 제도정비를 통해 청 정보화의 목표체계를 제시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보화 추진이 가능하였고 정보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정보체계 성능관리지침과 장애처리지침 등 5건을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다.

4. 향후 정책추진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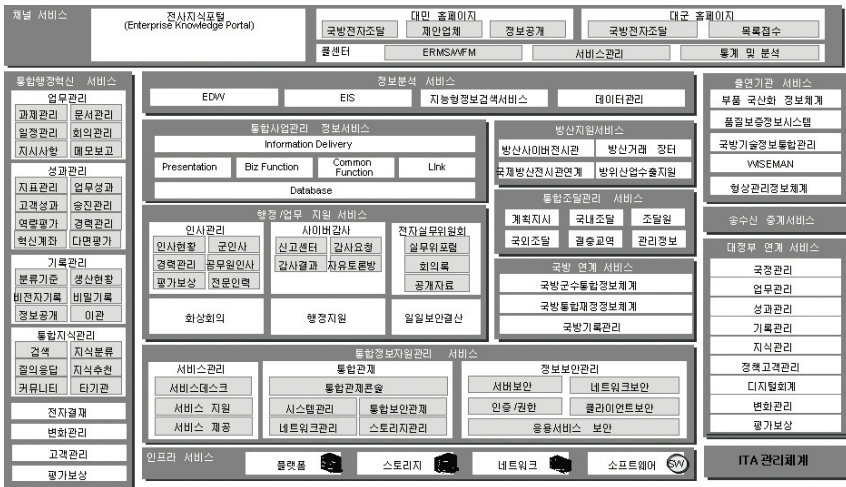
2006년 개청이후 새로운 정보시스템을 개발하고, 기반체계를 확충하는 등 청 정보화를 중점 추진한 결과 2006년 말을 기준으로 청의 정보화는 <그림 3-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보화 발전단계의 4단계에 접근하였다.

			3단계	4단계	5단계
	2단계		상호교환단계	전자거래단계	통합처리단계
1단계	발전단계		이메일, 자료 등 온라인을 통한 의사소통	전자입찰, 전자 대금청구 등 온라인전자거래	단위 시스템간, 외부 기관과 온라인 연동 서비스
착수단계	정보의				
제한적 정보 제공	주기적 현행화				
청의 현 좌표					

< 그림 3-3-3 청 정보화 발전단계 >

이에 따라 2007년부터 정보화가 이행되지 아니한 분야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정보화는 응용체계 개발, 정보기반체계 구축, 고객중심의 정보서비스로 이루어진다. <그림 3-3-4>는 청 정보화의 향후 목표체계도이다.

먼저, 응용체계 개발은 방위력 개선사업의 전분야(일정관리, 비용관리, 위험관리, 형상관리, ILS 등)를 전산화로 관리하고 사업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및 종합분석과 대내·외 고객만족, 효율적인 협업체계 지원을 위한 대민/대군 포털체계 구축 등 방위사업의 효율적 획득관리를 위한 통합사업관리체계와 방위사업의 투명성 제고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성과중심으로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통합행정혁신체계, 새로운 업무에 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지식관리체계를 개발하고, 2008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복식부기, 발생주의 회계제도 적용을 위해 기 운영 중인 노후화된 국방조달관리정보체계를 성능 개선하여 사용자가 편리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다.



〈 그림 3-3-4 청 정보화 목표체계도 〉

그리고 최신 정보기술(IT)을 적용 내부체계를 상호 연계하여 통합하고 정부기관, 기술품질원, 국방과학연구소, 각군 등이 보유하고 있는 부품국산화, 품질보증정보, 국방기술정보통합관리, 형상관리 시스템 등 외부 시스템과 상호 연계하여 업무 효율성 극대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정보기반체계는 서버 및 운영체제를 중심으로 하는 플랫폼, 스토리지, 네트워크, 상용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며 이중에서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주전산기를 이중화하고 백업체계, 원격지 재난복구센터와 통합관제체계를 구축하여 장애와 재난에 대비하는 등 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국민, 군, 방산업체 등 청 고객에 대한 정보서비스는 방산업체 및 조달업체와 인터넷 온라인 협업(Collaboration)등 e-비즈니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정보 서비스를 확대하여, 우리의 고객이 편리하게 방위사업 관련 업무를 전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제4장 분석평가 강화

1. 개 요

기존의 분석평가 체계는 분석평가에 대한 법령적 규정이 다소 미비하고, 획득단계별 분석평가의 책임소재가 모호하였으며, 분석평가 대상사업 선정 및 수행시 해당 기관에서 자체 선정한 기준에 의하여 임의적으로 분석평가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에 따라 획득단계별로 모든 주요사업을 분석평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분석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도 있었다.

2. 기본방향

방위사업청 개청 및 관련 법령 제정에 따라 분석평가의 기본방향은 획득

단계별로 분석평가를 강화하여 방위력개선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의사결정지원을 뒷받침하고, 분석평가의 객관성 및 신뢰성 강화를 통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다.

3. 주요 개선사항 및 추진실적

가. 분석평가 기관별 임무 명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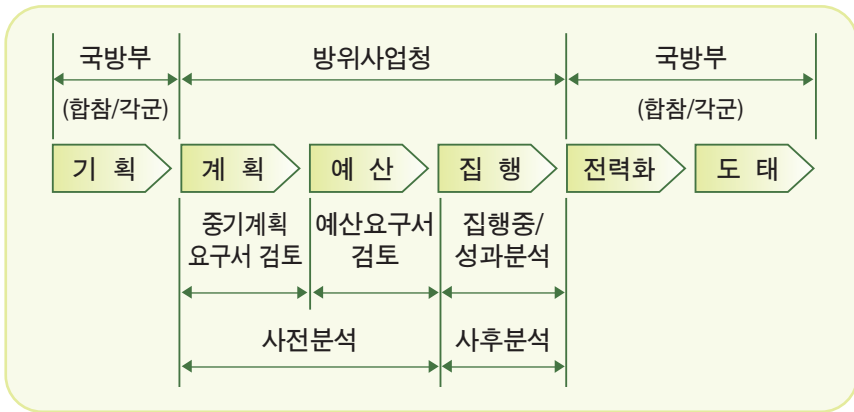
임의적 기준에 의거한 분석평가 대상사업 선정 및 분석에서 탈피하여 방위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 총사업비 관리지침 등 법령에 의거 의무적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평가 기관별 임무의 모호성을 탈피하고자 사업추진 단계별 분석 책임기관 및 임무를 명확히 하였으며, 방위사업청은 획득단계의 분석평가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나. 획득단계 분석평가 강화

자체 분석평가 대상사업 선정 기준에 의거 분석평가를 수행하는 방식에서 방위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및 총사업비 관리지침(2005. 11)에 의거 총사업비 1,000억원(연구개발 500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였고, 분석평가 관련 인원은 기존의 1/3 규모로 축소 편성(국방부/각군 약 80여명 ⇒ 방위사업청 30명) 되었으나, 분석평가 대상사업은 국방부 (2004/2005년) 대비 약 2.5배 증가하여 분석평가 결과의 활용성을 높였으며 예산요구(안) 및 중기계획서(안)에 대한 검토를 강화하여 분석평가 건수는 기존 각각 25~30건 대비 각각 53/54건으로 약 1.8배 증가하였다.

구 분	국 방 부(분석평가관실)		방위사업청(분석시험평가국)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계획)
사업분석	9건	15건	30건	32건
비용분석	4건	12건	12건	28건
계	13건	27건	42건	60건

〈 표 3-4-1 분석평가 실적 〉



〈 그림 3-4-1 획득단계 분석평가 강화 〉

다.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 강화

연구용역 예산 추가 확보를 통해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연구용역을 확대 시행하였으며, 2006년의 경우 총 42건 중 자체분석 23건(55%), 연구용역 19건(45%)을 실시하였다.

구 분	국 방 부	방 위 사 업 청	
	2005년	2006년	2007년
연구용역 예산	약 4.5억원	4.9억원	20.4억원
연구용역 건수	7건	19 건	23건

〈 표 3-4-2 2006년 연구용역실시 건수 〉

연구용역결과보고서 평가시 내부 평가위원에 의한 평가에서 탈피하여 외부 자문(전문)위원을 활용함으로써 평가결과 관정에 대한 객관성 및 신뢰성 제고하였으며 군 연구기관 이외의 연구용역 연구기관 발굴 및 활용을 시도하고 있다.

한편, 사후분석 추진을 강화하여 국방부에서 연간 0~2건 분석하던 것을 2006년 8건 분석함으로써 향후 유사사업 추진간 적용 가능한 교훈을 도출하여 사업추진을 지원하였다.

라. 분석평가 수행체계 개선

사업 초기단계부터 효율적인 사업추진 지원을 위해 선행연구, 사업추진 기본전략(안) 등에 대한 검토를 지원하였으며 단순 보고방식의 일방적 분석평가 수행에서 세미나 방식의 참여형 분석평가를 추진하였다. 즉, 해당 IPT 및 군의 실무담당자들이 참석하여 단순한 보고 및 토의가 아닌 세미나 방식의 중간 및 결과보고를 추진함으로써 분석평가 결과의 질 향상 및 소요군 만족도 제고에 기여하였다.

마. 교육훈련 강화, 기법 및 Tool 도입, 세미나 개최 추진

분석평가 관련 자체교육은 6회, 외부 전문가 초빙교육은 9회 실시하였으며, 획득관리 및 분석평가 관련 교육 이수 및 자격증 취득을 통한 전문 분석능력 강화를 위해 2006년에는 사업관리 기본과정 8명, 사업관리 전문과정 10명, 사업관리 특별과정 5명이 이수하였고, 국방사업관리사 자격증은 6명이 취득하였다.

또한, 과학적 분석기법 적용을 위해 전산모델 Tool인 PRICE 모델을 도입, 운용중에 있으며, 전산모델 비용분석을 위한 보정지침 연구 등 분석

평가 방법론을 연구하였다.

한편, 비용분석 세미나 개최(KIDA와 공동)를 통해 국방 비용분석 담당자들간의 연구성과 공유 및 토의를 실시(2006. 12월)하였으며, 사업분석 관련 분석평가 기법 및 제도발전을 위한 사업분석 세미나 개최 추진하기 위한 필요 예산을 확보하고 2007년 하반기 제1회 사업분석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4. 향후 정책 추진방향

향후 분석평가의 강화를 위해 분석평가 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 인력, 수행체계에 대한 중장기 목표를 수립하고, 분석평가 전문요원 양성 및 보직자격제도 시행을 추진하며, 분석평가 수행 및 환류의 과학화와 전문화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한다.

제5장 EVMS/CAIV 체계 구축

1. 개 요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은 사업기간이 매우 긴 사업으로서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으로 인한 비용상승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계획된 일정과 기술적 요구성능을 충족하고 초과비용 발생을 억제하는 것이 연구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주요 관건이다. EVMS(Earned Value Management System : 성과관리 시스템)는 성과가치를 활용하여 비용, 일정 및 기술적 성능과 위험을 통제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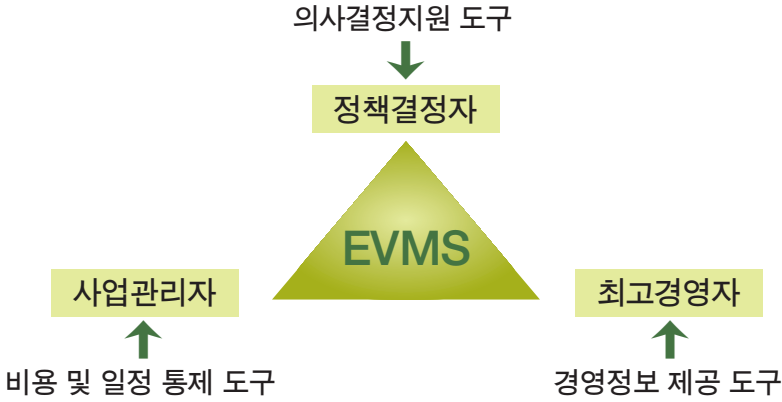
는 사업관리시스템이다. 그래서 한국형헬기 개발사업(KHP: Korea Helicopter Program)의 비용 및 일정을 통제하고, 기술적 성능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EVMS의 적용이 요구되었다.

한국형 헬기 시제품 개발이 본격적으로 착수되는 시점에서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연구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비용 및 일정을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였다. 사업관리의 도구들 중에는 이미 미국, 호주 등에서 국방 연구개발에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그 효율성이 검증된 EVMS를 KHP 사업의 비용 및 일정 통합관리 시스템으로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KHP 사업이 국내에서는 최초로 국방 연구개발 사업에 EVMS를 적용하는 사업이다 보니 외국에서 수행하고 있는 성과관리 절차를 그대로 접목시키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다.

아무리 좋은 제도나 방법도 한국적 특성을 무시하고 받아들이고자 할 때, 그 결과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 따라서 한국적 특성에 적합하면서 최대한 현행 제도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존의 EVMS 적용절차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였다. 또한, 개발수행간 양산단가 및 운영유지비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CAIV(Cost As an Independent Variable ; 비용관리기법)를 우리 실정에 맞게 도입하여 개발시 양산단가 및 운영유지비를 고려하여 개발하게 함으로써 개발 이후의 경제성을 사전에 관리할 필요가 있었다.

2. EVMS/CAIV개념 소개

가. EV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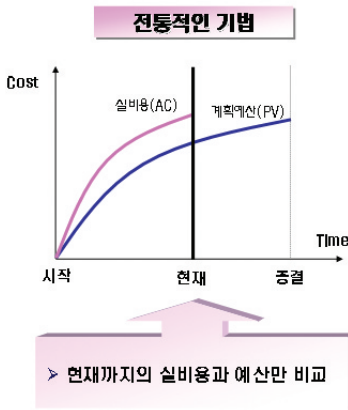
〈 그림 3-5-1 EVMS의 정의 〉

EVMS는 〈그림 3-5-1〉과 같이 사업관리자, 최고경영자 및 정책결정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해당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계획대로 종료할 수 있는지, 집행되고 있는 예산은 적절한지, 그리고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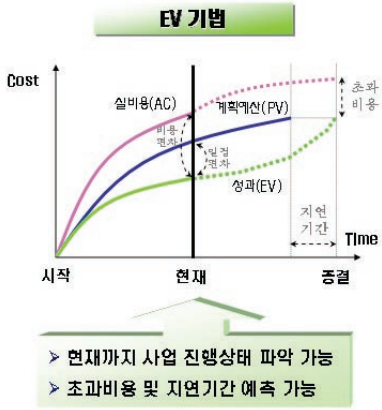
전통적인 사업관리 기법은 일반적으로 1개의 계획요소인 계획예산(PV : Planned Value)과 1개의 측정요소인 실비용(AC : Actual Cost)으로 구성되어 있다.

오늘날까지 널리 사용되고 있는 AC와 PV 간의 단순 비교는 실제 투입된 비용 대비 최초 계획비용 간의 편차값만 제공할 뿐이다. 따라서 이러한 전통적인 사업관리 기법을 통해서서는 실제 사업을 통제·관리하는 사업관리자(PM), 기업이윤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최고경영자(CEO) 및 국가의 주요정책을 결정하는 정부 정책결정자들에게 해당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계획대로 종료할 수 있는지, 집행되고 있는 예산은 적절한지, 그리고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지 등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을 전혀 줄 수가 없다.

결국,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오랫동안 노력해온 주요 선진국들은 성과가치(Earned Value)라는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해법을 찾게 되었다. <그림 3-5-2>와 <그림 3-5-3>에서 보는바와 같이 EVMS은 전통적인 사업관리의 구성요소인 실비용과 계획예산에 1개의 추가적인 측정요소인 성과가치를 추가시킴으로써 투입비용의 적절성 여부, 일정진척 정도 등 특정시점에서의 사업 진행상태 파악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할지도 모를 사업 목표비용 대비 초과비용, 사업 지연기간 등 미래의 비용 및 일정에 대한 문제점들을 조기에 식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그림 3-5-2 전통적인 기법 >



< 그림 3-5-3 EVMS 기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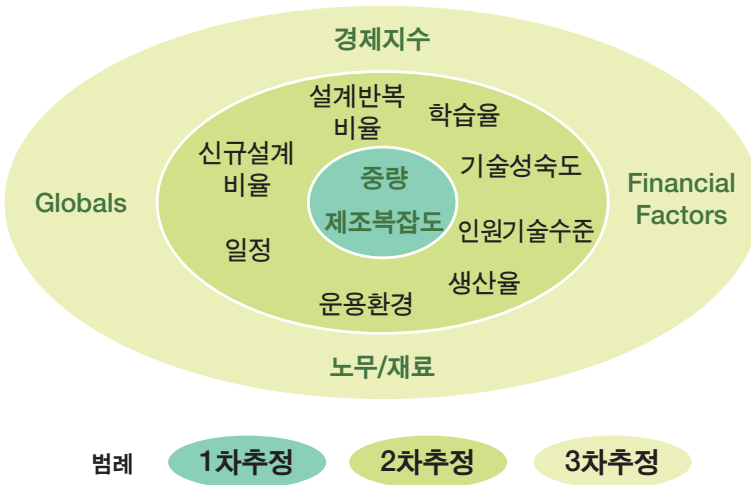
나. CAIV

CAIV(비용관리기법)는 성과관리와 마찬가지로 많은 예산과 오랜 기간을 투입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특히 개발단계의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책임자 또는 최고경영자라면 누구나 “경제성이 있는 체계의 개발 가능성”, “양산단가의 적절성”, “운영유지비의 적절성”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선진국에서는 수명주기비용을 주요 설계변수로 간주하고 이를 성능 요구조건과 같이 간주하여 지속적

으로 관리하는 비용관리를 활용하고 있다.

비용관리는 체계에 대한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비용목표를 정하고, 이러한 비용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체계를 관리해야 한다는 미 국방성의 새로운 획득전략이고 제도의 개혁으로, 운용요구사항을 정의하고 국방체계를 획득하고자 할 때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비용목표를 결정하기 위한 전략이며 이러한 비용목표에 도달하고자 관리하는 전략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PRICE 모델을 적용하여 비용을 추정하고 있다.

PRICE 모델은 다음 <그림 3-5-4>와 같이 3단계의 개발 및 생산 비용추정 과정을 통하여 비용을 추정한다.



< 그림 3-5-4 PRICE 모델의 비용추정 과정 >

1단계 : 1차 비용추정

생산품의 중량과 제조 복잡도를 중요한 변수로 취급해서 핵심적인 비용

추정 관계식으로부터 비용추정을 시작한다.

2단계 : 2차 비용추정

채택된다. 운용환경, 설계비율, 기술수준, 각종 일정변수, 개발 변경 사항 등을 고려해서 1차 추정에서 계산된 비용합정규성을 갖는 비용 추정 값에 현실여건을 반영하는 과정으로 다시 설계를 한다거나, 운용환경, 기술수준 등이 변하는 경우에 비용-비용간 관계나 추가적인 비용관계식이 수를 수정하여 비용을 추정한다.

3단계 : 3차 비용추정

추정된 비용을 노동력, 재료, 기타 직접 비용요소로 분배하고, 경제여건, 인플레이션 등을 고려하는 과정이다. 추정된 여러 개의 CER¹⁰⁾ (Cost Estimating Relationship : 비용추정 관계식)에 전체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승수를 적용하는 과정이며 승수는 Global 입력 변수¹¹⁾, 경제 승수 그리고 노무비 및 재료비 변수로 구성된다.

3. 주요개선사항 및 추진실적

현 제도상에서는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을 관리하는데 사업관리자 (PM)의 입장에서 애로사항이 많았다. 이전까지는 ① 사업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 · ② 계획대로 마칠 수 있다 · ③ 들어간 “돈”은 적절하게 사용되었나 · ④ “돈”이 얼마나 더 필요한가 · ⑤ 개발 간 양산단가를 고

10) CER 방정식은 하나 이상의 독립변수를 포함하며, 비용을 추정하는 식으로 사용

11) 각 엘레먼트는 물론 시스템에서 하부 시스템전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변수

려하여 개발하고 있는가 · ⑥ 개발 후 운영유지에 필요한 “돈”은 얼마인가 · 등에 대하여 해답을 줄 수 있는 절차나 도구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번에 국내에서는 최초로 KHP사업에 EVMS/CAIV를 적용함으로써 사업관리자는 사업의 진행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도구를 얻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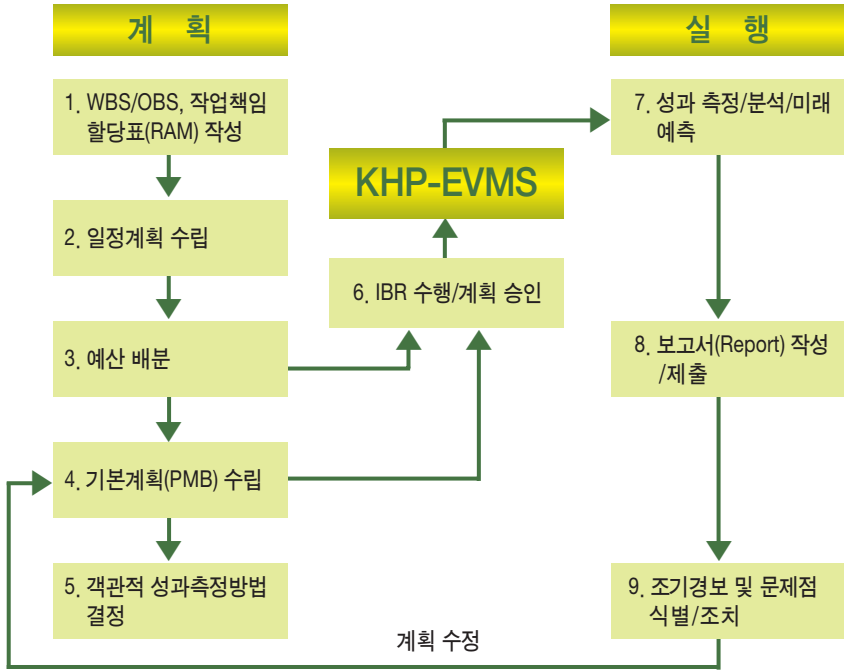
KHP 참여업체들과는 여러 차례의 그룹별 토의 과정을 통하여 일방적인 지시가 아닌 협의에 의한 KHP EVMS/CAIV를 구축하게 된 것이 주된 성과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참여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었다. 또한, 사업단은 EVMS/CAIV를 정착시킴으로써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에서 개발 일정 및 비용, 양산단가 및 운영유지비를 체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고 본다.

가. EVMS 체계구축

KHP 사업을 위한 EVMS의 적용절차는 <그림 3-5-5>와 같다. KHP사업에 적용하기 위해 고안한 EVMS 적용절차는 계획과 실행 부문을 크게 9 단계로 나누고 필요시 계획수정을 할 수 있도록 구축하였다.

EVMS 적용절차를 살펴보면 우선, 1단계에서 EVMS의 가장 기본요소인 작업분할구조(WBS)와 조직분할구조(OBS)를 작성하여 작업책임할당표(RAM)를 구축, 해당 작업들에 대한 책임을 할당하여 통제계정(CA)을 설정한다.

2단계에서 각 통제계정별로 해야 할 작업들을 식별한 뒤 세부적인 일정 계획을 수립하고, 3단계에서는 일정계획이 완료된 각각의 작업에 대해 통일된 기준의 예산배분을 수행한다. 4단계에서는 모든 작업에 대한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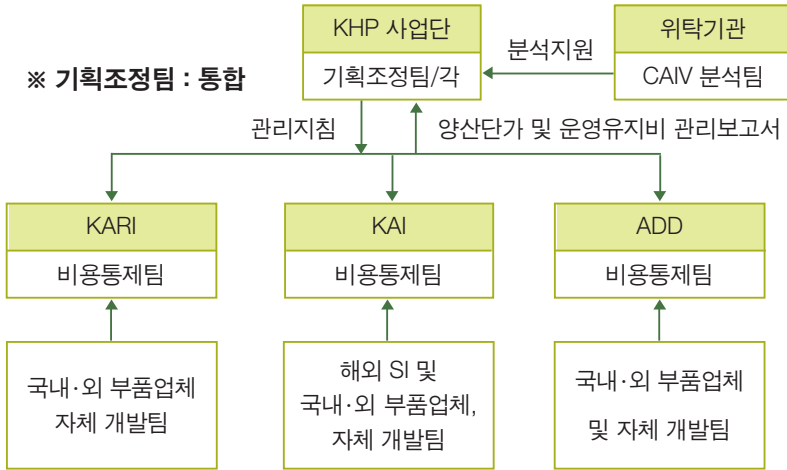
〈 그림 3-5-5 KHP의 EVMS 적용 절차 〉

산배분이 완료되고 나면 통제계정별, WBS별 혹은 KHP사업의 전체에 대한 성과관리기준선(PMB)을 수립한다. 5단계에서는 수립된 성과관리기준선에 대한 객관적인 성과 측정방법을 결정한다. 6단계에서는 통합기준선검토(IBR)를 수행하여 통제계정별로 작업범위, 계획예산, 성과측정 방법 등에 대한 사업단의 승인 절차를 밟는다.

7단계에서는 통제계정별로 성과를 측정, 분석한 후 향후 사업을 예측한다. 8단계에서 주관기관들은 통제계정별로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월별로 사업단에 제출한다. 마지막으로 9단계에서는 모든 통제계정에 대한 성과보고서를 사업단에서 검토·분석하여 문제점을 식별하고, 필요시 조기 경보를 발동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필요시 성과관리기준선에 대한 계획을 수정한다.

나. CAIV 체계구축

KHP 사업의 양산단가 및 운영유지비 관리를 위해 CAIV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적용 절차는 아래 그림과 같다.



〈 그림 3-5-6 CAIV 적용 절차 〉

사업단에서는 작업분할구조(WBS)를 최신화하여 양산단가 및 운영유지비 관리품목을 결정하고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개발주관기관에 양산단가 및 운영유지비 목표비용(안)의 제출을 지시한다.

개발주관기관은 체계 및 구성품별 양산단가 및 운영유지비 관리품목에 대하여 양산단가 및 운영유지비 목표비용(안)을 계약체결 후 2개월 이내에 사업단에 제출한다. 한편, 사업단에서는 개발주관기관으로부터 양산단가 및 운영유지비 목표비용(안)을 접수하여 1개월 이내에 목표비용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한 후 목표비용을 확정 및 승인한다. 개발주관기관에서는 목표비용 확정 후 기본설계까지는 반기별로, 기본설계 이후는 분기별로 양산단가 및 운영유지비를 추정하여 양산단가 관리보고서 및 운영

유지비 관리 보고서를 사업단에 제출한다. 개발주관기관은 자료미비 및 일정 미 준수 시에는 사유서를 첨부하고, 사유가 인정되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한 조치사항을 수용한다. 사업단에서는 양산단가 및 운영유지비 대책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문제점 식별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4. 향후 정책 추진방향

현재 방위사업청에서는 KHP사업에 EVMS/CAIV를 적용하는 것에 한발 더 나아가 국방과학연구소와 협조하여 EVMS Tool을 자체개발 중이며, 향후 통합사업정보관리체계에 포함하여 청 대상사업을 관리하는데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제6장 사전 법률 검토제도 시행

1. 개 요

방위사업 집행 시 적법성을 확보하고 그 바탕위에 투명성을 기하여 궁극적으로 방위사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사전 법률 검토제도를 시행하였다.

2. 기본방향

사전 법률검토제도는 방위사업의 계획단계부터 종료시까지 전 과정에 걸쳐 적법성을 확보하여 이해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며, 사업과정 중

불가피하게 발생한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였다.

3. 주요개선사항 및 추진실적

우리청은 이러한 사전 법률검토제도를 위해 중앙행정관서 중 최대 규모인 국내변호사(법무관) 8명, 국외변호사 3명 등 13명의 인력을 확보하였고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위해 8개 분야별 지원전담제를 운영하였다.

이에 따라 사업추진 기본전략 36건, 제안요청서 작성 및 제안서평가 42건, 주요의사결정사항 397건, 계약서 2858건 등의 법률검토실적을 달성하였다.

위와 같은 공식통계 외에도, 상시 법률지원 전담제를 통해 60개 통합사업 관리팀과 20개 계약팀 담당자들이 수시로 제기하는 각종 이슈들에 대해 수시상담을 통해 법률적인 문제가 사전에 걸러지는 부분이 많다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성과이다.

위와 같은 활동을 통해 적법하고 합리적 업무수행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방위사업절차의 적법성과 투명성이 함양되어 개청 이전보다 분쟁이 대폭 감소하였다(개청 전년대비 2006년 소송건수 41%감소).

4. 향후 정책 추진방향

우리청은 향후에도 법무업무자료를 DB화하고 사업집행초기부터 적극적인 법률검토를 함으로써 사전 법률검토제도를 정착시키도록 할 예정이다.

Q & A

Q 무기체계 획득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소요군의 참여가 배제되어, 오히려 방위력 개선사업이 왜곡될 소지가 있지 않나요?

A 무기체계 획득과정에서의 소요군의 참여는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무기체계 획득과정에서 소요군의 참여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JMS(합동군사전략서), JSOP(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을 통해 정확한 ROC(작전요구성능)와 소요량, 전력화 시기를 제시 하고 방위사업청은 합참의 소요를 토대로 연구개발 또는 구매 방법을 제시하는 큰 방향으로 상호 역할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방위사업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는 육·해·공군 참모차장과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19명의 위원중 현역 군인이 5명 예비역 장성까지 포함하면 11명이 군출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방위사업청 개청이후의 큰 변화는 과거 육군 전력단, 해군 조함단, 공군 항사단에서 각군별로 수행하던 임무를 방위사업청에서 통합하여 수행함으로써 특정군의 목소리를 배제 하고 통합 방위력 건설을 위한 토대를 구축한데 있으므로 방위력 개선사업이 왜곡될 소지는 더욱더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Q & A

Q 현 정부조직의 운영방식으로 볼 때, 통합사업관리제는 단순히 기존의 '과' 형태의 조직이 '팀'으로 명칭만 바뀐 것일 뿐 시행이 불가능한 것 아닌가요?

A 방위사업청의 통합사업관리제(IPT)는 정부조직의 팀제와는 달리 방위력개선 사업관리 분야에 한정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매트릭스 형태의 조직구조입니다.

조직 편성과 해체는 방위력개선 사업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즉, 사업 결정되면 업무를 배분하고, 사업에 따른 신설팀 편성 등 재편을 하며, 업무수행후 사업이 종결되면 팀을 축소 혹은 해체하게 되는 유연성 있는 조직구조입니다.

인력운영 측면에서 보면 전문분야별 인력Pool 개념을 적용하여 사업단계별 융통성을 최대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2006년도 통합사업관리제 조기정착을 위하여 구성원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직무교육 강화, 자율권 확대를 위한 권한 위임을 향상, 사업별 추진실적에 따른 차별화된 보상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효율적 사업관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제4편 방위사업추진의 전문성 제고

제1장 인력구조 개선	123
제2장 획득전문인력 교육체계 정립	125
제3장 보직관리제도	132
제4장 인사관리 로드맵 수립	137



제4편

제 4 편 방위사업추진의 전문성 제고

제1장 인력구조 개선

1. 개 요

방위사업은 주로 장기사업(7~10년)인데 반하여 단기(2~3년)로 순환보직하는 현역군인 위주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전문성 축적 및 효율적 사업관리가 제한되었던 점과 방위사업관리의 주체인 국방부, 합참, 각군 및 조달본부의 구성원에 대한 신분체계의 다양성 등으로 체계적인 획득전문인력의 관리가 제한됨에 따라 개청 시 인력을 현역군인과 공무원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민간에 의한 전문성의 지속적 활용을 위한 공무원의 비율 확대가 필요하였으나 개청 초기의 방위사업관리의 안정화를 위하여 현역군인 대 공무원의 비율이 5:5로 구성되었으며 장기적으로 현역군인의 비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인력구조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고, 또한 육·해·공 3군 간의 인력구조에 있어서도 육군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 및 인력편중 현상을 해소할 필요가 있었다.

2. 기본방향

방위사업청은 개청 시 안정적인 인력구조에 의한 방위사업 수행과 장기보임 순환할 수 있는 공무원의 비율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개청 하였으

며, 개청 초 획득전문인력의 제한으로 공무원과 현역군인의 비율을 49:51로 설계하였으며, 국방기술품질원을 포함 시는 민·군 비율이 60:40로 하였으며, 육·해·공군 3군간의 비율은 각군의 인력상황을 고려하여 군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4:3:3 비율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정책방향의 근거는 개청 전 2005년 10월 국방부장관이 주재하는 군무회의시 방위사업청의 공무원과 현역군인의 비율을 연차적으로 국방부 본부 문민화 수준까지 확대하기로 의결하였다. 당시에 제정중인 국방개혁기본법(안)에는 국방부 본부의 문민화 목표를 공무원 비율을 70% 까지 높이는 것이었다. 방위사업청의 각 군별 인력구성도 육·해·공 3군 간의 비율을 당초 1:1:1로 설계하였으나, 군무회의의 과정에서 개청 초 각 군의 인력을 고려하여 2008.12월까지 육·해·공군의 비율을 4:3:3으로 구성하는 방안으로 의결하였다.

이러한 정책방향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문민화 목표는 국방부 본부 수준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며 문민화에 따른 3군간의 비율을 재조정할 계획이다.

3. 주요 개선사항 및 추진실적

방위사업청의 문민화를 위해서는 현역군인의 정원을 공무원 정원으로 전환하여야하는 과정이 요구되며, 공무원의 정원에 대한 인가는 행정자치부와 협의의 필요로 하여 2007년 소요정원을 행정자치부에 요구 시 문민화를 포함하여 요구하였으며 2006년 9월 기획예산처를 포함하여 최종 협의결과 13명의 현역군인 정원을 공무원 정원으로 전환하는 것을 확정하였다.

따라서 2007년의 문민화는 13명에 대하여 3군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우선적으로 육군직위에 대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방위사업 업무수행 측면, 3군간의 균형과 조직문화 및 현역군인의 인사상 불이익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차별 문민화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4. 향후 정책 추진방향

방위사업청의 문민화는 조직구성원 모두에게 지대한 관심과 이해가 엇갈리는 주요 정책사안으로 다수 조직구성원의 공감대와 정책적인 결정이 요구되며, 방위사업청의 인력구조는 공무원과 현역군인이 공존할 수 밖에 없는 조직특성으로 문민화 목표달성을 위한 연차적 추진이 필요하고, 문민화에 따른 현역군인 정원의 공무원 정원화는 행정자치부 및 기획예산처와 지속적인 공감대 및 협의를 통하여 연차별로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연차별 문민화 계획은 장기과제로서 청 직원의 공감대 형성과 방위사업청에 근무 중인 현역군인의 인사상 불이익이 최소화되어야 하고, 공무원과 현역군인의 조화로운 조직문화가 형성 될 수 있도록 방위사업청 직위에 대한 실질적인 직무분석을 통하여 공무원과 현역군인의 역할을 명확히 함으로서 조직의 업무성과가 창출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제2장 획득전문인력 교육체계 정립

1. 개 요

방위사업은 대형화, 첨단화, 장기화 및 고가화 추세(특성)로 인하여 획득인력의 전문성 확보는 방위사업 추진에 있어서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와 함께 국익 창출을 위한 핵심과제로 인식되어 청 전략목표로 설정하였으며, 개청 전에는 획득정책, 사업관리, 방산진흥 및 계약관리 등 업무 범위가 국방부 내부 전문기관별로 분산되어 있었으나, 개청 후에는 8개 전문기관의 통합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다수의 신규 보직자가 양산되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직무교육 수요가 급증하여 국방대학교 등 기존 교육과정을 확대 활용하면서 사업관리 특별교육과정 청내에 개설하여, DAPA ACADEMY 운영, 사업관리 자격증 취득반 운영 및 본부별 자체 직무교육 등 다양한 전문교육을 실시하였다. 다만, 이러한 다수의 직무교육이 중·장기 교육발전 계획이나 체계화된 교육훈련시스템을 토대로한 체계적인 직무전문교육이 아니라 새로운 보직자 중심의 직무교육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방위사업법령에 의한 보직자자격제도(또는 경력관리제도 : CDP) 및 상시학습제도의 시행과 연계된 전문성 향상 프로그램(핵심인력 양성, 중장기 교육훈련로드맵 등이 포함된 방위사업청 교육훈련체계)을 마련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 기본방향

방위사업 전문성 향상 프로그램은 핵심인력 양성 및 중장기 교육훈련로드맵 등이 포함된 방위사업청 교육훈련체계를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연도별 순차적으로 방위사업 전문교육 과정개발 및 시설 구비 등 교육환경을 갖추어 운영하면서 장기적으로는 방위사업 전담교육기관 설립 추진을 기본방향으로 정하였다.

이에 따라 교육훈련체계의 수립은 보직자격제도 및 상시학습제도와 연계한 교육체계 종합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우리 청의 중·장기 인적자원 육성전략과 핵심가치/인재의 창출을 목표로 하며,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교육과정 개발, 강의교수, 운영인력 및 교육시설을 확보하면서 보직자격제도 운영규정 및 획득전문 교육훈련 운영규정 등 관련 기준에 대한 제도화를 통해 체계적으로 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2007년부터 상시학습제도의 도입에 따라 교육훈련시간 성과계약과 개인별 자기개발 계획 수립을 근간으로 4급 이하 공무원(군인 포함)은 연간 70시간(2010년 100시간) 이상 교육 이수 의무를 부과하게 되었으며, 교육과정 개발에 관한 원칙은 수요가 많은 전문교육과정은 자체 개발하고, 소수의 다양한 유형의 전문과정은 외부 위탁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이 되도록 준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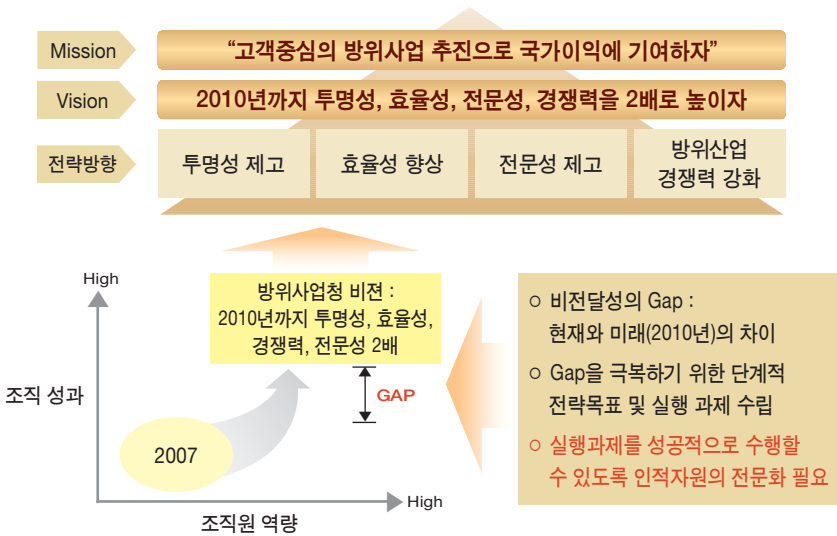
그 밖에도 해외획득 교육기관과 교류 등으로 획득전문교육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며, 중장기적으로 자체 전문교육기관 설립을 통해 국방부·합참·각군·출연기관·방산업체 등 모든 획득인력에 대한 통합 획득전문 교육 실시를 추진하고 있다.

3. 주요 개선사항 및 추진실적

국방대학교, 민간 및 해외 위탁교육 등 기존의 교육과정을 적극 활용하면서 단기간 내 전문성 확보를 위해 사업관리 맞춤형 특별과정/야간 특별과정 청 내 개설(3~11월), 사업관리 자격증 취득반 개설(9~12월), DAPA ACADEMY (7~12월) 등 다양한 직무전문교육 실시한 결과, 2006년은 개청과 함께 안정된 획득업무 추진에 기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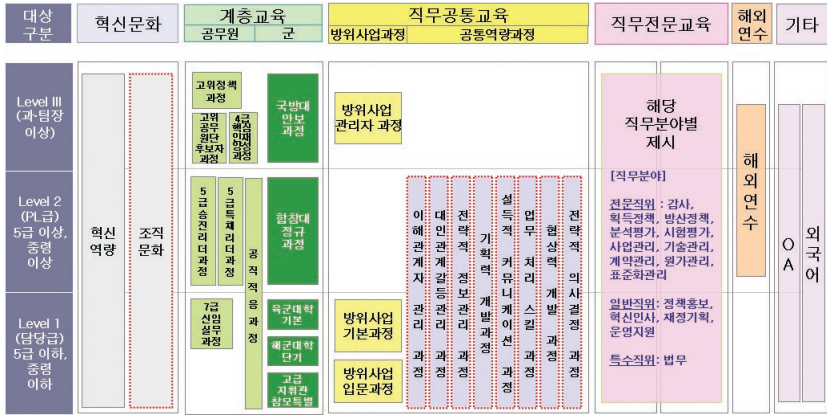
NO	과 정 명	과정수	교육 기관/내용	인원
1	국방사업관리 정규/특별 과정 등	81	국방대학교, 각군대학 등	1,562
2	PMP, E-test, ITS 등	13	청 직무공개강좌 등	727
3	DAPA ACADEMY	28	팀장의 혁신 Know-How 및 사례 전수	4,200
4	사업관리 연구발표	30	사업관리 Know-How 전수	3,000
5	국외교육 선발 (직무/학위과정)	17	선진국(미/영국)	23
	합 계	169	합 계	9,512

〈 표 4-1-1 2006년 국내·외 직무교육과정 이수현황 〉



〈 그림 4-1-1 교육·훈련 체계 전략 Map 〉

2006. 9~12월에 방위사업 교육훈련체계 마련을 위하여 전문업체(PSI컨설팅)에 연구개발 용역연구를 의뢰하여 내·부 환경분석, 역량 모델링, 수요조사, 해외획득전문교육기관 벤치마킹, 새로운 교육체계 수립, 인적자원개발 인프라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중간/최종보고를 통해 방위사



〈 그림 4-1-2 방위사업청 교육훈련 체계도 〉

업청이 나아 갈 교육훈련 방향과 체계 수립을 완료하였다.

4. 향후 정책 추진방향

방위사업청에서는 현재 기존 교육체계 현황과 조직 이념, 인력개발 방향 및 역량모델에 근간하여 마련된 새로운 교육체계를 토대로 신규 교육과정 개발 등 내실있는 방위사업 직무전문 교육운영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획득인력의 전문성 향상과 조직의 비전 달성을 지원하는 핵심 파트너로서, 세계 일류 수준의 국방획득 전문교육을 지향해야 할 위치에 있다.

향후 이러한 정책방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직자격(경력, 학위·자격증분야 포함) 규정’ 제정 및 ‘방위사업 직무전문 교육훈련 운영 규정’ 제정 등 교육훈련체계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또한 중단기 연도별 교육계획과 순차적 교육과정 개발 계획에 따라 긴급



〈 그림 4-1-3 중 · 장기 교육체계 발전 로드맵 〉

· 필수 과정을 위주로 방위사업 입문/공통/관리자 과정, 10개 직무분야별 전문교육과정 (LEVEL I, II & III)을 개발대상으로 하여 2007년에는 8개 직무전문 교육과정 개발과 함께 교육시설 및 강의 겸임교수를 확보할 것이다.

구 분	2007년	2008 ~ 2009년
청내 개설	· 방위사업 입문 · 방위사업 관리자 · 프로젝트관리기본 · 계약관리기본 등 총 8개	· 방위사업 기본 · 획득정책기본 · 계약관리기본 · 프로젝트관리기본 · 시험평가 고급 · 계약관리 고급
국방대	· 방위사업기본 · 정보체계감리 · 프로젝트관리기본 등 총 13개	· S/W 기초 · 연구개발관리 · 비용분석기본 ※ 추가개발 별도협의
정부 민간	· 감사기본 · 무역실무 등 총 7개	· S/W테스팅/품질관리 ※ 추가개발 별도협의
민간 대학 기관	· 사업분석기본 · 프로젝트관리중급	· 분석평가중급 · 분석평가 고급 · 방산정책중급 · 원가관리 중급 · 프로젝트관리고급 등 8개

〈 표 4-1-2 연도별 과정개발 계획 〉

그리고, 청내에 방위사업 입문과정부터 순차적으로 주간 8개, 야간 4개 직무전문 교육과정, 정부/민간 위탁과정, 민간대학 위탁과정 및 국방대 과정 추가과정 개설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기관	과정수	직무공통과정	직무전문과정
방위사업청 운영	8개	· 방위사업 입문과정 · 방위사업 기본과정 · 방위사업 관리자과정	획득정책기본과정 등 5개
국방대 운영	14개	국방사업관리 기본과정	프로젝트관리과정 등 13개
정부 · 민간위탁	7개	—	감사기본 등 7개
민간대학 협의의 운영 과정	4개	—	사업분석과정 등 4개

〈 표 4-1-3 교육기관별 전문교육과정 운영계획 〉

또한, 보직자격제도가 전면 시행되는 2010년까지 전문직위 보직자를 위한 바쁜 교육일정을 소화해 내야만 할 것이며, 이러한 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e-Learning시스템을 포함한 인력자원개발(e-HRD)시스템을 2007년 내 도입하여 On-Off Line 교육이 혼합된 Blended 교육을 도모할 것이다.

한편, 무역실무과정, 원가관리사과정, 함정중급과정, 함정설계특별과정, IT기반프로그램 콘트롤러 과정 등 민간위탁교육, 국내 개설 기술분야 전문교육 과정 및 선진국 위탁교육(연 23명 → 연 30명) 확대 등 50여개 과정을 운영하여야 하므로 교육훈련 강화 추진 전략은 긴요하고 우선 실현 가능한 사항을 중심으로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그리고, 선진국의 국방 획득전문교육기관 (미국 DAU, 영국 DPMT, 프랑스 CHEAr 등) 우수 교육사례 벤치 마킹, 상호 교육협력 MOU 체결 추

진, 국방획득 분야의 국제경쟁력을 갖춘 전문가 양성을 위한 해외 파견교육 확대 및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수요원의 능력향상을 위해 교수요원 상호교류 등 선진국과 교육훈련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2010년 이후에는 교육훈련 대상을 청 직원에서 청 및 출연기관, 국방부, 각군, 방산업체 등 모든 획득업무 관계자로 확대하고, 국내외 타 교육과정과 차별화된 방위사업 전문교육과정 개발을 통해 방위사업의 전문화를 도모하고 방위사업 추진의 효율성과 국익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 전문성 향상을 위해 방위사업교육원을 개설하는 등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제3장 보직관리제도

1. 개 요

방위사업청은 개청 초기에 국방부 등 8개 기관에서의 다양한 신분 구성으로 인해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국방획득업무 직위에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한 인원이 일부 보직되어 체계적인 획득전문인력의 관리가 제한되었으며, 획득업무 분야별로 직무특성에 적합한 전문성 개발 목표 및 자격기준도 부재한 상태였다. 또한 방위사업 업무의 특수성(첨단화, 복합화 및 상호연계성)을 고려한 방위사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체계도 미비하였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신설에 발맞추어 방위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할 국방 획득전문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제도, 법, 교육을 연계한 체계

적인 양성 및 보직 관리 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의 추진 동력으로 2006년 방위사업청 연두업무 보고시에는 “획득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이행과제로 선정하였다.

또한 방위사업법령에 “보직자격제”를 법제화하였으며, 청의 비전으로 “2010년까지 전문성 2배 제고”를 설정하고 보직자격제도 시행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청의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획득전문인력의 전문성 제고는 필수적인 요소로서 이를 위한 보직자격제도의 도입은 청 개청 이전부터 정책적으로 논의되어 왔으며, 2006년에는 수차례에 걸친 각 부서 의견수렴 및 선진 획득전문교육기관 방문과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통해 보직자격제도 시행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보직자격제도의 도입은 효율적 방위사업 추진에 필요한 전문성 제고와 보직, 인사 및 각종 교육을 연계하는 총체적인 경력개발제도로서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2. 기본방향

방위사업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직자격제도는 방위사업 전문분야별·직급별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근무경력, 자격 및 학력, 교육훈련)을 설정하여 보직과 교육, 승진을 연계한 분야별 전문가 육성방안으로 방위사업법·시행령에서 명시한 「주요직위」뿐만 아니라 방위사업청 인력 중 업무의 전문성이 필요한 전체 직위에 대해 보직자격제를 적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 전체 직위에 대해 직위별·직급별로 보직자격 기준 적용대상을 설정하여 직위별로는 주요직위, 전문직위, 특수직위, 일반

직위로 구분하였고, 직급별로는 담당급(Level 1), 파트장급(Level 2), 팀장급(Level 3)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직위별·직급별 보직자격 조건은 방위사업법 시행령상에서 명시된 근무경력, 자격증 및 학력, 교육훈련의 3가지 요건을 세부적으로 설정하였으며, 이 3가지 요건을 동시 충족하는 기준으로 강화하여 보직자격 제도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하였다.

전문직위의 경우는 기능 중심으로 직무군을 10개(감사·획득정책·방산정책·분석평가·시험평가·사업관리·기술관리·계약관리·원가관리·표준화관리)로 분류하고 조직 구성원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 직무군별로 보직자격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방위사업청 현재 보임인력의 교육수준 및 여건을 고려하여 2단계로 구분하여 2007년~2009년까지는 1단계로 경과기간 내 보직자격 기준을 이수토록 하고 2단계인 2010년부터 전면적인 보직자격제도를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직자격제도의 핵심 요소인 교육훈련 분야는 청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수요 조사, 해외 선진 획득전문교육기관 벤치마킹, 교육훈련체계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통해 방위사업청 전 직원이 보임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방위사업 공통과정과 전문 분야별로 담당자가 이수해야 하는 전문과정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교육훈련 분야는 2010년부터 보직자격제도를 전면 시행할 수 있도록 청의 교육훈련체계를 수립하고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연도별 방위사업 전문교육 과정 개발, 강의교수, 운영인력 및 교육시설 구비 등의 바쁜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다.

3. 주요 개선사항 및 추진실적

방위사업법 및 시행령상의 “보직자격제” 법제화와 방위사업청의 4대 목표중의 하나인 “전문성 제고”를 달성하기 위해 보직자격제도 시행 기본 계획(안)을 2006년 3월 수립하여 청 직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2006년 9월에 시행 기본계획을 확정하였다.

추진실적으로 보직자격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개청 초 시행을 위한 적용대상으로서 주요직위 보임자 및 자격기준을 방위사업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적용범위와 자격기준을 명시하였다.

현재의 방위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요구하는 보직자격제도의 적용범위 및 자격요건은 개청 초 획득전문인력의 제한으로 방위사업청의 국·부장 및 통합사업관리팀장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보직자격제도의 전면시행을 위하여 보직자격제도 운영 규정 제정안(2007. 2)을 마련하였으며, 청 직원의 의견수렴 및 정책결정 과정을 거쳐 제정 예정이며, 적용대상과 자격기준이 상위 법령과의 상충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법령 개정을 통하여 합법적인 근거를 마련 할 예정이다.

보직자격제도의 전면 시행은 2010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보직자격제도 시행을 위한 인력양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2006년 직무전문교육을 확대 실시하였으며, 2006년 교육실적으로 직무전문과정으로서 사업관리기본과정 등 10개 과정에 670명을 실시하였고, PMP, e-Test 등 On/Off-line 과정에 720여명 등 총 1,390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직무전문교육의 강화와 획득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2007년에도 총 1,150여명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교육기관별로는 청 자체 개설과정으로 방위사업 입문과정 등 8개 과정에 625명, 국방대 개

설과정으로 연구개발관리과정 등 14개 과정에 331명, 정부 및 민간기관 위탁과정에 감사기본 등 11개 과정에 198명을 교육할 예정이다.

4. 향후 정책 추진방향

방위사업 수행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도입된 보직자격제도는 방위사업청 개청 시 주요 목표 중의 하나로 주요직위에 대한 보직자격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방위사업청 전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는 전체 직위에 대한 보직자격제도의 확대시행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며,

보직자격제도의 도입은 국방획득업무의 전문성 확보를 통한 방위사업 수행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방위사업청의 비전 및 목표 달성을 위해 방위사업청 전 직위에 대한 보직자격제도의 확대 적용이 불가피하다.

보직자격제도는 자격 요건의 구비를 위한 인력양성 기간을 고려하여 2010년에 전면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하여 방위사업법 시행령에서 제한하고 있는 적용범위 및 자격기준에 대한 법령 개정과 청 훈령으로서 보직자격제도 운영 규정 제정 및 방위사업청 전체 직위에 대한 보직자격 요건의 설정과 운영체계를 확립할 예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보직자격제도의 체계적인 관리와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체계 구축 등을 보직자격제도의 실질적 운영을 위하여 장기과제로서 보직자격제도의 운영을 담당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하고 교육을 전담하는 획득전문교육원의 설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제4장 인사관리 로드맵 수립

1. 개요

방위사업청이 개청되면서 그 자원이 되는 구성원이 국방부 및 각 부처의 일반직 공무원과 합참·각군·조달본부 군무원 및 군인 등 다양한 신분으로 구성됨에 따라 인력관리에 많은 애로를 겪게 되었다. 이에 투명하고 공정한 조직문화 형성과 성과창출을 위한 종합적 인사관리 로드맵 수립을 통해 방위사업청 전 직원에 대한 예측 가능한 인사모델과 비전 제시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2. 기본방향

방위사업청 인사관리 로드맵은 인사단계별 각 요소인 정원관리·충원·보직·승진(진급)·교육 등이 연계된 종합적 인사체계 구축을 그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구성 요원인 일반직 공무원과 현역 모두에게 공통 적용할 수 있는 균형되고 형평에 맞는 시각의 계획을 더욱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이다.

인사관리 로드맵 수립의 각 요소 중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정원관리 분야이다. 정원관리 분야의 로드맵 수립을 위해 우리나라의 국방획득 환경 분석과 함께 영국·미국·프랑스 등 선진국의 획득인력·조직을 분석하였으며 방위사업청의 인사관리 로드맵은 이 정원관리 분야를 기반으로 각 분야가 상호 연계되고 균형·통합된 시각의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할 것이다.

국방획득 제도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위사업법 공포(2006.1.1) · 방위사업청의 신설로 획득업무의 효율성 추진 · 무기체계 조달의 일원화된 체계 구축
국내과학 기술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과학기술 역량의 발전으로 연구개발능력 확충 · 자체 무기체계 개발 및 보급능력 증가 · 국내 방위산업 수출지원 필요성 증가
국제방산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진국 전략무기 및 첨단정밀 기술 이전 통제강화 · 선진국의 군사혁신으로 인한 최첨단 무기의 국내방산시장 공략 · 국제사회 이념 블록화 붕괴로 무기구매선 다변화
방위산업 투명성 확보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위사업 투명성 제고에 대한 국민적 요구 증가 · 투명한 방위사업 추진 및 정보공개 · 공정한 방산조달 및 생산성 향상이지 확대

☞ 효율적 사업관리, 첨단기술 개발관리, 방산수출 강화, 투명성 확보 등

〈 그림 4-4-1 인사관리 로드맵 수립의 필요성 〉

국 가	명 칭	임무/기능	인원(엔지니어)	집행예산	IPT수
미 국	국방군수 지원본부 등	· 무기체계 획득 · 후속군수지원	132,000명 (40,000명)	-	-
영 국	조달본부, 방산수출지원본부	· 무기체계 획득 · 방산수출지원	5,000명 (1,800명)	9.5조원	70개
프랑스	병기본부	· 무기체계 획득 · 수출지원	18,700명 (8,700명)	10.7조원	80개

※ 영국은 방산수출지원 전담기구(DES0: Defense Export Service Org) 별도 운영

※ 프랑스 병기본부는 항공분야 시험·평가 및 정비인력(참급) 포함

〈 표 4-4-1 주요국 방산 인력 현황 〉

3. 주요 개선사항 및 추진실적

방위사업청의 인사관리 로드맵 수립은 2006.8.24일 이선희 청장의 지

시로 추진되어, 2006.9.28일에 동 로드맵 수립에 대한 계획 보고 후, 12월초 인사관리 로드맵 수립 T/F를 구성, 현재의 초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현재 마련된 초안의 기본 구상은 인적자원의 합리적 활용, 투명·공정한 인사문화 와 성과창출형 조직문화 조성을 통해 효율적인 방위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으로서, 그 대략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정원관리 분야로서, 청의 미션·비전 달성을 위한 조직·정원의 소요 예측에 의해 방위사업청의 중·장기 인력규모를 판단하였고, 이를 통해 방산수출 활성화와 청 업무의 프로세스 개선에 의한 인력의 조정, 방위사업의 전문화 즉 방위사업 업무의 고도화를 기하기 위한 교육훈련 조직의 보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아래와 같이 2020년까지의 정원규모 분석에 의한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구분	2006년		2007년		2010년		2015년		2020년	
	정원	비율	정원	비율	정원	비율	정원	비율	정원	비율
공무원	807	49	826	49	1,032	56	1,386	64	1,740	70
군인	853	51	840	51	818	44	781	36	745	30
계	1,660	100	1,666	100	1,850	100	2,167	100	2,485	100

〈 표 4-4-2 정원 중·장기 로드맵 〉

둘째는 충원관리 분야로서, 청의 역량기반 강화를 위한 우수인력의 지속적 확보와 청 내부자원의 공감대 형성을 통한 합리적 인력충원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와 젊은 우수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는 승진/진급관리 분야로서, 능력과 실적에 따른 성과주의 인사로 공

직경쟁력 제고와 군 획득전문인력에 대한 적정 진급률을 보장한다는 것이며, 이를 위해 투명한 절차에 의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승진심사제를 구축하는 한편 청의 군인 적정진급을 보장과 진급 추천결과를 각 군 진급발표시 인용해 확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과 절차를 정비한다는 계획을 마련하였다.

넷째는 보직관리 분야로서, 청의 짧은 역사로 인해 보직관리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점과 방위사업의 전문화와 효율성을 고려해, 적재적소의 인력배치라는 보직관리의 기본에 충실하면서 정기 순환보직의 시행과 함께 2010년부터 보직자격제의 전면 시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장교의 경우 진급후에는 일정기간 야전지휘관 및 참모 경험을 이수하게 하므로써 야전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효율적인 방위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섯째는 교육훈련 분야로서, 청 직원들이 획득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 축적이 미흡한 점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중·장기 인적자원의 육성 전략의 수립과 함께 핵심가치·인재를 창출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한다는 것이며, 또한 이를 위해 각종 자체 교육훈련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위사업교육원을 신설한다는 것이다.

여섯째는 평가분야로서, 승진심사시 일부 요소로서의 상대직무평가와 혁신점수에 대한 신뢰성·객관성의 부족을 해소하고 평가요소에 성과개념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시스템의 구축과 성과관리 체계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정착시킨다는 것이다.

일곱째는 퇴직관리 분야로서, 군인은 군 조직의 특수성에 의한 조기 전역으로 직업성 보장이 미흡하다는 점과 최근 전역 군인의 취업률이 상당

히 저조하다는 점을 고려해, 우수 군인에 대해서는 재직기간 동안의 경력 등을 고려한 전문성을 활용해 방위산업 전담교육기관의 교수요원 등으로 활용하는 한편 직업보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을 운영한다는 것이다.

4. 향후 정책수립 방향

방위사업청에서는 이번에 마련한 인사관리 로드맵 초안에 대한 객관적 검증과 함께 각 분야에 대해 전문가적인 시각에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외부 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기로 하고, 2007년 3월 13일 전문연구용역기관인 안보경영연구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특히 이 연구용역에 의한 국내외 인사관리 환경과 미래 환경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장래 방위사업청의 중·장기 적정 인력규모를 판단할 예정이며, 이를 기초로 인사단계별 각 요소가 연계된 종합적 인사관리 로드맵을 마련하고 청 전 직원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 후, 시행할 계획이다.



제5편 국방연구개발 및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

제1장 국방연구개발 경쟁력 강화	143
제2장 방산원가 및 계약제도 개선	180
제3장 방산협력 기반 및 수출지원체계 구축	189



제5편

제 5 편 국방연구개발 및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

제1장 국방연구개발 경쟁력 강화

1. 국방과학연구소 역할 재정립

가. 개 요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 1970년 8월 6일 창설 이후 국산무기체계 개발과 자주적 국방기술 확보의 중심축으로서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며 특히 1990년대 이후 함대함유도탄, 무인항공기, 신형자주포, 신형경어뢰 개발 등 첨단무기체계 개발을 통한 전력증강에 획기적인 실적을 쌓아 왔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방위산업의 저변을 보다 확대하고 증가하는 국방 R&D 예산에 효과적으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핵심전력·핵심기술 중심의 체제로 국방과학연구소의 체질을 개선하고 방산업체의 연구개발 역량을 쇄신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어 방위사업청에서는 지난 1년간 국방과학연구소와 방산업체간의 역할 재정립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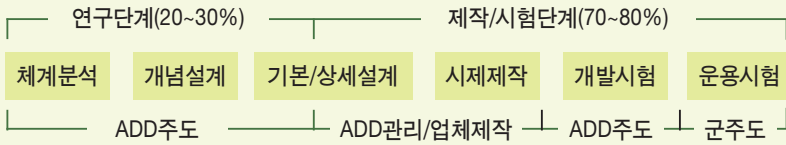
한편, 국방과학연구소는 2500명이나 되는 연구개발 인력을 바탕으로 1970년대에는 견인곡사포, 박격포, 방독면, 군용차량등 주로 기본병기류의 역설계 개발을 주로 수행하여 왔으며 1980년대 이후에는 지대지 유도탄, 다연장 로켓, 장갑차등 선진국 무기의 개량개발을 수행하여왔다. 이를 통해 축적한 기술력으로 국방과학연구소는 1990년대 이후에는 함대함유도탄, 무인항공기, 신형경어뢰, 기본훈련기등 세계수준의 무기를 독자개발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구 분		수행내용
연구 개발	기술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8개 기초연구 및 7개 특화센터 관리, · 30개 응용연구, 19개 시험개발, 20개 선행핵심기술연구 · 국방부투자 25개 민군겸용기술과제 관리
	체계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개 국과연주관 연구개발사업 수행
기술 지원	획득기술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개 획득기술지원 과제
	대군/국방부/청 수시 기술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기체계 소요 기술검토 79건 · 수시기술검토 475건 및 수시대군기술지원 2건 · 부품국산화 타당성 검토 1,019품목 · 적성물자 기술분석 지원 53건, 절충교역 검토 112건 · 국방연구개발정책서 및 국방과학기술조사서 작성지원
	기술용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개 군지원 과제 · 업체자체개발품 시험 등 98건

〈 표 5-1-1 2006년도 국방과학연구소 수행 업무 현황 〉

그러나 선진국과 달리 국방과학연구소라는 단일 연구기관에서 소총개발에서 최첨단무기체계 개발까지 전 분야에 걸친 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라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역량이 지나치게 분산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는 정작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집중해야 할 핵심전력과 핵심기술 분야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었다. 또한 방산업체는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사업에 제작·생산위주로 참여를 함에 따라 업체의 기술혁신과 축적이 미흡하게 되었고 이는 자연적으로 방산업체의 경쟁력이 신장되지 못하는 결과를 만들었다. 즉 국방연구개발을 수행함에 있어서 방산업체는 무엇보다 무기체계 전체를 design하는 능력과 설계능력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하게 되는 문제점을 야기하게 되었다. 참고로 국방과학연구소 주관 연구개발사업에 있어 국방과학연구소와 방산업체간의 기존의 역할분담 체계는 다음과 같다.

○ ADD주관 체계개발사업의 역할분담 체계



〈 그림 5-1-1 ADD주관 체계개발사업의 역할분담 체계 〉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과거에도 1994년 이후 4차례에 걸쳐 업체주관 연구개발사업 확대정책을 시행하여 왔으나, ADD와 업체 주관 사업영역 분담에 대한 제도화 부재로 실질적 업체주관 확대는 미흡한 실정이다.

- 1994.1. 국과연 경영진단 : 국과연을 핵심전력/기술개발 중심 고등연구소화
- 1995.1. 연구개발 기능조정: 장갑차 등 재래식무기는 군관리 업체주도로 전환
- 1998.1. 국방연구개발 제도개선: ADD는 핵심기술중심 연구개발에 집중
- 2001.10. 국방연구개발 체계혁신: ADD는 군전용 핵심기술개발 집중

〈 표 5-1-2 업체주도 확대 및 ADD 역할조정정책 시행 실태(1994-2001) 〉

- 주관형태 분류 현황(2006년 각목명세서) : 2006년 35%에 불과
- ADD주관 : 18개/2,920억원 - 업체주관 : 10개/1,455억원

〈 표 5-1-3 일반무기분야 업체주관 비율 〉

나. 기본방향

방위사업청은 국방연구개발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방

과학연구소는 핵심전력체계 개발에 집중하여 대북 및 대주변국 잠재위협 대비 전쟁을 억제하고 유사시 전략적 응징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 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체제로 체질을 개선하고 반면 방산업체는 핵심전력체계를 지원하는 기반 및 전술무기체계 개발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국방과학연구소와 업체간의 역할을 분담할 예정이다.

다. 주요 개선사항 및 추진실적

방위사업청은 지난 1년간 ‘국방연구개발 혁신방안’을 연구, 수립하여 상부보고를 마쳤으며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국방과학연구소와 업체간의 사업영역을 재정립하였다. 단 업체의 독자개발 능력 확충시기를 고려하여 일반전력은 2010년이후 완전히 업체주관연구개발 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구분	대상 무기	주관
핵심 전력	· 중 · 장거리 감시/정찰체계 · 중장거리 정밀 타격체계 · 전자전, 화생 체계	ADD
일반 전력	· 함정전투체계, 대공방어/대전차유도무기 등	ADD (장기적업체전환)
	· 기동/함정/항공 플랫폼, 통신장비, 단거리레이더, C4체계 등	업체

〈 표 5-1-4 국과연과 업체간 사업영역 재정립 〉

라. 향후 정책 추진방향

방위사업청에서 수립한 국방과학연구소의 역할 재정립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후속조치가 필요하므로 방위사업청에서는 금년중으로 이를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국방과학연구소의 조직을

재편하여 핵심전력에 집중할 수 있는 체제로 개편할 예정이다. 그리고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도록 역할재정립 관련사항을 방위사업관련 법령과 방위사업청 훈령등으로 제도화 하여 향후에도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예정이다.

2. 국방과학기술정보 통합관리체계 구축

가. 개 요

국방과학기술 정보통합관리체계 구축은 기획에서부터 평가에(PPBEES) 이르기까지 무기체계 획득 전과정에 걸쳐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국방획득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방과학기술관리 정책 및 관리체계의 통합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국방과학기술 정보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추진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국방과학기술관리정책 및 관리체계가 부재하였고, 기술관리정책 부재에 따라 국방기술정보수집 및 활용이 미비하고 제한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방예산 낭비와 획득업무의 비효율성을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되고있다.

또한 국방기술수준조사(국내,해외) 정보의 미비에 따라 기술기획, 장기 로드맵의 부실 가능성이 상존하고, 절충교역 관리의 부실이 우려되고 있으며, 국방R&D의 산학연 참여확대 정책에 따른 향후 기술획득 주체의 다양화가 예상됨에 따라 개별기관의 기술정보 수집 및 활용이 용이한 통합적인 국방기술관리체계 구축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제기되고있는 국방과학기술정보관리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업무수행체계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기술정보 관리 업무수행체계 및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고 기술(정보)관리 기획 및 업무에 대한 방위사업청 및 국방기술품질원 내 부서간 업무 수행체계 정비가 필요하다. 즉, 방위사업청 내의 획득기획국, 혁신인사과, 전산정보관리소 및 국방기술품질원 조직과의 관계 정립이다. 그리고 통합사업관리체계, 조함정보체계 및 조달관리정보체계 등 연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국방기술품질원의 국방기술정보센터로서의 기능에 대한 국방관련 각 기관의 인식이 부족하며, 현재 DTiMS 서비스 정보는 국방과학연구소, 국방연구원, 국방기술품질원, 합동참모본부 및 각 군 등이 포함되어 추진하고 있으나 자체 생산한 정보 제공 의지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공급자 위주의 정보관리 체계 개선으로 활용도 제고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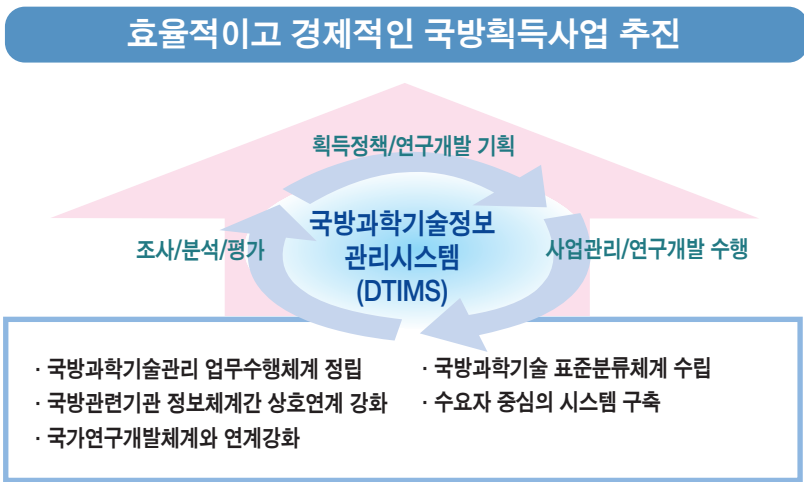
시스템 측면에서는, 획득관련 기관들간의 기술정보관리시스템 연계가 불가능하고 기관별로 정보화체계를 개별 추진하고 있어 전체 국방차원의 정보관리시스템의 체계성 및 통일성이 부족하여 시스템 간 상호 연계가 불가능함으로써 정보 공동 활용을 저해하고 있다. 즉, 기술자료 대부분의 원문 검색기능이 제한되고 절충교역 관련 획득 기술자료의 관리가 미흡한 한편, 방산업체 보유 기술정보에 대한 수집 및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국가 R&D 체계와의 연계 측면에서는 국가(민간)과학기술정보 관리기관과의 업무 협조와 교류가 필요한데 반해, 민간 과학기술정보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국방 R&D사업 추진시 전 국가적 기술역량 활용이 제한되며 보안으로 인한 기술정보공개의 미흡으로 국방분야에 대한 폐쇄적인 인식이 확대되어 민간에서 활용 가능한 기술공개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여 우수 국방과학기술 활용이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NTIS(국가과학기술 정보체계)와 연계가 미비한데, NTIS 사업 착수

이전의 계획수립 단계의 참여로 국방R&D 사업의 특성 반영이 필요하며, 국방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가 부재하여 관련기관별 무기체계의 독자분류로 체계적인 기술정보관리와 교류 및 활용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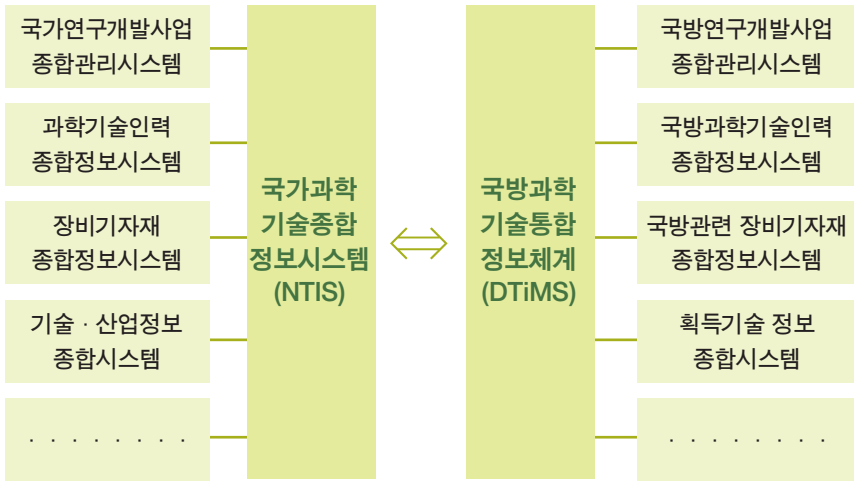
나. 기본방향



〈 그림 5-1-2 국방과학기술정보통합관리체계 구축 방향 〉

국방과학기술 정보통합관리체계 구축의 기본방향은 국방과학기술관리 업무수행체계 정립, 국방관련기관 정보체계간 상호연계 강화, 국가 연구개발체계와 연계 강화, 국방과학기술 표준분류체계 수립, 그리고 수요자 중심의 시스템 구축을 통해 획득정책 및 연구개발 기회, 조사분석평가 그리고 사업 관리 및 연구개발 수행에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국방과학기술 통합정보체계를 국가과학기술정보체계(NTIS)와 연계하여 국방과학기술과 민간 기술 상호간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 그림 5-1-3 NTIS와 DTiMS의 연계 〉

다. 주요 개선사항 및 추진실적

국방과학기술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은 2007년 한 해 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다. 우선 2006. 2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2004년 9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5.7억원을 투자한 기존 국방과학기술 정보관리체계를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06. 8월에는 사업 참여 및 과학기술인력 DB공유 등 국가과학기술정보체계(NTIS) 참여 방안을 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와 협의하였고, 공감대 형성 및 올바른 정책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국방과학기술정보통합관리 방안에 대한 세미나 및 토론회를 총 3회(2006. 9월/11월/12월) 실시하여 관련기관 및 부서의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였다. 특히 2006. 12월에는 방위사업청 차장 및 국방기술품질원장 등이 참석하였다.

또한 2006. 10월에는 국방과학기술정보통합관리 체계 구축 위한 예산을 2008-2012 중기계획에 60여억원을 반영하였고, 2006. 12월부터 2007.

7월까지 정책방향 설정 및 시스템 구축 연구를 위한 정책용역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라. 향후 정책 추진방향

현재까지는 공감대 형성 및 기반을 조성하는 단계였으며, 향후 적극적인 추진으로 그 성과가 가시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향후 정책 추진방향은 우선 경제적인 국방획득사업 추진을 위한 통합적인 국방과학기술관리 정책 및 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수립하되, 수요자 접근 및 활용도 측면에서는 기술관리 정책수립 및 시스템을 구축하며, 국방과학기술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수집 및 관리 업무수행체계 표준화를 통해 국가 기술표준분류표와 연계한 국방과학기술 표준분류체계를 구축하여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과 연계를 추진 할 것이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향후 추진계획은 기존체계(DTiMS) 성능개선을 2007. 4월까지 추진하고 2007. 10월까지는 국방과학기술정보통합관리체계 구축 방안 및 체계개발 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위해서 정책용역 연구(2006.12~2007.7) 및 T/F(2007.3~10) 운영을 병행할 예정이다. 이때 주요연구 과제는 아래와 같다.

- 국방과학기술정보통합관리 정책방향 수립
- 국방과학기술정보의 범주 및 분류 등 관리대상 식별
- 업무수행체계 등 통합관리 체제 구축 방안에 대한 연구
- 국방분야 특허 및 지적소유권 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
- 기술보호(기술수출통제) 및 기술인력정보 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
- 국가 기술표준분류표와 연계한 국방과학기술 표준분류체계 연구
- 수요자중심의 기술정보관리체계 구축방안 및 활용방안 연구

또한, 이에 따른 관련 법령 및 규정개정 추진 및 업무지침서 작성은 2007. 12월까지 추진할 예정이며 국방과학기술 정보통합관리체계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구축할 것이다.

3. 무기체계 내장형S/W 획득 및 관리

가. 개 요

최신 무기체계의 첨단화 및 정밀화 추세에 따라 점차 무기체계는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하는 설계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예를 들면, F-4 전투기 조종석의 경우에는 센서를 통해 획득한 정보를 조종석에 있는 각각의 개별 계기에 분산해서 시현하는 하드웨어 중심의 설계인데 반해, F-16 전투기 조종석은 획득한 정보를 항공기에 내장된 컴퓨터를 통해 처리한 후 통합하여 모니터에 시현하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설계로 발전되었다.

이러한 추세와 함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무기체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무기체계의 성능은 내장된 소프트웨어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표 5-1-5>에서는 각 무기체계 내에서 내장형 소프트웨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F-4에서는 그 비율이 8%정도이나 F-16에서는 45%로 증가했으며 최신의 F-22는 무려 80%에 이르고 있다. 더욱이 무기체계에서 소프트웨어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하드웨어 개조보다는 소프트웨어 개조를 중심으로 하는 방식으로서의 성능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첨단화·정밀화된 무기체계에서의 소프트웨어 비중이 확대되면서 내장형 소프트웨어는 체계 성능보장을 위한 핵심요소가 되고 있으나, 과거에는 소프트웨어를 단순한 구성품으로 보는 하드웨어 중심 사고에서 크

기종	F-4	A-7	F-111	F-15	F-16	B-2	F-22
소프트웨어 비율(기능대비)	8%	10%	20%	30%	45%	65%	80%

〈 표 5-1-5 무기체계 내장형 소프트웨어 비중 〉

게 벗어나지 못하여 내장형 소프트웨어를 효율적으로 획득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 구축 및 관련 전문인력 확보가 미비한 실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언론 등을 통해 내장형 소프트웨어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며 국방차원에서 무기체계 내장형 소프트웨어를 발전시키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02년 1월에는 국방부 획득실에서 「무기/비무기체계 내장형 소프트웨어 개발관리 지침」을 제정하여 내장형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된 기준을 처음으로 정립하였으며, 2006년 1월 방위사업청 개청 이후에는 획득기획국에 내장형 소프트웨어 정책담당 직위와 사업관리본부에 소프트웨어관리팀을 신설하여 정책수립 및 개발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무기체계 소프트웨어의 체계적 개발관리를 위해 국제표준(IEEE-12207) 및 정부표준을 참고하여 전장관리체계 및 내장형 소프트웨어 등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시 적용할 개발표준을 지침으로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다.

나. 기본방향

그 동안 무기체계 내장형 소프트웨어를 효율적으로 획득 및 관리하기

위한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있어왔으나 정책/제도적인 측면보다는 주로 개발관리, 산출물 작성 등과 같은 기술적인 측면에 치우쳐 업무가 추진된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 내장형 소프트웨어 업무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정책/제도/기술 등 제반 고려요소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접근과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2006년도에는 현실태 분석 및 제도개선 소요 도출을 위한 기초연구로 「무기체계 내장형 S/W 획득, 관리 및 재활용 방안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연구결과 도출된 제도개선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관계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추진방안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각각의 추진방안을 토대로 「무기체계 내장형 소프트웨어 종합발전계획 및 로드맵」 작성을 추진하고 있다.

다. 주요 개선사항 및 추진실적

1) 규정 및 지침 정비

지금까지는 무기체계 내장형 소프트웨어 획득시 어떻게 개발을 관리하고, 산출물을 작성할 것인가에 역점을 두고 업무가 추진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과거 국방부 획득실에서는 2002년 1월 미 군사표준인 MIL-STD-498을 참조하여 「무기/비무기체계 내장형 소프트웨어 개발관리 지침」을 제정하여 무기체계 획득시 적용하여 왔다. 그러나, MIL-STD-498은 미군에서도 이미 폐지된 표준으로 현재는 국제표준인 IEEE-12207을 표준으로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방위사업청 개청시 국제표준에 부합된 소프트웨어 개발표준을 정립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를 위하여 방위사업청 개청이후 국제표준 및 정부표준을 참고하여 2006.1.25일자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를 청 지침으로 제정/발령

하였으며, 사업관리본부(소프트웨어관리팀)에서는 지침에서 요구하는 주요 산출물에 대해 구체적인 작성양식을「소프트웨어 산출물 작성 방법」이라는 편람으로 발간하여 각 사업팀 및 국방과학연구소, 방산업체의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에 활용토록 하였다.

2) 중·장기 제도개선사항 도출

개청 이전에는 무기체계 내장형 소프트웨어와 관련되어 개발표준, 개발 비용 산정 등과 관련하여 부분적으로 검토가 진행되어 왔으나 종합적인 추진방안에 대한 검토는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를 위하여 2006년도에는 「무기체계 내장형 S/W 획득, 관리 및 재활용 방안 연구」를 국방대학교에 위탁하여 수행하였으며, 연구에 대한 정책자문 및 검증을 위하여 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그룹을 구성하여 수 회에 걸쳐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또한, 방위사업청 일반직원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 및 업무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직무교육 및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내장형 소프트웨어 획득/관리 발전을 위한 단기 및 중·장기 제도개선 소요를 도출하였다.

3)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무기체계 내장형 소프트웨어 업무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책/제도/기술 관련 전 분야를 포괄할 수 있는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를 위하여 방위사업청에서는 정책연구 보고서를 기초로 무기체계 내

장형 소프트웨어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하여 획득기획국 주관으로 사업관리본부,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등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내장형 소프트웨어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각 참여기관의 임무/기능을 고려하여 기관별로 역점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20대 수행과제를 도출하여 추진하고 있다.

라. 향후 정책 추진방향

무기체계 내장형 소프트웨어에 대한 중요성 인식 및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정책, 조직, 인력, 제도, 기술 등 제반 여건이 미흡한 실정이다. 과거 내장형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에 종속된 부속품으로 취급되어 세부 개발내역을 알 수 없는 “블랙박스”로 획득되었으며 그로 인해 유지보수 단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한 바 있다. 그 동안의 내장형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제도개선은 체계 획득단계 소프트웨어 개발 관리 및 산출물 작성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책/제도/기술 관련 전 분야를 포괄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전반적인 제도개선 소요를 도출하고,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이행방안을 수립하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아직은 시작단계라고 할 수 있다.

향후 정책추진 방향은 정책, 제도, 기술 분야별로 도출된 역점수행과제에 대해 합리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각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1) 합리적인 내장형 소프트웨어 획득 정책 수립

무기체계 내장형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 대비 해외 기술의존도가 높은

실정이다. 원인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지금까지 무기체계가 정부주도의 연구개발이 추진되면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다는 것이다. 국내 내장형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내 업체 참여 기회를 지금보다 확대시켜야 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에는 국내 업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부여, 방산 원가제도 보완 등 국내개발을 촉진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획득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2) 고효율/저비용 내장형 소프트웨어 획득 제도 정립

지금까지 효율적인 소프트웨어 획득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아직은 소프트웨어 개발절차와 산출물을 표준화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무기체계에서의 소프트웨어 비중이 증가하면서 무기체계 획득비용에 있어 소프트웨어 비용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제한된 국방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재사용을 통한 비용절감 및 개발기간 단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하드웨어에 밀접한 내장형 소프트웨어의 특성상 재사용이 제한되었던 측면도 있지만 제도적으로 재사용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미흡하였던 것도 한 원인이다. 따라서, 향후에는 소프트웨어 재사용을 높일 수 있도록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분류체계 정립, 무기체계 유형별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표준화, 컴포넌트 기반의 개발방법론 도입 및 컴포넌트/기술자료의 관리 및 공유를 위한 통합관리체계 구축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3) 내장형 소프트웨어 관련 핵심기술 확보

무기체계 내장형 소프트웨어는 무기체계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기밀로 분류하여 외국으로의 기술이전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무기체계 후발국가에서는 돈을 주고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외국에서 무기를 도입하더라도 소프트웨어는 블랙박스 형태로 확보되어 장비 운용기간 내내 외국 업체에 의존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으며 막대한 외화를 지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내장형 소프트웨어 관련 핵심기술을 단기간에 확보할 수는 없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일정 수준의 기술은 확보가 필요하다. 핵심기술을 확보하여야만 궁극적으로는 국내 개발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에는 소프트웨어의 합리적 기술가치 측정체계 정립, 절충 교역 추진 시 소프트웨어 핵심기술의 우선 확보, 관련 요소기술 도출 및 핵심기술기획서 반영 등 중·장기적으로 내장형 소프트웨어 핵심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4. 모의기반 획득제도(SBA) 추진

가. 개 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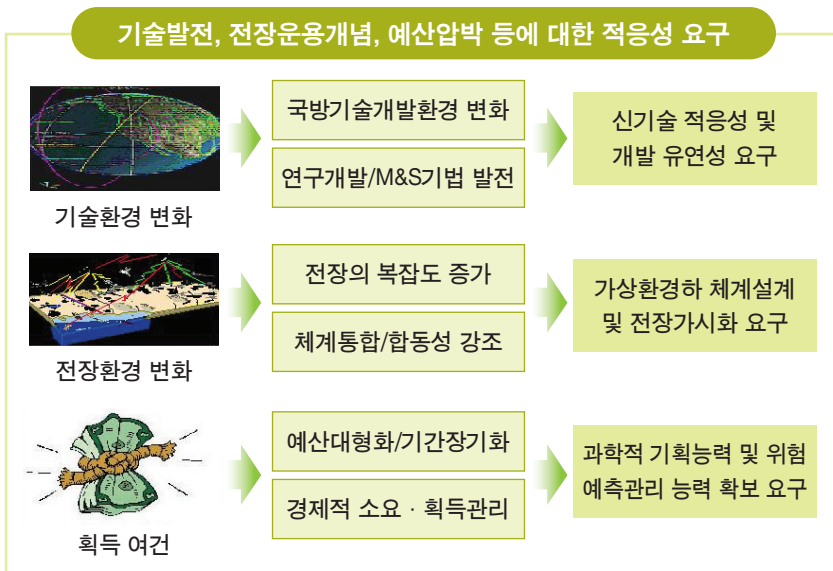
오늘날 국방획득 환경의 변화는 지수함수적으로 발전하는 과학기술의 발전 및 정보통신기술(IT)의 혁명적 수준의 진보를 통하여 우리의 무기체계 획득 패러다임 자체에 대한 극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과학기술의 전쟁이라고 할 만한 국가 간의 기술경쟁 환경에서 더 이상 선진국의 무기체계를 단순 도입하여 운용하는 것을 복합무기체계의 상호통합/합동성이 강조되는 정보전에 적용하기에는 신기술의 적응성이나 기술적 유연성을 제한하여 효과적으로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실정이다.

아울러 무기체계의 첨단/복합화로 소요예산은 규모면에서 대형화되고

있으며, 개발기간의 장기화 및 기술적 통합성 요구에 따른 획득관리의 의사결정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는 더 복잡한 전장환경에서 복합무기체계의 효과적인 통합운용성능을 보장하고 체계개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며, 목표체계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하여 예산의 절감, 개발기간의 단축, 성능의 보장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획기적인 무기체계 획득절차의 과학화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임을 보여주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이러한 시대흐름에 발맞추어 “무기체계 획득의 투명성, 전문성, 효율성,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로 개칭되었으며 더 우수한 무기를 보다 빠르게, 보다 싸게 획득하기 위해 청렴서약제, 보직자격제, 통합사업관리제도 등 다양한 제도개선을 통해 무기체계 획득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 그림 5-1-4 기술발전, 전장운용개념, 예산압박 등에 대한 적응성 요구 〉

특히 다양한 과학적 수단들을 망라한 무기체계 획득의 과학적 절차를 가장 효과적으로 관리 가능하게 해주는 모의기반획득(SBA) 관리제도의 추진은 획득 시스템 측면에서의 제도개선에 크게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모의기반획득(SBA)이란 획득의 모든 수명주기에서 M&S를 활용하여 소요무기체계의 개념 분석으로부터 합리적 대안 결정, 체계개발의 기술적 위험도, 적정 개발기간 및 소요예산의 사전 예측과 개발체계의 가시성을 명확하게 제공하여 무기체계 수요자, 사업관리자, 개발자 모두에게 공통의 개발체계에 대한 관점의 일치와 통일을 제공해 주어 소요요구에 부합되는 좋은 무기체계를 적정 기간 안에 최저의 비용으로 획득 가능케 해주는 새로운 획득관리의 패러다임이라 하겠다.

SBA는 시스템 공학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정의된 “What should be done.”에 대해 “How to do it.”에 대한 명확한 解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즉 절차적으로 수행해야 할 획득 수명주기상의 요구명세에 대해 계량화되고 가시화된 명확한 解를 제공해 줌으로써 체계개발 이전의 모호성과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시스템의 가시성, 예측성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이상적인 획득관리 방법론인 것이다.

SBA는 무기체계 수요자인 소요군과 사업관리자, 개발자에게 더 이상 개발체계를 블랙박스(Black box) 상태가 아닌 대상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화이트 박스(White box) 상태로 관리를 가능하게 해 줌으로써 현행의 Blind 획득관리 체계를 Visual 획득관리 체계로 전환시켜 줄 수 있다.

국방획득절차 과학화를 위한 SBA는 점차 고도화하고 정교화 되어 가는 신규 무기체계 개발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새로운 기술의 적용, 방대한 부품의 조화성, 복잡한 사업관리의 완전성 등을 해결할 수 있는 통합 개발 환경으로 전통적인 수명주기의 절차적 사업관리가 아닌 M&S 기법

들을 활용한 복합 수명주기 관리에 의한 동시공학적인 통합개발 관리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나. 기본방향

획득절차 과학화 『SBA』 추진의 궁극적인 목표는 첨단·복합 무기체계 획득을 위한 과학적이고 통합적인 획득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비용절감, 기간단축, 개발위험 최소화 및 사업효율성을 보장하는데 있다고 하겠다.

오늘날 우리 군의 군사력 건설을 위한 소요창출 및 획득체계는 위협기반에서 능력기반으로 전환하고 있다. 즉, 적의 위협에 대한 대응 무기체계의 소요창출 개념에서 합동성 및 상호운용성을 보장하는 요구능력에 기반한 하향식 소요 우선순위에 의거한 소요결정체계와 획득체계로 전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군사력 건설의 소요체계의 근본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요구능력에 기반한 하향식 소요 우선순위에 의거한 소요 및 획득체계는 검증 및 분석 도구의 지원능력 부재로 여전히 변화에 부합하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모의기반획득(SBA)의 추진은 시의적절한 대안이라 할 수 있으며, 조기에 가시화하여 구축함으로써 선진국 수준의 소요결정체계 및 획득체계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다. 주요 개선사항 및 추진실적

세계 군사선진국들은 오늘날 국방획득환경 변화를 조기에 인식하고 SBA 종합발전계획하에 체계적으로 SBA를 수행해 가고 있으며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국내는 모의기반설계 차원에서

의 연구개발분야는 어느 정도 성숙되어 있으나 국방 SBA 측면에서의 총체적인 정책, 제도, 기술적인 환경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2006년 6월에 “M&S기반 획득(SBA)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SBA추진을 위한 정책적 기틀을 조성하였으며, 국내 M&S 전문가들을 “SBA추진 전문가 자문그룹”으로 통합하여 2006년 6월부터 SBA추진을 위한 각종 정책적, 제도적, 기술적인 접근방법을 모색하였다.

또한, 정책연구과제를 통해 획득단계별 M&S 적용개념 및 지침 정립, M&S기반획득(SBA)을 위한 운영, 체계, 기술구조 정립, SBA를 위한 국방 M&S관련 조직, 제도, 규정 발전(안), 한국군 실정에 부합하는 SBA 모의체계 정립 방안, SBA를 위한 통합지원체계 개발 추진방안, 효과적인 SBA추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발전 방안, SBA추진 종합발전계획 및 로드맵(안) 등의 세부과제를 수행하여 앞으로 국방획득차원의 SBA추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다.

국내의 SBA추진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직 초기단계에 불과하며 단순히 M&S전문가들만의 개선노력으로는 SBA의 정착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방위사업청은 획득기획국을 중심으로 M&S 및 SBA에 대한 전문가 초빙교육을 실시하여 M&S와 SBA의 중요성에 대해 무기체계 획득관리자 및 업무담당자에게 인지도시켰으며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정책품질관리과제로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라. 향후 정책 추진방향

언급된 바와 같이 SBA추진은 초기단계로써 정책적, 제도적, 절차적, 기술적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집결 중에 있으며 향후 정책추진방향은 아래와 같은 4개의 큰 흐름속에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1) 무기체계별, 획득 단계별 M&S의 사용을 위한 제도적 발전

무기체계별, 획득 수명주기 단계별로 소요되는 M&S 수단들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유용성을 증대시키고 사업관리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제도적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요구사항 분석과정에서는 군사적 위협예측, 군사력 건설방향, 전력화 우선순위, 국방과학기술계획 등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M&S 계층구조의 각 단계에서 사용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 체계, 그리고 전술을 모의할 수 있는 다양한 수준의 모델들을 개발하여 활용하여야 하며, 각 무기체계별 설계지원이 가능한 모형확보 및 재사용 환경 구축, 소요분석부터 가상설계, 가상시제개발, 모의시험평가로 이어지는 연계된 활용성을 보장하는 M&S 체계들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을 통해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무기체계 획득절차를 보장해야 한다.

2) SBA 공통지원체계 구축

확보된 M&S 체계, 지식, 교훈 등을 전 획득 참여자가 언제든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SBA 공통지원체계를 조기에 마련하여 획득절차를 과학화하는 기반체계의 조기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현행 가용한 M&S체계를 공학수준에서 전구수준까지 전 M&S 체계 수준별로 식별하고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하며, SBA를 적용하는데 추가로 필요한 모형의 확보를 위해 소요를 개발하고 중장기적으로 획득하는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3) M&S의 발전과 기반기술의 확보

무기체계 획득절차 과학화 『SBA』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M&S의 발전이 전제되어야만 하며, 이를 위한 기반기술의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M&S의 발전이 SBA 추진의 전제가 되고, SBA는 효과적인 획득관리를 가능케하여 무기체계 획득의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성능을 보장하게 해주는 종속성을 가지고 있다 하겠다. 따라서 M&S의 발전은 SBA 추진의 필수요소라 할 수 있으며, 이는 M&S 발전을 위한 기초기술과 기반기술의 개발을 요구하게 된다.

M&S 기반기술로는 전장환경 및 무기체계 모델링 기술, 시뮬레이션을 위한 대용량 고속처리를 위한 정보화기술, 무기체계 효과지수 및 자연환경 파라메타 등의 근원적 연구개발 소요를 수반하고 있다. 이러한 기반기술의 확충은 단기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지혜로운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우선 지금까지 확보된 가용한 기술목록과 데이터를 정비하고 부족한 요소는 추가로 획득 또는 연구소요를 반영하여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추진해 가야 한다.

4) 획득참여자들에 대한 인식전환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SBA 추진과제는 획득절차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획득참여자들의 저항을 극복하는 일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경험과 환경에 익숙한 획득참여자들에게 혁신적인 획득절차 과학화 『SBA』의 적용요구에 대한 저항은 어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획득참여자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과 적용효과에 대한 신념을 가지게 해 주는 것이다. 그 동안 불확실한 상태에서 추진하던 사업수행으로부터 느끼던 사업관리 스트레스, 고민, 불안 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M&S 수단들의 효용성을 이해시키고, 각 획득 참여자들이 M&S가 얼마나 유용한지 인식시키는 일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군사력 건설을 위한 국방 무기체계 획득제도는 관련 법령 정비, 제도개선 등 방위사업청 개청과 함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이제 우수한 조직과 훌륭한 제도의 뒷받침하에 최고의 획득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방위사업청은 최고의 무기체계를 가장 저렴하게 가장 빨리 획득하여 수요자에게 공급함으로써 국가이익에 기여해야 한다. 이를 위해 획득의 투명성, 효율성, 전문성,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하는 절대 명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우수한 조직과 제도만으로 이를 달성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국방획득절차 과학화 『SBA』를 성과있게 추진함으로써 무기체계 획득 요구사항의 타당성을 입증(Verify)하고, 요구설계의 적합성을 증명(Validate)하며, 개발제품의 가치를 보증(Certify)하고, 시험평가 결과를 공인(Accrediate)하는 체계를 조기에 구축하여 국민과 소요군, 획득관리자, 개발자 모두에게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스마트(SMART)한 획득 환경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5. 무기체계간 상호운용성 증진

가. 개 요

미래 네트워크 중심전(NCW) 환경에서 무기체계간 상호운용성 확보는 무기체계 획득단계별로 상호운용성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표준화된 세부 절차와 방법을 구비하고, 개발 진행중에 있거나 야전에서 운용중인 무기체계의 상호운용성 프로파일을 체계적으로 작성·관리하며 무기체계에 적용된 공통데이터를 식별 및 정보기술의 표준화를 통해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제정되어 있는 제반 규정과 지침에 이러한 세부 절차와 방법, 연동대상 무기체계와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제도적 기반이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무기체계간 상호운용성 증진을 위한 기술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차후 연동대상 무기체계와의 상호운용성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주요 무기체계의 상호운용성 프로파일 확보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

수준	속성	절차	응용체계	기반구조	데이터
5 전군 적	b				
	a				
4 도메 인	b			WAN, 국방전산통신망, ATM, Frame relay X.25, FDDI, 라우터, SSL	Oracle 7.1(SQL Plus) RDB모듈
	a				
3 기능 적	c		워드프로세스 스프레드시트 프리젠테이션	LAN TCP/IP UDP/ICMP Ethernet	BMP
	b				
	a	실무지침서			
2 연결	c	MIL-STD-498 국방부대 코드표준 관리지침			
	b		FTP프로그램		
	a	보안절차	FAX	RS-232C PPP, SLIP FTP	
1 불완 전	b	Login제어 DB접근제어		FDD교환 CD-ROM	
	a			모니터, 마우스 키보드, 프린터	

→ 3a

〈 그림 5-1-5 상호운용성 프로파일 (예) 〉

상호운용성 프로파일은 무기체계 상호운용성 수준을 측정·분석할 수 있는 기록문서로써, 무기체계를 구현하는 정보의 속성을 절차(Procedure), 응용체계(Application), 기반구조(Infrastructure), 데이터(Data)로 구분하여 무기체계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 능력을 표현한 것으로 해당 무기체계의 상호운용성 수준은 상호운용성 프로파일의 각 구성항목(P,A,I,D)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결정되며, 상호운용성 프로파일을 통해 무기체계 자체의 상호운용성 수준 및 연동대상 무기체계와의 상호운용성 수준 등을 표현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

나. 기본방향

무기체계간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해 획득단계별로 상호운용성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표준화된 세부 절차와 방법을 구비하고, 연동 및 상호운용 소요가 빈번한 주요 무기체계의 상호운용성 프로파일 작성 및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며, 무기체계에 적용된 각종 정보기술을 국방표준으로 등록하는 등 연동대상 무기체계와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주파수 및 암호장비의 효율적 획득·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다. 주요 개선사항 및 추진실적

무기체계의 표준화된 업무절차를 제공하여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업무 수행체계를 조기정착 시키기 위해 상호운용성 관련 기반기술을 분석하고 각종 규정과 지침을 종합분석하여 무기체계 획득단계에 일관성있게 적용할 수 있는 「상호운용성 및 표준화 관리지침」을 제정하여 무기체계 상호운용성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특히, 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점검목록과 「무기체계 상호운용성 실무지침 가이드」를 작성함으로써 상호운용성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가 각 단계별 상호운용성 관련사항을 체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표준 절차를 규정하였다.

또한, 이러한 상호운용성 관련 기반기술, 제도 및 절차를 방위사업청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상호운용성 업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업무이해도를 증진시켰다.

그리고, 상호운용성 프로파일 구축을 위해 KJCCS 등 24개 주요 무기체계에 대하여 국방과학연구소의 상호운용성 시험평가 체계(SITES¹²⁾)를 활용하여 상호운용성 프로파일을 확보·관리함으로써 상호운용성 관리기반을 구축하고, 주요 무기체계의 상호운용성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한편, 정보기술의 급격한 변화와 무기체계 개발환경에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최근 국방기술구조 (DITA v.4.0)¹³⁾ 개정에 참여하여 국방표준 선정 및 최신 기술동향을 반영하는 등 무기체계 기술의 국방표준 제정을 추진하였다.

또한, KJCCS, MCRC, SAM-X 등 29개 주요 무기체계 사업 43건의 산출물에 대한 검토·조정·통제를 통해 무기체계 획득 전 단계에 대한 상호운용성 의견검토 및 심의 등을 지원함으로써 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확보방안에 대한 검토를 강화하였다.

라. 향후 정책 추진방향

체계간 상호운용성 증진을 위해서 이미 구축된 기술적·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1) 무기체계 상호운용성 프로파일 관리체계 구축

12) SITES : Systems Interoperability Test & Evaluation System, 국과연에서 개발하여 운용중인 상호운용성 시험평가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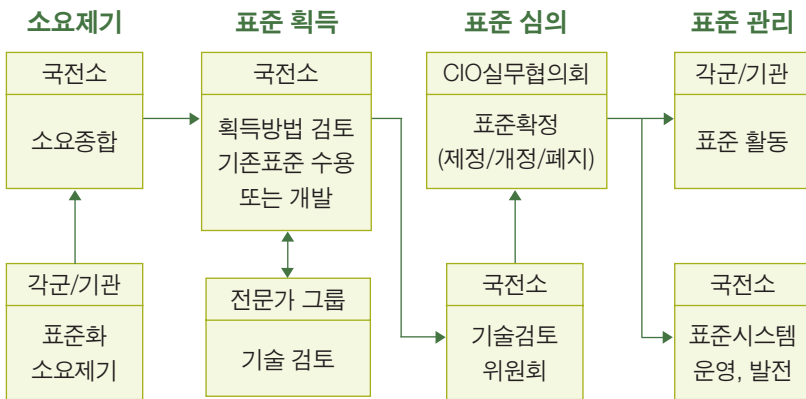
13) DITA 4.0 : Defense Information Technical Architecture Version 4.0, 국방정보체계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표준을 규정할 것. 국방 환경에서 모든 체계들이 상호운용될 수 있도록 관련 표준 및 규정들을 모아놓은 참조모델

이미 확보된 주요 무기체계의 상호운용성 프로파일을 바탕으로 연동대상 무기체계에 대한 상호운용성 프로파일 관리 대상체계의 범위를 확대하고, 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수준 평가 및 검증을 개발종료 후 1회 실시하는 현 상태에서 벗어나 개발 단계별 주요 시점 즉, 획득단계의 전환시, 시스템설계검토(SDR), 상세설계검토(CDR), 개발 및 운용시험평가 종료 후 또는 해당 사업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점 등 획득단계별 3~4회 상호운용성 수준을 반복 측정함으로써 상호운용성 관리의 내실화를 추진해야 한다.

또한, 기 구축되어있는 24개 주요 무기체계의 상호운용성 프로파일에 대한 보완소요를 도출·검토하고 이에 대한 보완을 통해 차후 상호운용성 프로파일 관리체계의 질적 향상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2) 무기체계 적용 정보기술의 국방표준 등록 제정 추진

정보체계 위주 국방기술구조(DITA 4.0)에 대해 무기체계 적용 정보기술의 국방표준 등록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국방부, 국군통신사령



〈 그림 5-1-6 국방표준 등록 절차 〉

부,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등)과의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획득 단계별 무기체계의 정보기술 표준소요를 도출하고, 도출된 소요에 대한 국방표준 등록을 추진할 예정이다.

3) 주파수 및 암호장비의 효율적 획득·관리 체계를 구축

신규 및 기존 무기체계의 주파수와 암호장비의 효율적 획득·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무기체계별 주파수 소요현황을 파악·관리하며, 체계간 주파수 상호연동 및 공유 가능성 등을 분석·검토하며, 소요 주파수의 가용성 분석 및 최적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무기체계별 정보보호 및 암호장비 적용현황을 분석하고, 정보보호 및 암호장비 소요에 대한 검토·조정을 실시하며, 검토결과를 무기체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인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가정보원, 정보통신부 등 다양한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6. 품질보증 및 부품국산화제도 개선

가. 개 요

군수품에 대한 고객의 지속적인 기대품질의 상승과 국방획득제도 개선에 따른 품질보증 인력의 축소 등 변화되는 환경에서는 보다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품질보증 기법을 개발함으로써 고객만족의 품질보증 및 품질경영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절실하게 되었다. 또한 1970년대 방위사업이 태동한 이래로 방산분야 국내 연구개발의 최대 명제는 항상 국산화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국산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무기체계 핵심부품에 대한 고액의 개발비 부담에 따른 업체의 개발참여 기피, 국산화개발 정보체계의 부재에 따른 국산화 대상품목의 식별 곤란 등 무기체계의 국산화 촉진을 저해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책이 없이는 실질적인 국산화율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나. 기본방향

1) 품질보증제도 개선

기존에는 정부 품질보증원이 공정확인과 제품감사를 통한 규격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하는 활동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품질보증 활동은 인력소요가 많고 변화되는 수요군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기존 방식에서 탈피하고 고도의 품질보증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업체의 품질경영능력을 평가하고 활용하기 위한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제도와 군수품의 품질과 관련된 위험(Risk)을 사전에 식별하여 적절한 대비책을 강구하는 “위험도평가(RA ; Risk management)” 기법 등을 적용하여 과학적인 품질보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군수품의 품질에 대한 고객만족도지수(Public-service Customer Satisfaction Index)를 조사하여 군수품에 대한 품질수준이 어느 정도이며, 어떤 품질수준을 가진 제품을 원하는지 분석하여 품질정책에 반영하는 품질보증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2) 부품국산화제도 개선

국산화 개발기술의 저변을 확대하여 미래에 독자적인 무기체계의 잠재적인 개발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자주국방의 초석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산화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경제성을 우선시하였던 기존의 국산화정책에서 탈피하여 정부에서 개발비를 부담하여 기술적 과급효과와 수입대체 효과가 큰 핵심기술부품에 대한 개발이 진행되도록 하고, 중소기업청에서 개발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추진하는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의 부품국산화”의 참여를 확대하여 질적·양적으로 향상된 국산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무기체계의 개발 및 양산단계에서 국산화개발 정보의 부재에 따른 국산화 대상품목의 식별이 곤란하여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부품국산화와 관련된 정보제공이 미흡한 문제점과 획득단계와 운영유지단계의 국산화개발 정보공유가 미흡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무기체계 국산화개발 정보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부품국산화 개발과 연계하여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위사업청만의 고유한 지원정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다. 주요 개선사항 및 추진실적

1) 품질보증제도 개선

가) 양산품 품질보증업무지침 제정

군수품에 대한 고객의 기대품질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점을 감안하여 기존의 품질개념인 규격만족에서 현재와 미래의 품질개념인 고객만족으로의 전환을 시도하는 첫 단계로 양산품 품질보증업무지침(청지침 2006-52호, 2006. 8. 30.)을 제정하였고, 고객의 불만사항을 수집하여 정책 및 생산에 반영(Feed-back)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고객의 소리(VOC)를 최

우선하는 품질문화를 정착시키도록 하였다.

나) 품질불만신고제도 간소화

2006년부터 국방기술품질원 홈페이지를 이용한 “품질정보신고제도”를 시행하여 고객의 불만사항을 좀 더 신속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하였고, 민간분야에서 시행중인 해피콜(Happy-call)제도를 벤치마킹하여 군수품에 대한 사용자불만을 처리 후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확인하여 추후 계획에 반영하는 등 고객으로부터 배우고 고객만족을 실현시키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였으며, 더 나아가 고객의 품질에 대한 요구(Needs)를 품질정책을 수립하는 단계부터 반영하기 위하여 잠재적인 불만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다) 과학적 품질보증 기법 연구

2006년도 국방기술품질원의 개원에 필요한 인력을 기존의 품질보증원에서 일부 충당함에 따라 기존과 동일한 품질보증활동이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과학적인 품질보증 기법을 연구하여 활용하거나 현재까지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면서 축적된 품질보증 지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해 나감으로써 적은 인원으로 최고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새로운 방식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즉, 품질보증원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등의 품질지식을 조직의 지식으로 축적되도록 체계화하고 활용하기 위한 국방기술품질원-지식관리체계(DTaQ-KMS)를 구축하기 위한 개념연구를 완료하고 구체적인 실행을 위한 활동에 착수하였다.

또한 기존의 현장위주의 품질보증활동을 개선하기 위해 업체의 자체적인 품질보증능력을 판단하는 기법 중 하나인 품질지수(QNI ; Quality numerical index)의 연구와 위험도평가를 통한 취약공정 또는 취약품목

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한 위험도평가(RA : Risk assessment)기법을 도입하기 위한 자료수집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2) 부품국산화제도 개선

가) 부품국산화 업무구분 및 지침 제정

방위사업청 출범 이후에 국방부에서 제정하여 적용하던 “군용물자부품 개발관리규정”을 폐지하고 획득방법에 따라 비무기체계에 대해서는 “국방전력발전업무규정”과 무기체계에 대해서는 “개발 및 양산단계의 부품국산화 지침(청지침 제2006-67호, 2006.12.29개정)”을 적용하여 국산화 업무가 진행되도록 업무를 구분하였다.

나) 개청 이후 주요개선사항

첫째, 국산화 재개발 대상품목 선정기준이 국산화율 30%이하로 한정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대상품목 선정기준을 70%(국산화 인증기준)수준으로 확대하여 국산화 개발대상을 대폭 확대하였다.

둘째,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개발 및 양산단계에서의 체계부품 국산화 계획이 사업건별로 개발계약서에 반영됨으로써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점을 체계국산화제도를 도입하여 효과적인 관리와 부품국산화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일반부품 국산화개발 추진시 단일 업체에만 비공개로 개발 승인하여 타 업체의 개발참여가 제한된 문제점을 개발대상 품목을 연 2회(4월, 10월) 일반에 공개함으로써 희망하는 모든 업체의 개발참여가 가능하게 되어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넷째, 중소기업청과 2006. 7. 25일 협약을 체결하여 중소기업청 예산을 중소기업 제품개발 비용으로 지원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의 부품국산화개발사업”을 추진하였고, 이와 관련된 규정인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의 부품 국산화 개발 지침”(청 지침 제 2006-58호, 2006.9.29)을 제정하여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과 판로 확보에 도움을 주고 경영안정과 고용안정에 기여토록 하였다.

다섯째, 부품국산화 제도개선을 위해 “무기체계 획득방법별 수명주기별 국산화 촉진방안에 관한 연구(안보경영연구원, 2006.12)”를 정책용역 과제화하여 추진함으로써 향후 정책수립에 중요한 자료를 확보하였다.

라. 향후 정책 추진방향

1) 품질보증제도 개선

군수품 품질에 대한 가장 객관적인 척도인 고객만족도 지수(Public-service Customer Satisfaction Index-기획예산처에서 2004년에 개발한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평가모델)를 2006년 80점에서 2010년까지 85점 이상 수준으로 향상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지속적인 고객의 요구사항(Needs)을 파악하여 군수품 품질정책에 반영하는 등 주변상황의 변화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양산품 품질보증업무지침을 지속적으로 개정하여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그리고, 수요군의 불만사항을 효과적으로 수집, 분석하여 개발 및 양산 단계로 환류시키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2007년도에 정책연구과제로 추진할 것을 제안할 예정이다.

또한 과학적인 품질보증을 수행하기 위해 국방기술품질원 주관으로 품

질지식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2007~2008년에 관련 지식의 축적과 전담 추진조직 신설 및 일부 기초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며, 2010년 까지 업무 프로세스와 연결하고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검색하여 실무에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선진화된 품질보증 기법인 품질지수(QNI)와 위험도평가(RA)를 연구하여 국내에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여 정부 품질보증활동을 선택적·집중적으로 수행하여 효과적인 업무가 수행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2) 부품국산화제도 개선

핵심부품 국산화 촉진을 위한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이전까지 핵심부품 개발비용 및 개발실패에 대한 부담과 개발 후 경제성 결여, 선진국의 핵심기술 이전기피 등으로 업체의 개발의지를 저해시키는 요인을 제거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핵심부품의 개발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에서 부담하는 방안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국산화 정보체계 개발사업을 국방기술품질원 주관으로 2008. 4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국산화개발의 촉진과 연계한 방위사업청의 실질적인 중소기업지원책을 구축하기 위해 새로운 국산화 정책을 수립 중에 있으며,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을 확대하여 중소기업이 부품국산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07년도에 부품 조기단종에 대비한 국산화추진 정책방안에 관한 연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군, 국방기술품질원, 업체의 정보공유 및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노력으로 군수운영체계의 원활한 운영에 도

움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7. 국방연구개발 기획문서체계 개선

가. 개 요

기존 국방연구개발 기획문서체계에서는 국방연구개발정책서가 핵심기술위주로 작성됨으로서 국가과학기술과 연계하여 미래 핵심전력체계의 국내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소요와 방향을 제시하고, 국방중기계획의 방향 및 기준을 제공하기에는 제한됨으로 인해 국방연구개발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문서체계의 정립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법(제30조)에 의거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국방부)을 구현하고, MS/JSOP(합동참모본부) 등에 수록된 무기체계의 연구개발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는 기획문서(매년, F+3~F+17)로서 국방연구개발 기획서(부록:핵심기술기획서)를 작성하였다.

문 서 명		내 용
1991년이후	국방중장기획득개발계획서(계획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 무기체계로 결정된 사업의 목록 ○ 작성주기: 매년 ○ 대상기간: F+2~F+16년 ※ 중기계획 대상기간과 동일하여 기획문서로 활용 제한
1997년이후	국방획득개발계획서(계획문서)	
2002년이후	국방연구개발계획서(계획문서)	
2004년이후	국방연구개발정책서 (기획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기술개발 로드맵 수립 ○ 무기체계/핵심기술개발과제 목록 ○ 작성주기: 3년 (매년 수정본 발간) ○ 대상기간: F+3~F+17년

〈 표 5-1-6 국방연구개발분야 기획문서 체계 작성 경과 〉

나. 기본방향

국방과학기술정책을 근거로 무기체계 발전추세와 국방연구개발 환경을 고려하여 국방 연구개발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무기체계 분야별로 수요가 결정된 무기체계와 미래에 예상되는 무기체계의 연구개발 방향과 발전 로드맵을 수립하여, 첨단 무기체계의 독자개발을 위한 이정표를 제공할 계획이다.

그리고, 무기체계 분야별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기술 분석을 통해 국가과학기술 연구개발계획과 연계된 기술확보 방안을 제시하고, 합동군사 전략목표기획서에 반영되었거나 신규로 수요가 결정된 무기체계에 대한 연구개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방중기계획 작성을 위한 근거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국방과학기술 인력양성, 시설 및 장비 등의 기반확충, 기술정보관리체계 구축, 산학연 참여 활성화 및 국방연구개발사업의 과학화 기법 적용 등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국방중기계획 작성을 위한 근거를 제공하고 국방연구개발의 전문성, 효율성 향상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틀을 제공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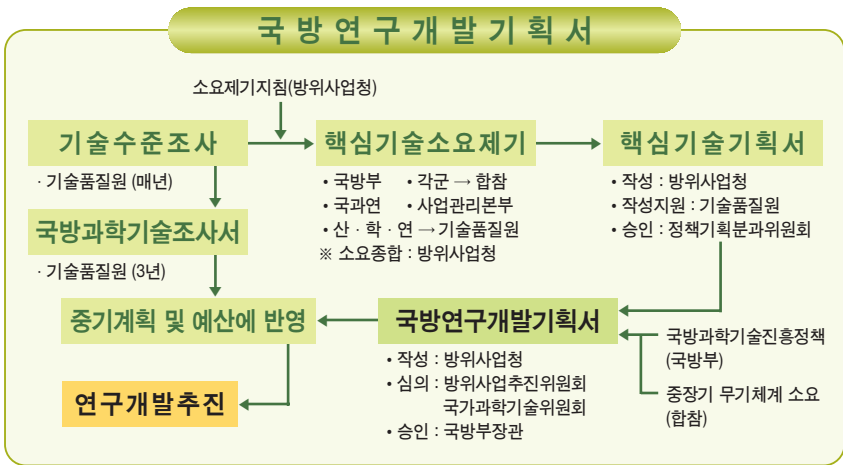
한편, 무기체계별 소요기술 분석과 확보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무기체계 소요결정이후 초기통합사업관리팀에서 수행하는 선행연구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문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다. 주요 개선사항 및 추진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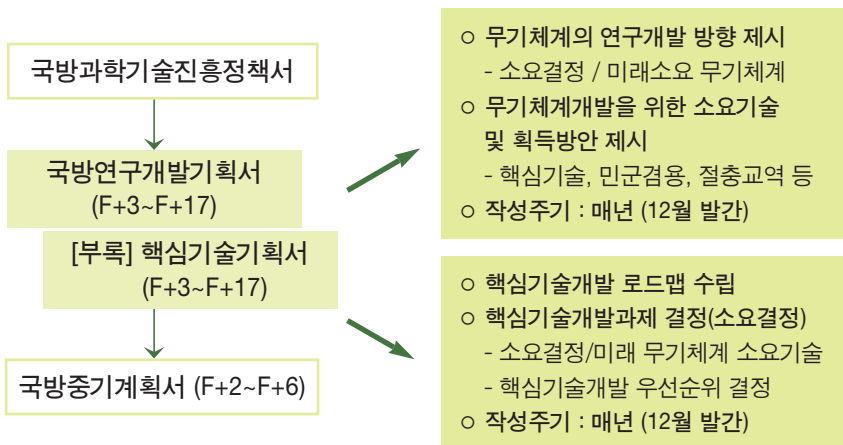
국방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체계적인 기획문서 작성절차 정립을 위하여 관련 법령·규정에 의거 국방기획관리 문서체계 범위안에서 국방연구개발

발기회에 관한 문서인 2009~2023 국방연구개발기획서(부록:핵심기술기획서)를 발간하였다.

이를 위하여 문서작성 지원기관 및 산학연 핵심기술 소요요청 기관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국방기술품질원으로 변경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국가과학기술체계와의 중복방지 및 연계성 강화를 도



〈 그림 5-1-7 국방연구개발기획서 작성 체계 〉



〈 그림 5-1-8 국방연구개발 기획체계 정립 〉

모하였으며, 무기체계개발과 기술개발의 연계성 확보를 위하여 무기체계 소요기술의 다양한 확보방안을 국방연구개발기획서에서 제시하였다.

라. 향후 정책 추진방향

2009~2023 국방연구개발기획서(부록:핵심기술기획서)는 국방과학기술 진흥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기획문서로서, 2006년도에 최초로 작성되어 기본적인 문서작성의 틀을 제공하는 데 그 의의가 있으며, 문서 내용은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향후 국방연구개발 기획문서 작성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 기관/문서별로 상이한 무기체계별 기술분류체계를 정립하고, 둘째, 국가과학기술발전방향과 연계된 국방과학기술 확보방안(절충교역, 민군겸용 등)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며, 셋째, 획득/연구인력, 시험장 확보, 기술관리체계 등의 국방과학기술 기반조성을 위한 중장기 발전 로드맵을 수립할 것이다.

제2장 방산원가 및 계약제도 개선

1. 개 요

방산원가 및 계약관련 제도는 1974년 도입 이래 수차례 개정을 통하여 문제점이 보완되어 왔으나, 방산업체의 자발적 원가절감 노력과 연구개발 촉진을 강조하는 정부와 원가 절감 노력에 대한 대가 및 적정이윤 보상을 요구하는 방산업체의 불만족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 특히, 금번에는 방위산업의 육성·발전과 방산업체의 수출촉진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방산원가 및 계약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였다.

2. 기본방향

제도개선의 기본방향은 방위산업의 육성·발전과 방산물자 수출촉진을 통한 방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실발생 원가 인정 및 적정이윤을 보장하고, 생산성 향상 및 경영노력을 유발하기 위하여 이윤의 차등 지급 방안을 모색하며, 방산수출 물량에 대한 고정비를 보전함은 물론 원가자료 검증체계를 개선하여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감소하고 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며, 원가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원가절감보상 계약 범위를 확대하는 것 등이다.

금번 방산원가 및 계약제도개선 내용은 3년여에 걸친 연구기관의 연구와 관련기관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통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3개 관련규칙(국방부령)을 개정하였고, 세부 집행내용을 담은 6개 지침(방위사업청 훈령)을 제정하여 규칙 공포와 동시에 2006년 11월 1일부로 시행하였다.

3. 주요 개선사항 및 추진실적

가. 광고선전비 원가 인정

광고선전비는 기존 국내조달 위주의 환경하에서는 방산물자 생산·조달에 관련없는 비용으로 인식되어 원가성을 불인정하였으나 국내 방산물자 조달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제 방산시장으로의 진출과 자발적·적극적인 방산수출활동을 통한 수출증대를 위하여 방산물자 특성상

단순한 기업 및 제품 이미지 광고비는 제외하되 정부가 인정(후원, 인정, 요청)하는 직접적인 경비는 원가(일반관리비)로 인정토록 하였다.

나. 수출물량에 대한 고정비 보전

기존 방산물자 수출관련 비용은 전용시설 감가상각비만 제한적(1997 : 75% → 2000 : 100%)으로 인정하여 왔으나 방산물자의 수출 경쟁력 확보를 통한 방산기반 확충과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간접노무비 및 일반관리비 등 수출물량에 대한 고정비(간접노무비 전체, 일반관리비 중 급여)를 원가보전 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방산물자 수출 촉진을 위한 제비를 산정 지침”(방위사업청 훈령)을 별도로 제정하여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다. 중소기업 일반관리비 상한 2% 상향 조정

일반관리비의 합리적 통제를 위하여 일반관리비의 상한제도(업종별 5~8%)를 운영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 보다 일반관리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대기업 평균 : 5.44%, 중소기업 : 11.18%), 상장제조업의 평균비용 이하로 보상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일반관리비에 대한 원가보상의 현실화와 중소기업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기준에 의한 중소기업에 한하여 업종별 일반관리비율 한도를 현재보다 2% 상향 조정하였다.

라. 퇴직급여 한도 개선

퇴직급여는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을 합한 총급여액에 12분의 1이상 ~ 8분의 1이하의 범위내에서 퇴직급여를 인정해 왔으나, 방산물자는 숙련공을 필요로 하는 첨단 과학기술 장비가 대부분으로 장기근속 생산근로

자의 안정적 근무보장을 위한 보험가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에 대한 원가보상 범위의 확대·적용할 필요에 따라「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퇴직보험등에 가입한 경우에는 8분의 1을 초과하여 추가 인정 하되, 해당업체의 퇴직급여설정금액 범위내로 하였다. 이를 통하여 방산 업체 종사자의 안정적 근무와 복지개선을 도모하고 방산물자 원가 현실화로 방산업체 경영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마. 방산원가 전산자료 활용 및 증빙 절차 간소화

대형무기에 대한 구매계약 증가로 원가계산서 증빙자료(수입면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영수증 등)의 복사제출 및 관리에 많은 시간과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있고, 대부분 방산업체는 전산 회계시스템 운용하고 있는 기업환경을 감안할 때 증빙서류 확인절차 간소화로 비용절감 및 조달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하여 원가자료에 대한 표본 확인제도를 도입하였고, 정보화 기반 확대를 활용한 원가관련 전산 출력자료도 증빙자료로 인정토록 하였다.

바. 방산전용시설 확인절차 개선

방위산업 전용시설 확인기관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 계약담당 공무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고 있는 현실에서 확인업무의 체계적이고 공정한 수행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방산전용시설에 대한 확인업무를 기술적인 지식을 갖추고 생산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방기술품질원으로 일원화하였다.

사. 이윤제도 개선

1) 투하자본 이윤 보상 방법 개선

투자자본 대상 중 토지는 기간경과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는 타 유형자산과는 달리 매년 동일하게 보상하는 불합리성을 내재하고 있고, 타인자본보상율(9%)과 자기자본보상율(12%)이 고정되어 있어 자본비용의 실질을 미반영하는 있으므로, 적절한 수준의 기회비용 보상으로 설비투자를 촉진하고 실질 자본비용의 변동효과가 반영된 적정 수준의 기회비용을 보상하기 위하여 토지보상은 다른 투자자본과의 차이를 반영하여 낮은 보상율을 적용(70%)하고, 타인자본은 실질 차입이자율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실세금리(3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 수익률 중 BBB+과 ,BBB0의 수익률을 산술평균)와 연동하여 산정하도록 개선하였다.

2) 계약수행노력 보상 방법 개선

계약수행노력의 동기부여를 위한 이윤제도의 개선 필요성과 단순한 현행 이윤보상기준에 대한 대외 비판 확산에 따라 이윤반영 요소를 확대하고 사업형태별 위험도에 대한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이윤보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 계약수행노력 보상비율을 축소(원가요소별 보상 X 0.6)하고 사업형태별 발생위험 빈도를 고려한 기술적 위험보상(연구개발) 초도/후속양산·정비)기술도입)을 보완하였다.

3) 업체별 경영노력 보상 방법 개선

기존 이윤제도에서는 계약업체의 전반적인 원가절감 및 생산성 향상노력 등에 대한 보상체계가 미비하고 업체노력을 평가 및 유인할 수 있는 정책수단의 부족에 따라 모든 방산업체에 대해 3개년 제비율 및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원가절감, 경영노력 등 12개 항목을 종합평가하여 평가결과를 기초로 보상액 산정하도록 신설하였다. 이를 통하여 업체에 원가절감 유인을 제공하고, 다양한 경영노력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윤 항목 (현행)	이윤 항목 (개정)
I. 투하자본보상 - 계약의 완성을 위하여 투자한 자산에 대한 기회비용보상 - 일괄보상율 적용 (타인자본 9%, 자기자본 12%)	I. 투하자본보상 - 자본보상율 산정시 실세금리 반영 · 자기자본 13%로 1% 상향 · 타인자본 실세금리 반영 - 토지가격 차등보상(70%)
II. 계약수행노력보상 - 원가요소별로 수행노력이 반영된다는 가정하에 요소별 보상 - 원가요소별 보상	II. 계약수행노력보상 - 기본보상(원가요소별 보상) X 조정계수(0.6) - 기술적 위험보상(사업형태별 위험보상)
III. 업체별 경영노력 보상 - 신 설	III. 업체별 경영노력 보상 - 업체별 생산관리, 원가절감, 경영노력에 대한 평가결과에 의한 보상 - 총원가 X 보상율 (평가점수 환산율 : 2.0% ~ 4.5%)

〈 표 5-2-1 이윤제도 주요개선사항 〉

아. 중도확정계약 정산시점 명시

3~5년 이상의 장기/대형 중도확정계약의 경우 계약금액은 중도확정시기를 기준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중도확정시기에 관한 정의가 다소 불명확하여 계약기간이 거의 종료되는 시점에 계약이 확정됨으로써 일반개산계약과 유사하게 운용되고 있는바, 정산시점에 대한 기준 제시로 중도확정계약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계약 이행중 계약물량의 100분의 50을 생산하기 전 또는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경과하기 전의 기간으로 명시하였다.

자. 원가절감보상계약 인정범위 확대

기존 계약제도는 원가절감이 예견되는 경우에만 계약담당공무원이 원가절감보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원가절감이 발생한 경우에도 동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계약 체결 범위를 확대하였다.

차. 방위산업 착수금 사용시점 명시

현재 계약담당공무원이 착수금을 지급한 후 사용계획 기간을 경과하면 계약상대자에게 착수금의 잔액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 사용계획 기간의 경과시점과 관련하여 해석상 논란이 있는바,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착수금 지급일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하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착수금 미사용 시점을 명확히 하고, 착수금의 반환청구시 가산하는 약정이자 상당액을 금융기관의 어음대출금리수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던 것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맞추어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였다.

4. 향후 정책 추진방향

가. 방산원가제도

방위사업청이 개청 되면서 2006년도에 방산원가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규칙을 개정하여 광고선전비 일부 원가인정, 수출물량에 대한 간접비 보전, 퇴직보험료 원가인정, 중소기업 일반관리비 상향 인정 및 원가산정 증빙절차 간소화 등을 반영하였으나 광고선전비 및 수출물량에

대한 간접비 등은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방산원가제도의 기본 취지인 실발생원가 보상에는 미치지 못하는 현실이다.

방산 수출촉진 활동비 및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실발생 비용 보상차원에서 적극적·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방산물자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원가산정 방법 개선을 위하여 합정사업 등 특수한 사업의 원가적용 방법이 재검토 되어야 하고 연구개발 제품에 대한 원가산정기준 선정과 국산화 제품 및 원가절감 노력에 대한 보상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무기체계 발전추세에 따라 무기체계 내장형 S/W에 대한 원가산정 방법 및 기준설정이 필요하고 나아가 제조물책임보험 원가인정여부도 심층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방위산업 기반확충과 방산물자 수출촉진을 위한 추가적인 보완조치도 필요하다.

나. 방산이윤제도

이윤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규칙개정을 통하여 토지에 대한 보상율을 100%에서 70%로 낮추고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의 보상율을 현실화 하였으며 업체별 경영노력 차등보상 방안을 도입하는 등 노력을 하였으나 본질적인 문제해결에는 미흡하였다. 방산이윤제도의 문제점은 방산 업체와 해당사업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 및 계약수행노력 정도에 따른 차등 정도가 미흡하고 투하자본의 개념과 토지에 대한 보상성격이 모호하다.

또한 이윤율 상하한 제도가 인위적·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분야별, 업체별, 업종별 특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윤율에 대한 인식이 영업이익의 관점에서 출발하므로 업체가동을 등의 주변여건 고려가 미

흡하고 총원가를 모수로 이윤산정이 이루어지고 있어 본질적으로 업체의 자발적인 국산화 연구개발 및 원가절감노력을 유인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방산업체와 해당사업의 특성을 반영하고 위험도를 반영한 차등보상 구조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고, 투하자본보상액은 비용보상 성격이므로 상하한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야 할 것이며 토지는 투하자본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방안도 재검토해야 한다.

또한 적정이윤도 확보할 수 있도록 업체 이윤을 영업이익이 아닌 경상이익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등 방산이윤제도 전반을 손질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중·장기적으로 분야별, 업종별 이윤율 도입방안 및 상·하한을 폐지 등 이윤제도를 단순화 할 필요가 있으며 투하자본에 대한 보상개념 재정립 및 연구개발제품과 용역에 대한 이윤보상 방법 및 기준선정과 원가계산 및 제비율 자료의 현실화를 위해 업체와 정부 간 실시간으로 자료 공유가 가능하도록 원가관련 S/W 프로그램 개발 보급 문제도 신중하게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다. 방산계약제도

현행 계약제도의 문제점은 원가절감을 유인할 수 있는 계약유형의 활용 실적이 저조하고 일괄계약과 분리계약이 계약담당자의 주관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계약부서에서 지나치게 확정계약을 선호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유인부계약제도로써 유인부확정계약과 유인부정산계약이 있음에도 활용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목표원가산정 능력이 미흡하여 (조직/인

력/시간 및 비용 포함) 계약가 산정의 위험이 다소라도 있을 경우에는 정산형계약을 하고, 계약가 산정의 위험이 거의 없을 경우에만 확정형 계약을 하고 있으며 원가절감보상 계약도 유인부계약과 마찬가지로 원가절감 성과 입증 및 목표원가 합의 곤란 등의 사유로 계약자 쌍방이 계약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위산업계약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서는 목표원가의 관용범위 설정 및 유인부계약을 통합하는 방안의 검토와 원가절감보상계약 절차 간소화와 함께 유인이익의 지급기간을 연장하고 계약유형의 사용기준과 일괄계약과 분리계약 적용기준을 명확히 제시해야 할 것이다.

제3장 방산협력 기반 및 수출지원체계 구축

1. 방위산업기반 고도화 추진

가. 개 요

국내 방위산업은 1970년대 국·내외 안보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자주국방건설 목표 아래 근현대화계획 및 전력증강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수단으로 육성·발전하여 왔다.

구체적으로, 전문화·계열화 제도, 방산물자 및 업체 지정제도, 방위산업육성기금, 계약·원가·조세 특례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온 결과 우리 방위산업은, 2006년 85개 업체에서 1,364개 품목의 방산물자를 생산·공급하는 한편, 세계에서 12번째로 초음속항공기를 생산하고, 동 항공기의 수출을 추진하는 등 괄목한 만한 성장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보호주의적인 육성정책의 지속적 추진으로 상당한 수준의 제조 능력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분야 핵심기술수준은 선진국 대비 67%(2004년 기준), 2005년 기준 방산업체 평균 가동률 57.6%, 총매출액중 방산부문 비중 7.8%, 총매출액 중 수출비중이 약 5% 수준에 머무는 등 산업전반의 경쟁력이 취약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그 동안 독점적 수요자인 정부(군)가 방위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적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하기 보다는, 군수품의 차질없는 생산과 납품을 위한 단순한 조달원 관리 측면에서 지속하여 온 보호주의적 정책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더 심각한 점은 이와 같이 국내 방위산업의 낮은 경쟁력이 곳곳에서 감지됨에도 불구하고, 방위산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한 원인분석 활동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방위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제도개선 및 정책수립을 위한 선행단계로서 방위산업기반 조사분석을 통한 실태파악과 원인분석이 필요하며, 이러한 산업기반 조사 및 평가활동을 시스템화하여 지속적인 평가를 통한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토대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나. 기본방향

방산업체들의 생산성 및 기술력 제고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정 경쟁체제를 도입하되 동시에 국가안보 인프라라는 방위산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방위산업기반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분석 및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적인 지원 및 육성정책 추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

다. 주요 개선사항 및 추진실적

1) 연구개발 분야 경쟁체제 도입 토대 마련

방위사업청의 개청과 함께 제정된 방위사업법에서 전문화/계열화 제도를 폐지키로 확정하되, 다만 그 시기를 2009년 1월로 유예함으로써 갑작스런 제도변화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단계적인 경쟁기반 구축을 위해 우선 현행 전문화/계열화 물자에 대한 지정업체를 확대하였다. 구체적으로 2005년말부터 업체 평가작업을 거쳐 2006. 7월 전문화 4개업체, 계열화 4개 업체 등 6개분야에 총 8개 업체를 추가 지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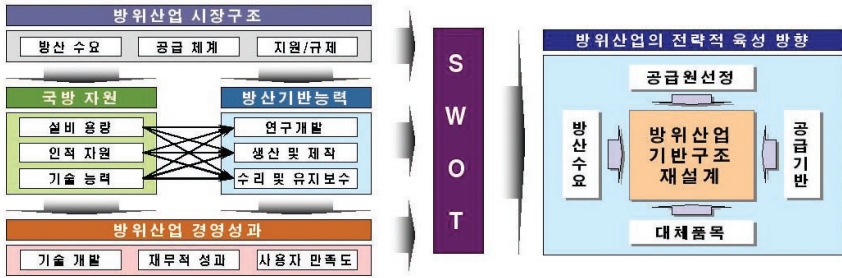
분야	전 문 화			계 열 화					
	통신 전자	광학	화생방	항공				유도	합정
				VHF 무전기	통신제어 장치	탐재송수 신장치	비행조정 장치	탄두	동력전달 장치
기존 업체수	2	1	2	1	1	1	1	1	1
추가 업체수	1	3	1	1	1	1	1	1	1

〈 표 5-3-1 전문화·계열화 업체 지정 현황 〉

2) 방위산업기반 조사분석 체계 구축

국내 최초로 방위산업기반조사 모형을 구축하여, 방위산업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를 통해 효과적인 방위산업 발전방향과 전략적 육성정책 수립의 토대를 구축하였다.

방산기반조사란 공급체계의 구성, 국방자산의 소유 및 운용현황, 주요 분야와 기능별 산업기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 평가하는 작업으로, 2006년 7월부터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모형을 개발하고 12월까지 동 모형을 적용하여 개략적인 기반조사를 실시하였다.



〈 그림 5-3-1 방산기반조사 및 활용체계 〉

2006년 조사는 방산기반조사 체계 구축에 따른 최초의 조사활동임을 감안하여 방위산업에 대한 개괄적인 수요 및 공급능력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기동, 탄약 등 일부분야에 대해서는 동 모형에 따라 세부적인 설비 현황, 협력생산현황 등을 분석하였다.

(방산기반조사분석 보고서 KIDA 발간)

라. 향후 정책 추진방향

1) 적정경쟁 기본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전문화/계열화 제도 폐지에 따라 원칙적으로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경쟁 체제가 도입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방위산업이 국가안보산업이라는 특성 상 지나친 경쟁에 의한 비효율을 방지함과 동시에 대기업에 의한 산업구조 왜곡현상 방지를 위한 국가의 적정 개입은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009년 본격적인 경쟁체제 도입에 앞서 금년 내에 사업조정 제도의 구체화를 통해 중소기업 보호 및 지나친 중복투자 방지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방산업체간의 불공정거래행위 방지를 위해 관련 제도를 구체화하여 공정경쟁체제가 유지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완비할 것이다.

2) 방위산업기반 조사/평가 지속 및 방위산업기반 고도화 유도

2006년 시행한 방위산업기반 조사분석 경험을 토대로, 2007년 상반기 중 기반조사 및 평가체계를 일부 보완하여 최종 분석 및 평가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세부방산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동 기반조사분석 및 평가활동은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하여 방위산업 실태에 대한 종합적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바탕한 유효한 정책을 발굴함으로써 방위산업의 지속적 경쟁력 제고를 유도할 것이다.

특히, 산업기반 조사평가는 방위산업의 설비합리화와 각 업체의 공급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요소 및 지원사항 발굴에 중점을 둘 것이며, 동 조사평가에 바탕한 각종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중장기적으로 방산분야 전문기업 육성 및 방위산업 전반의 산업기반 고도화를 유도하는 등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이 되도록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2. 방산업체와의 파트너십 제고

가. 개 요

방위사업청은 출범이후 고객인 방산업체와의 파트너십을 제고하고 방위산업 추진의 동반자로서 상호 토론을 통한 방위산업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하여 방산정책 토론회 및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방산현장의 생생한 소리를 직접 듣고 고객에게 다가가는 서비스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지역별 순회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방산업체와의 거리를 좁히고 상호 협력 발전관계를 강화하였다.

나. 기본방향

과거 방산업체 대표 중심의 정례적이고 의례적인 간담회 방식을 지양하고 방산업체가 실질적으로 궁금해하는 사항과 정책추진 방향을 상세히 설명하고 정책담당자와 방산업체간 거리를 좁혀 관심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방산정책 추진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부와 방산업체간 일방적·수직적 관계가 아닌 쌍방향 의사소통에 의한 파트너쉽 형성과 미래지향적인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방위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방산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다. 주요개선사항 및 추진실적

1) 방산진흥 정책토론회 및 간담회 개최

청 출범에 따라 방산업체들이 궁금해 하면서도 관심과 기대를 크게 나타내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방산업체를 초청하여 방위사업법 제정에 따른 제도개선사항과 새롭게 출범한 방위사업청의 방산정책 추진방향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2006. 3)

특히, 본 토론회에서는 정책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방위사업청의 정책담당자와 방산업체간 거리를 좁혀 관심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토론이 가능하도록 업체의 실무담당자를 초청하여 소규모로 그룹을 편성하고 4개의 소주제(연구개발 및 시험평가/방산진흥 및 수출증대/계약관리/사

업관리)로 나누어 실질적인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방위사업청 출범에 따른 궁금증과 불안감을 해소하고 주요 관심분야에 직접 참여하게 함으로써 방위산업 발전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과 비전을 제시하였다.

2) 지역별 순회간담회 개최

방산업체의 생산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눈으로 보고 실질적인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업체별 세부 애로사항 청취 및 개선방안 모색을 위하여 지역별 순회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방산진흥국장 주재로 대구/구미지역 6개업체(2006.6.19) 간담회, 울산/경주지역 6개업체 간담회(2006.6.20)를 개최하고 부산/창원지역 31개업체에 대한 간담회를 차장주재로 경남 창원에서 개최하였다(2006.7.6).

3) 방산정책 토론회 개최

연초 사업설명회에 이어 연말에 사업추진 성과를 설명하고 차년도 사업계획을 설명함으로써 정책파트너인 방산업체에 대한 만족도 및 신뢰도를 제고하고 현 방위산업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에 대하여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2006.12.20).

이날 토론회는 방위산업체에 대한 노고 치하 및 사기를 진작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우수방산업체에 대해 표창을 실시하고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2007년 사업계획을 설명한 후 방위산업 육성발전방안에 대하여 한국국방연구원의 연구결과 발표와 토론 순으로 진행하였다.

우수방산업체로 표창받은 업체는 방산수출분야의 삼성테크윈(장관표창), 이오시스템(청장표창), 연구개발분야의 테크(장관표창), 로템(청장표창), 경영혁신분야의 도담시스템스(장관표창) 두산중공업(청장표창),

품질관리분야의 동명중공업(청장표창)이 표창을 받았고 방산보안분야 우수업체로 대한항공과 강남이 장관표창을 받았다.

청은 2006년도 1년간 추진해온 방위산업 관련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계획을 정책관련분야, 사업관리분야, 계약관리분야로 나누어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먼저 방산정책 관련 주요업무 추진현황으로 방산원가 및 계약제도 개선사항, 이차보전사업 추진, 전문화·계열화제도 정비, 무기체계 소개, 통합방산전시회 준비 및 추진계획 등을 설명하였고 특히, 2007년도 방산수출 진흥활동 계획을 지역별·건별로 상세히 설명하였다.

사업관리분야에서는 2006년도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 및 사업추진성과를 분석하고 2007년도 사업추진 지침과 주요사업 추진일정 등을 설명하였다. 또한 계약관리분야에서는 2006년도 조달집행 실적 및 국산화 우선구매 강화 등 제도개선내용과 2007년도 경상사업 조달계획을 설명하였다.



〈 그림 5-3-2 방산정책 토론회 / 2006.12.20 〉

이처럼 사업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과 집행실적 및 계획의 설명은 과거 방위사업청으로 통합되기 전 국방부, 조달본부, 각 군 사업단 등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 졌던 것을 한 장소에서 통합하여 실시함으로써 방위사업청 개청으로 인한 통합 시너지 효과를 업체들로 하여금 충분히 실감케 하는 자리였다.

라. 향후 추진방향

청은 이와 같이 정책파트너인 방산업체 등과의 토론회를 활성화하여 방산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일선 방위산업 현장에서 습득한 경험과 노하우를 함께 공유하며 업체의 정책조언과 고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방산업체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방위산업 발전을 통한 자주국방 달성 및 국가발전이라는 공동목표 달성을 위한 동반자로서의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3. 방산수출시장 개척 활동 및 국내 방산전시회 통합

가. 개 요

방산수출시장 개척은 정부 및 업체가 파트너십을 발휘하여 국제 방산전시회 참가 및 방산수출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 국가를 중심으로 방산물자 설명회를 개최하여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국내에서 분산 개최하고 있는 전시회는 통합하여 명실공히 국제적 위상을 굳건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토록 추진하고 있다.

나. 기본방향

방산수출시장 개척 활동은 국제 전시회 및 시장개척이 필요한 국가에 대해 공세적으로 방산홍보 및 마케팅 추진할 수 있도록 국가·품목별 시장분석을 통하여 수요를 확인하고, 정부·업체가 비즈니스 차원에서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제도 및 인식을 전환시키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전시회 참가비용을 원가에 보상 및 시장개척 활동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 육·해·공 방산전시회는 주최, 시기 및 장소가 분산 개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과도한 비용지출로 업체의 불만을 야기시켜 왔고, 그 규모 또한 세계적 수준에 비해 극히 영세하여 국가 경제력과 방위산업 경쟁력을 과시할 수 있는 국제적 규모의 통합 방산전시회 개최가 계속 요구되어 왔다. 따라서 방위사업청은 향후 10년 이내 아시아지역 대표 방산전시회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나아갈 예정이다.

다. 주요 개선사항 및 추진실적

2006년 국제 방산전시회는 인도 등 5개 전시회에 참가 하였으며, 알제리·이집트, 중남미 등 5개 지역에서 VIP 등 고위급 인사에 의한 수출시장 개척활동이 활발히 진행 되었다. 특히 2007. 1. 8~14까지 방위사업청장은 미국 출장을 통하여 T-50 대미 수출 등의 방산협력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방산수출 지원활동을 위하여 2002년부터 국방부에서 추진되어 온 수출물자에 대한 원가반영제도를 2006. 11. 1일부 공포하여 적용하게 되었으며, 특히 2006년에는 방산수출 지원활동을 위한 국고보조금으로 20억원을 반영하여 운용하였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육·해·공 3개 방산전시회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행사명	주최 (Host)	주관 (Organizer)	시기	장소	시작년도	참가업체수	전시면적 (sqm)
Defense Asia (2006)	육군본부 충청남도	COEX COTES	짝수년 10월	계룡대	2003	67개社 국내34 국외33	3,141
국제 해양방위산업 전시회 (2005)	해군본부 부산시 한국무역협회	경영전람 BEXCO	홀수년 10월	부산 BEXCO	2001	115개社 국내66 국외49	8,000 (야외포함 26,446)
한국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05)	항우진 방진회 KOTRA	항우진 방진회 KOTRA	홀수년 10월	서울공항	1996	225개社 국내72 국외153	12,000 (야외포함 51,000)

〈 표 5-3-2 방산전시회 현황 〉

한편, 국제적 규모의 방산전시회로의 발전 요구(인니 전시회 : 30개국 355개 업체 참가)로 국내 육·해·공군 주관으로 추진되는 방산전시회는 2005년 말 “국내개최 방산전시회 발전방안”에 대해 정책연구과제로 선정 추진한 바 있으며, 2006. 6월 정책연구과제 결과에 대한 장관보고시 통합전시회 추진 지시가 하달되어 추진중에 있다.



〈 그림 5-3-3 방산협력활동 〉

라. 향후 정책 추진방향

금년에는 5개 국제 방산전시회에 한국관을 구성하여 참가하고, 정부는 참가업체를 지원할 예정이다.

구분	IDEF	파리에어쇼	IDEX	MSPO	DEFENSE
국가	터키	프랑스	UAE	폴란드	태국
일정	5월	6월	2월	9월	11월
참가대표	청장	차장	국장	국장	국장

〈 표 5-3-3 국제 방산전시회 일정 〉

또한, 방산수출이 중점적으로 추진될 4개권역에 대한 시장개척 활동을 추진 예정이다.

구분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CIS
국가	페루, 콜롬비, 멕시코	오만, 사우디	남아공, 보스와나, 모로코	카자흐스탄
일정	3월	2월	7월	11월
참가대표	차장	국장	국장	국장

〈 표 5-3-4 방산수출시장개척 활동계획 〉

국내 방산전시회 통합 추진은 3월 중으로 장관보고 및 정책결정이 이루어진 연후에 4~5월간 통합방산전시회 개최준비 T/F 및 공동운영본부를 구성하여 통합방산전시회 기본계획을 작성하고, 2008년 까지 통합방산전시회 준비 및 T/F 인력을 확대 하여 2009년 제 1회 통합방산전시회 개최를 목표로 추진될 것이다.

4. 정부간 방산협력 활동 강화

가. 개 요

방산수출은 그 특성상 정부 대 정부간의 내실있는 방산협력 기반의 구축없이 업체 단독으로 사업을 성사시킨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우며 따라서 정부는 업체의 마케팅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방산협력 MOU체결, 방산군수공동위 개최 등을 통해 방산수출 증대를 도모하고 있다.

나. 기본방향

연간 균형 있는 방산군수공동위 회의를 개최하고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공동위시에는 업체 대표가 직접 참석하여 업체가 해당국과의 방산협력을 추진함에 있어 발생하는 애로·건의사항 및 홍보 등을 직접 수행함으로써 방산협력효과를 극대화 하고, 준비단계에서는 발전적이고 적극적인 의제발굴을 위하여 각군, 파견무관, 산하기관 및 업체 등 관련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하고 있으며, 회의 종료 후에는 회의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체계 유지 및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강화 등을 통해 회의성과를 극대화시켜야 한다.

이러한 방산군수공동위원회 회의는 양국간 체결된 협정 및 MOU지침에 의거 매년 또는 격년제로 추진하기로 되어있으며 이러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아국 방산업체가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도록 주요 방산수출 대상국가를 중심으로 방산·군수협력협정 체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아가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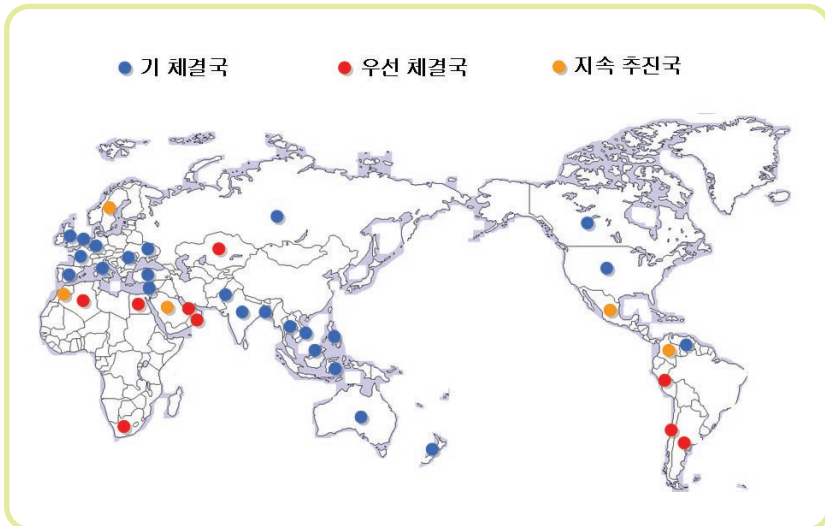
다. 주요 개선사항 및 추진실적

2006년 방산·군수 협력 협정은 파키스탄, 우크라이나 2개국과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존 22개국을 포함 24개국과 체결을 완료하고 지속적

으로 그 국가를 확대하여 나아가고 있다. 2006년 방산·군수공동위원회는 영국, 프랑스 등 11개국과 추진하여 양국과 업체간에 있는 산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장으로 활용하였다.

구 분	국 가
기체결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시아(10개국) : 뉴질랜드, 말련, 베트남, 인니, 태국, 방글라데시, 필리핀, 호주, 인도, 파키스탄 · 유럽(6개국) :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스페인, 영국, 이태리 · 러시아·CIS(3개국) : 러시아,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 중동/북미/남미(5개국) : 터키, 이스라엘 / 미국, 캐나다 / 베네수엘라
우선 체결대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자흐스탄, 칠레, 페루, 알젠틴, 알제리, 이집트, 오만, 남아공, UAE 등 9개국
지속 체결대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콜롬비아, 멕시코, 사우디, 스웨덴, 모로코 등 5개국

〈 표 5-3-5 2006년 방산군수협력 〉



〈 그림 5-3-4 방산군수협력 현황 〉

라. 향후 정책 추진방향

금년도에 계획된 방산·군수협력 공동위 회의는 국내 13개국, 국외 4개국이 계획되어 연중 균형되게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방산·군수협력 협정은 한·칠레, 한·남아공이 계획되어 있다.

5. 방산수출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센터 설치

가. 개 요

국제방산시장은 냉전종식 이후 각국의 방위산업 유지를 위해 방산수출 시장으로의 정책을 전환하는 등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시작에 불과한 우리의 방산수출 전망을 더욱더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방산수출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범정부 차원의 방산수출 협력체계 및 수출전담 조직의 확대는 불요불급한 사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무기체계의 전력화 및 해외구매 위주로 획득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방산수출에 대한 관심은 물론 핵심기술 부족으로 수출 가능 무기체계 또한 제한되었으나 방위사업청 개청과 더불어 방산수출은 방위산업 기반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대두됨에 따라 방산수출 소요 창출을 위해서 범정부 차원의 협력체계가 절실하게 되었다.

방산수출은 우리의 경우처럼 세계 각국이 공히 장기적인 기간이 소요되고, 각국의 정치적 사정에 따라 의사결정에 있어 다양한 정책적 고려사항이 지배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사업규모는 통상적으로 대규모로 추진되어 국민적인 관심 하에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군사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장비로서 상호운용성이 고려되지 않는다면 작전의 한계를 갖게 됨으로써 일단 채택된 장비는 지속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등의 방산수출 특수성으로 인하여 통치권 차원의 관심과 범정부적 차원의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수출 대상국가들은 절충교역으로 대응구매, 기술이전, 현지투자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수출품에 대한 엄격한 품질보증 및 후속군수지원 보장을 기반으로 획득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단순히 국방분야에 한정되어 추진되던 과거와는 달리 경제 및 과학기술을 포함한 국가 전 산업분야의 동참을 요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처가 필수적 요소로 대두되었다.

한국은 현재 방산수출을 위해 1개과(국제협력과, 16명) 규모로 국제협력 및 방산수출 지원업무를 전담하여 국제 방산협력회의, 방산전시회, 시장개척 활동 등 행정업무 수행에도 어려움을 겪을 만큼 열악한 방산수출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반면 주요 방산선진국은 충분한 전담인력 및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방산선진국들은 현재 군사비 증가비율 감소추세에 따라 자국의 방위 산업 유지를 위하여 국가차원의 방산수출 지원시스템 강화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국제협력국에 160명, 영국은 방산수출지원국에 600명, 이스라엘은 대외군사지원·수출국에 120명을 방산수출 전담인력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방산수출은 기본적으로 수출정보 교환, 사업발굴 등 정부와 업체간 공동마케팅 활동이 원활히 수행되지 않고는 절대적으로 국제 경쟁력에서 성공적 기반을 확보할 수 없어 치밀한 시장분석 및 전략수립이 방산수출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기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또한 시급한 실정이다.

나. 기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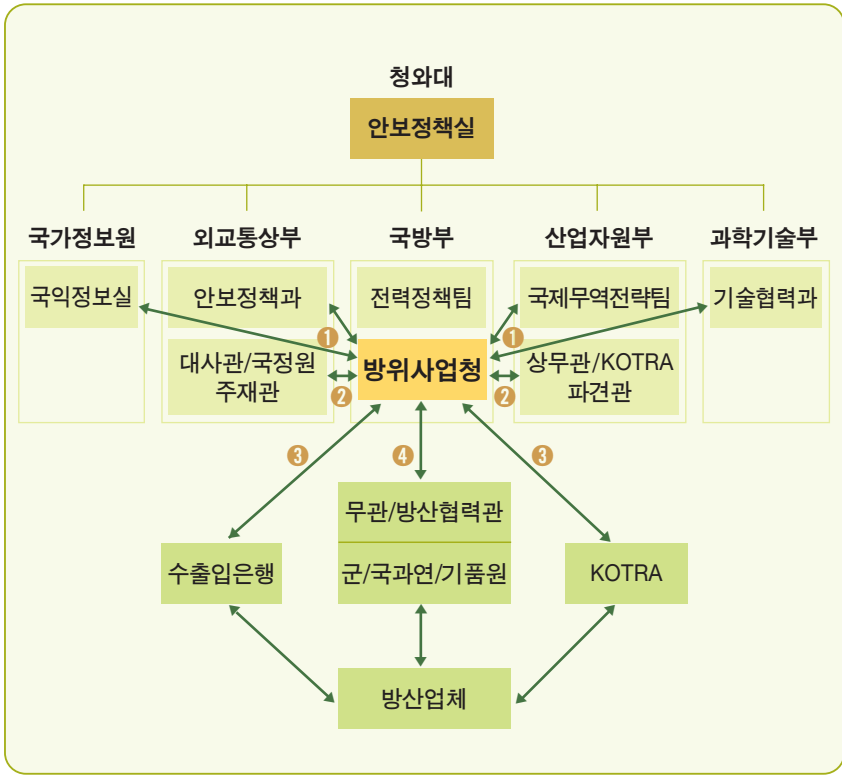
방산수출은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우선 통치권차원에서 청와대 주도하에 국방부, 외교부, 산자부 등 주요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차원의 방산수출 협의체를 구성하고 국가별, 품목별로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협의체 운영을 위해 관련부처 국장 및 과장급이 참여하는 다양한 협의채널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방산수출 전담조직의 단계적 확대를 통하여 방산선진국인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규모의 방산수출 지원조직 편성이 되어야 한다.

다. 주요 개선사항 및 추진실적

방위사업청은 지난 8~12월간 방산수출 활성화를 위해 「방산수출 활성화를 위한 시장분석 및 전략수립」제하의 정책연구과제를 채택 추진하여, 국가별 품목별 시장조사 분석 및 수출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범정부 적인 방산수출 네트워킹 구축 및 수출전담조직 구성을 위한 지원센터 설치(안)을 작성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범정부적 방산수출 네트워크 구축(안)은 아래와 같다.

- 명칭(가칭) : 방산수출진흥공동위원회(방산통합 T/F)
- 위 원 장 : 청와대 안보정책실
- 위 원 : 관련부처 국장급(방위사업청 방산진흥국장 간사)
- 실무위원 : 방위사업청(방산정책과, 국제협력과), 산자부(국제무역전략팀), 국정원 (국익정보실), 외교부(안보정책과), 과기부(기술협력과), 국방부(전력정책팀, 무관운영과)
- 운영방안
 - 분기별 정례적인 위원회 개최, 방위사업청 건의로 협의안건 발굴
 - 주요 사안별로 실무위원간 수시협조 병행 추진(수시 개최)



〈 그림 5-3-5 방산 수출네트워크 개념도 〉

방산수출 전담조직은 단계적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우선, 정부 대 정부 간 후속군수지원보장 시스템 구축(예: FMS) 등 방산수출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과수준의 방산수출 지원조직을 마련하고 2단계로 국가별 수출 전략 수립 및 유망품목 발굴, 수출시장 정보시스템 운영 및 방산수출 컨설팅 등 방산업체의 수출활동을 전사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수출지원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며 3단계로 방산선진국 규모의 수출전담조직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이와 병행하여 국가간 수출입 통제품목, 수출신고 방법 및 방산업체의 수출입을 통제·지원하는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운영도 병행하여 구축할 예정이다.

라. 향후 정책 추진방향

금년에는 전략기획단의 추진과 병행하여 후속군수지원을 보장할 수 있는 지원조직을 마련할 예정이다. 2단계로 추진되는 수출지원센터(가칭 방산수출진흥원)는 2009년을 목표로 설립할 예정에 있다. 이를 위해 2007년에는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2008년에는 소요예산 확보 및 관련부처 협의를 통하여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이며, 그 조직 및 구성(안)은 아래 <표>와 같다.

세부조직	담당업무	소요인력
기획부 (6명)	· 수출유망품목 발굴, 시장조사보고서 발간	2명
	· 품목별/국가별 수출추진 전략 수립	2명
	· 수출시장정보시스템(DB) 구축/운영	2명
마케팅부 (12명)	· 마케팅 및 전시회 참가 등 홍보 지원 - 북미/서유럽, 중동, 동남아, 중남미, 동유럽, 아프리카 등 6개 권역	12명 (권역당 2명)
해외협력부 (6명)	· 도태/노후/잉여물자 대외이전 업무	2명
	· 국가별 상호구매/방산기술협력 지원	2명
	· 방산 수출품 품질보증/후속지원	2명
서비스센터 (6명)	· 수출(예비)승인 및 국제입찰 참가 지원	2명
	· 국내 관련부처간 협력 및 대미동의 지원	2명
	· 업체간/국가간 대외 인사교류 지원	2명

< 표 5-3-6 방산수출 지원조직 구성 및 소요인력(案) >

방산선진국 수준의 규모로는 2015년까지 확대할 예정으로 최소한 이스라엘 규모로 추진할 예정이며, 방산 수출입 지원 시스템 구축은 2008년 내로 방위사업청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병행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Q & A

Q 국방기술 기획과정에서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국방과학연구소(ADD)가 배제된 것은 연구개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할 수 없는 것으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A 국방기술기획업무는 방위사업청이 출범하기 이전인 2005년 까지는 ADD에서 전담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무기체계 개발자인 ADD가 국방과학기술기획을 독점하게 됨에 따라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기술기획이 이루어지지 않고 개발자(ADD)가 개발하기 쉬운 기술들을 중심으로 기술기획이 이루어지는 문제점과 연구개발하는 기관인 ADD가 기획, 개발, 분석, 평가를 함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문제점이 대두되어 국방 기술품질원 기술기획단으로 2006년 이관되게 되었습니다.

과기부 산하기관인 KISTEP에서도 과거 기술기획과 사업관리업무를 함께 수행하였으나 역시 동일한 문제가 대두되어 사업관리 업무는 과학재단으로 2005년 이관되었습니다. 즉, 연구개발 기관과 기술기획 및 평가기관을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가 R&D체계에 있어서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부처	국과위,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방위사업청
기술 기획	한국과학기술 기획평가원 (KISTEP)	한국산업기술 평가원 (ITEP)	정보통신연구진흥원 (IITA)	국방기술 품질원 (DTaQ)
연구 개발	한국과학기술 연구원 항공우주연구원 해양연구원 등	생산기술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화학연구원 등	전자통신연구원 국가보안기술 연구소 전파연구소 등	국방과학 연구소 관련 산·학·연

Q & A

※ KISTEP은 1999년 2월, ITEP은 1999년 3월, IITA는 1999년 1월에 R&D기관에서 분리되었으며 국방분야(국방기술품질원)은 민간부분보다 7년 늦게 분리

또한 국방기술품질원으로 기술기획기능이 이관되었다는 것이 국방기술품질원품원이 기술기획을 독점하고 ADD를 배제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국방과학기술기획은 방위사업청 획득기획국의 통제하에 핵심기술기획팀에서 수행하게 되고 핵심기술 기획팀에는 당연히 ADD의 전문가가 참석해서 기술기획작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국방기술기획기능의 이관으로 인해 ADD가 기술기획으로부터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기술기획에 국방기술품질원, ADD, 각군 등이 참여하여 보다 혁신적인 기술기획이 이루어지게 한 것에 제도개선의 중심이 있습니다.

Q & A

Q 국방연구개발업무의 조정과 통제를 국방부에서 방위사업청으로 이관하는 것은 연구개발의 효율적 수행을 저해하는 것이 아닌가요?

A 방위사업청은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인사와 예산의 독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ADD는 100%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방위사업청에서 예산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예산 출연의 타당성,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결산 심사등을 방위사업청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즉 국방연구개발업무의 조정과 통제업무가 방위사업청으로 이관된 것은 방위사업청의 개청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후속조치입니다.

연구개발하는 과학자의 입장에서 보면 연구개발의 효율성 문제는 정부관료가 과학자들을 규제적인 행정을 통해 규율하지 않고 연구개발의 환경을 조성하여 과학자들로 하여금 연구개발의 여건과 자율성을 얼마나 보장하고 있는냐의 문제이지 통제기관이 어느 기관에 있느냐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방위사업청은 개청이후 연구개발의 자율성과 여건 보장을 위해 ADD 주관사업의 경우 보다 많은 자율성을 부여함은 물론 ADD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www.dapa.go.kr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